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

심혜인

2020. 4.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

심혜인

2020. 4.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

심혜인 부연구위원

이 보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kpfis.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발간 보고서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이 향후 재정관리시스템 개선과 재정운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02-6908-8581 ✉ analysis@kpfis.or.kr

요 약

1. 서론

- 본 연구에서는 dBrain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체계적인 재정집행의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 재정집행의 관리란 재정당국이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기금,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관리하는 것
 - － 기존의 재정집행에 관한 선행연구는 제도적 맥락 등에 초점을 맞춘 사례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으로 집행관리 정보를 활용한 분석은 매우 드뭄
 - － 본고에서는 주요 재정사업의 과거 집행정보를 통해 집행 특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방향 모색
- 이를 위해 201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 점검 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추이와 유형별 집행 특성을 분석함
 - 주요 관리대상사업이란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하는 사업 등은 제외한 주요 사업비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세부사업 기준으로 집계하여 분석
 - － 집행 특성을 측정하는 데에는 월별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의 두 가지 지표를 사용
 - －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2018년 기준의 분석 결과 값임
 - 유형별 분석에서는 집행형태에 따라 반기별 집중집행형, 연중 균등집행형, 일회성 집행형 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당국의 반기별 중점관리 목표에 따라 상반기 조기집행 관리 및 하반기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성을 분석
 - － 이 때, 각 유형별 집행실적이 전체 집행실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유형별 집행률에 각각의 예산 규모 비중을 가중치로 곱한 집행 기여도 개념을 활용

2. 재정집행 관리 및 현황

- 정부는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와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매월 회의를 통해 집행실적을 점검·관리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의 집행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정집행을 관리하며, 매월 집행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상황을 점검함
 - － 집행관리점검회의는 주로 상반기에는 재정조기집행 상황을 파악 및 독려하고, 하반기에는 집행률 제고(이월·불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운영됨
 - － 정부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점검·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포괄 범위는 45개 중앙행정기관, 39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비로서, 인건비 및 경비성 지출이나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과 같이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되는 사업은 제외
 -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예산 규모는 2019년 기준 250.4조원으로 총지출 규모(469.6조원) 대비 53.3%, 공공기관을 포함한 주요 관리대상사업 규모(291.9조원) 대비 86.5%에 해당¹⁾
 - － 예산 규모의 총지출 대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총지출 규모의 67.6% 수준에서 이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다 2016년 일부 의무지출 사업 등이 관리대상 범위에서 제외된 이후 소폭 감소
 - － 2018년 기준 총지출에서 기초연금 등 복지분야 급여성 지출(약 7%), 인건비, 경비성 지출, 보전금 등 비목(약 17%),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과 계정성기금(약 18%) 등을 제외하면, 분석의 대상이 된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관리해야 하는 지출의 대부분에 해당

1) 2020년 본예산 기준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예산 규모는 262.0조원으로 총지출 규모(512.3조원) 대비 51.1%, 공공기관을 포함한 주요 관리대상사업 규모(305.5조원) 대비 85.8%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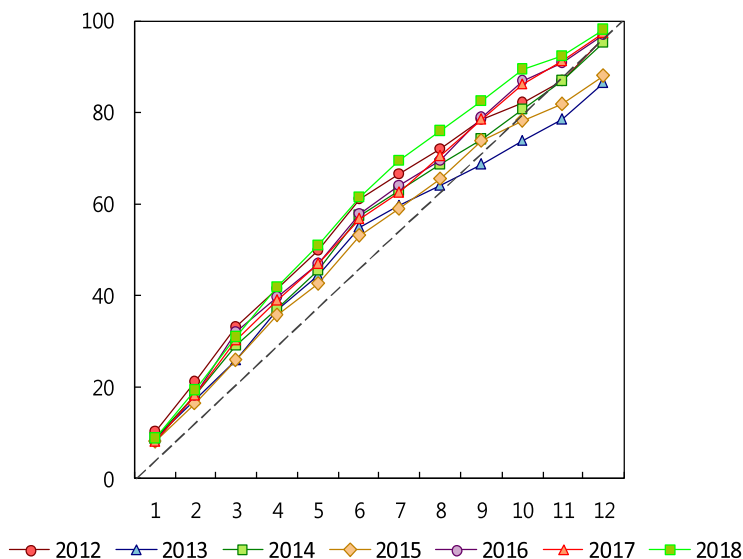
- 2018년 기준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세부사업수는 4,438개, 예산현액(=예산액+이월액+이·전용 등 증감액) 규모는 246.0조원임
- 2018년 세부사업수는 4,438개로 2012년에 비해 1,272개 사업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규모는 2012년 232.5조원에서 대체로 증가하다 관리대상사업 범위의 조정으로 2016년 이후 소폭 감소
 - 분야별로는 교통및물류 분야의 세부사업수가 가장 많고, 교육 분야 예산현액 규모의 비중이 가장 큼
 - 세부사업수는 교통및물류 분야에 632개(1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지방행정(9.6%), 농림수산(9.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9.2%), 사회복지(8.4%) 등의 순임
 - 예산현액 규모는 교육 분야가 62.1조원(2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일반·지방행정(19.5%), 사회복지(17.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7.2%), 국방(6.9%), 교통및물류(6.2%) 등의 순임
 - 비목별 예산현액 규모는 자치단체이전이 절반 이상의 비중(54.8%)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융자금, 민간이전, 연구개발출연금, 일반출연금 등의 순임
 - 2018년에는 2012년에 비해 물건비와 자산취득의 비중은 줄어들고, 이전 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
 - 특히, 자치단체이전, 민간이전, 출연금 등의 비중은 늘고, 운영비, 건설비, 유형자산, 융자금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
 - 소관별로는 국토교통부의 세부사업수가 가장 많고, 교육부 예산현액 규모의 비중이 가장 큼
 - 세부사업수는 국토교통부에 695개(1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8.0%), 보건복지부(6.5%), 산업통상자원부(6.3%), 문화체육관광부(5.9%), 환경부(5.8%) 등의 순임
 - 예산현액 규모는 교육부가 62.0조원(25.2%)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행정안전부(19.5%), 국토교통부(14.0%), 보건복지부(7.5%) 등의 순임

3. 집행률 추이 분석

-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재정집행은 적극적인 제도 개선의 노력으로 2016년 이후 조기집행 기조하에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
 - 2014년과 2015년에 하반기 집행계획과 집행실적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기도 하였으나, 2016년 이후에는 계획과 거의 같은 규모로 집행되고 있음
 - － 분야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 보건, 사회복지, 일반·지방행정, 통신 분야는 상대적으로 연초 집행실적이 양호하고, 국방, 교통및물류, 공공질서및안전,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상반기까지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편임
 - － 비목별로 살펴보면, 연구개발출연금, 일반출연금, 자치단체이전 등은 집행이 상대적으로 연중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건설비, 유형자산, 출자금, 연구개발비 등은 상반기에 실적이 저조하고 연중 불균등한 편임

〈그림〉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월별 집행률 추이

(단위: %)



주: 집행률은 예산현액 규모 대비 집행실적 비율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유형별 집행 특성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1) 집행형태와 (2) 집행관리 목표의 두 가지 기준에서 유형화하여 집행 특성을 분석함
 - 한 회계연도 중에 집행이 이루어지는 형태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 반기별 집중집행, 연중 균등집행, 일회성 집행 형태의 사업 특성 분석
 - 재정관리점검회의의 중점관리 목표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 상반기에는 조기집행, 하반기에는 집행률 제고(이·불용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어 특성 분석

1) 집행형태에 따른 구분

- 한 회계연도 중에 집행이 이루어지는 형태에 따라 ① 반기별 집중집행형, ② 연중 균등집행형, ③ 일회성 집행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 상반기와 하반기의 집행실적 규모를 비교하여 상반기 집행실적 규모가 하반기보다 크면 상반기 집중집행형, 작으면 하반기 집중집행형으로 정의
 - 3, 6, 9, 12월 집행률 수준이 모두 전체 100%의 1/4, 2/4, 3/4, 4/4 $\pm 50\%$ 편차 범위 내에 유지되면 연중 균등집행형으로 정의
 - 즉, $12.5\% < 3\text{월 집행률} \leq 37.5\%$, $37.5\% < 6\text{월 집행률} \leq 62.5\%$, $62.5\% < 9\text{월 집행률} \leq 87.5\%$, $87.5\% < 12\text{월 집행률}$ 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업
 - 재정집행이 한 달에 집중되어 이루어지는 사업을 일회성 집행형으로 정의
- 상반기 집중집행형 사업은 상반기 집행실적 규모가 하반기보다 큰 사업으로, 세부사업수 기준 전체 관리대상사업의 65.9%(예산현액 기준 88.1%)에 해당
 - 상반기 집중집행형의 집행률은 상반기와 연말 모두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 보여 상반기 조기집행 노력이 연말 집행실적에도 도움을 줄 것임을 시사
- 2016년 이후 집행률과 집행기여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최근 정부의 조기집행 노력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자치단체이전, 용자금 등의 비중이 큰 사업들이 다수였으며, 대표적으로 자치단체교부금과 의료급여경상보조, 교육·보육·양육 지원, 창·취업 지원, 농산어촌개발 지원 등 사업들이 해당

□ 하반기 집중집행형 사업은 하반기 집행실적 규모가 상반기보다 큰 사업으로, 세부사업수 기준 전체 관리대상사업의 32.2%(예산현액 기준 11.3%)에 해당

- 하반기 집중집행형의 집행률은 연말에 가까워져서야 상승하는 경향
 - 이 유형의 집행실적은 11월까지도 전체 집행률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였으며, 월별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많음
 -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주택과 노동 부문, 국방 분야의 방위력개선 부문, 교통및물류 분야의 해안·항만 부문 등의 사업들이 해당

□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은 분기별 집행률이 25%, 50%, 75%, 100%의 $\pm 50\%$ 범위 내에 있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수 기준 전체의 8.4%(예산현액 기준 58.4%)에 해당

-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은 사업수 비중에 비해 예산현액 비중이 매우 큰 편(약 7배)이며, 12월을 제외하고는 월별로 비슷한 규모로 집행실적이 증가
 - 이 유형의 월별 집행률은 매월 거의 일정한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이후로 갈수록 다른 사업의 월별 집행률보다 점차 더 높아지는 경향
 - 자치단체이전 비중이 큰 교육, 일반·지방행정, 사회복지 분야가 대부분으로, 대표적으로 자치단체교부금과 의료급여경상보조, 보육 및 교육지원, 창업지원, 주거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복지지출 사업이 해당

□ 일회성 집행형 사업은 연중 재정집행이 한 달에 집중되어 이루어진 사업으로, 세부사

업수 기준 전체의 8.4%(예산현액 기준 1.2%)에 해당

- 일회성 집행형 사업은 사업수 비중에 비해 예산현액 비중이 작은 편(0.14배)으로 상반기에 일회성 집행을 하는 사업이 전체의 81.2%에 해당
 - 특히 상반기 중에서도 1월~3월에 일회성 집행을 하는 사업이 58.7%이며, 하반기 중에는 12월에 일회성 집행을 하는 사업이 5.3%로 가장 많음
 - 1월~3월 일회성 집행 사업은 과학기술, 교육,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환경 등 분야의 연구개발출연금과 일반출연금 비중이 큰 사업들이 많음
 - 10월~12월 일회성 집행 사업은 교통및물류, 국토및지역개발, 국방,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환경 등 분야의 상대적으로 유형자산, 출자금, 민간이전 등의 비중이 큰 사업들이 많음

2) 관리목표를 기준으로 한 구분

- 다음으로 재정관리점검회의의 중점관리 목표에 따라 크게 ① 상반기 조기집행과 ② 하반기 집행률 제고(이·불용 최소화)의 두 가지 기준으로 접근
 -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최근 상반기에는 주로 재정조기집행 상황을 파악 및 독려하고, 하반기에는 이월·불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반기 조기집행 관리와 하반기 이·불용 최소화 관리를 위해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과 평균대비 집행률 수준을 기준으로 상반기 조기집행 사업과 연말 집행부진 사업을 구분하여 특성을 분석
- 상반기 조기집행 관리를 위해, 6월 집행실적이 계획대비 100% 초과인 사업과 6월 집행률이 평균을 초과하는 사업의 두 가지 조기집행 유형을 분석
 - 상반기 계획대비 조기집행 사업은 세부사업수 기준 전체의 38.5%(예산현액 기준 75.5%)에 해당하며, 연말에도 집행실적이 계획대비 높게 나타남
 - 상반기에 계획 수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업의 집행률은 하반기에도 비

슷한 속도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11월까지 완만하다 12월이 되어야
평균 집행률에 근접하는 다른 사업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

- 교부금 및 교부세와 사회복지, 국방, 농림수산, 과학기술, 교육 분야의 자
치단체이전, 연구개발출연금의 비목 비중이 큰 사업들이 많이 해당
- 상반기 평균대비 조기집행 사업은 세부사업수 기준 전체의 47.6%(예산현액
기준 66.9%)에 해당하며, 상반기 집행률은 68.7% 수준임
- 상반기에 평균 집행률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업의 상반기 집행률은 전체
평균(61.4%) 보다 7.3%p, 다른 사업들(46.4%) 보다 22.3%p 높음
- 자치단체이전 비중이 높은 교육, 일반·지방행정 분야 사업들이 많이 해당
- 상반기 계획대비 조기집행 사업은 평균대비 조기집행 사업에 비해 사업수
는 적은 반면 예산현액 규모가 커서 상반기 집행기여도는 더 크게 나타남
- 세부사업수 비중은 9.1%p 작은 반면 예산현액 비중은 8.6%p 커서 계획대
비 조기집행 사업이 상대적으로 예산현액 규모가 클 것임을 시사
- 두 유형의 상반기 집행률은 각각 64.8%, 68.7%이며, 상반기 평균 집행률
수준인 61.4%에 대한 집행기여도는 각각 48.9%p, 46.0%p로 나타남

□ 하반기 이·불용 최소화 관리를 위해, 12월 집행실적이 계획대비 100% 미만인 사업
과 12월 집행률이 평균 미만인 사업의 두 가지 집행부진 유형을 분석

- 연말 계획대비 집행부진 사업은 세부사업수 기준 전체의 57.6%(예산현액
기준 28.1%)로, 연말 집행률은 93.0%임
- 연말까지 계획만큼 집행하지 못한 사업의 집행률은 상반기에도 저조한
편이며, 하반기에 느리게 증가하다 연말이 되어 집행하는 경향을 보임
- 대표적으로 융자·출자·장려금 등 금융지원 사업과 군사시설 및 재난관리
관련 사업들이 해당하며, 융자금, 건설비, 유형자산의 비중이 큰 편임
- 연말 평균대비 집행부진 사업은 세부사업수 기준 전체의 36.7%(예산현액
기준 16.3%)에 해당하며, 연말 집행률은 87.1%로 연도별로 변동폭 큰 편

- 연말에 평균 집행률 수준 미만으로 집행한 사업의 월별 집행률은 3, 6, 12월을 중심으로 증가하며, 특히 하반기에 느리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10월 까지 집행률이 65.6%로 다른 사업들에 비해 28.0%p나 낮음
-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주택 부문, 교통및물류 분야의 항공·공항, 철도 부문, 국방 분야의 방위력개선, 전력유지 부문의 사업들이 해당
- 하반기 평균대비 집행부진 사업은 계획대비 집행부진 사업에 비해 사업수 및 예산현액 규모의 비중이 더 작고, 전반적으로 집행률 수준이 더 낮음
- 세부사업수 비중은 20.9%p, 예산현액 비중은 11.8%p 작아서 평균대비 집행부진 사업은 계획대비 집행부진 사업 중 일부에 해당될 가능성이 큼
- 두 유형의 연말 집행률은 각각 87.1%, 93.0%로, 평균대비 집행부진 사업이 계획대비 집행부진 사업에 비해 국방, 교통및물류, 농림수산 등과 건설비, 이전지출, 유형자산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5. 정책적 시사점

□ 관리대상사업 범위 조정 및 집중관리 필요

-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846개 사업(세부사업 기준)이 관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사업들이 관리대상이 된 기간은 단기에 불과하거나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관리의 지속성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짐
- 13,846개 사업 중 1~2년만 선정되어 관리가 이루어진 사업이 58.2%이고, 7년 간 계속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937개에 불과함
- 이는 세부사업명은 동일하더라도 연도별로 속하는 프로그램명 등이 바뀌면 다른 사업으로 분류한 결과로 실상은 더 많은 사업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오고 있을 것이나 이력정보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범위에는 연중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교부세 및 교부금과 주요 복지급여 사업들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

- 2018년 교부세 및 교부금의 예산현액 규모는 약 95.6조원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하였으며, 교육급여, 의료급여경상보조, 주거급여지원 등 주요 복지급여 사업의 규모도 약 7조원에 달함
- 교부세 및 교부금이나 주요 복지급여 사업은 대표적인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으로 구분되어 매월 집행점검을 해야할 필요성이 커 보이지는 않음
-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사업과 집중 점검·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하고 dBrain시스템을 통해 집중 관리
- 보다 체계적인 집행관리를 위해서는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사업은 분기별로 또는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점검하고, 대신 중점적으로 점검·관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유형화하여 집중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 예를 들어, 상반기에는 조기집행을 제고를 위해 월별 계획 초과집행기여도 지표를 활용하여 상반기에 계획만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 규모가 큰 사업들을 사전에 집중관리
- 하반기에는 분야 및 소관별로 비슷한 예산 규모와 비목 구성을 갖는 사업들끼리 그룹화하여 월별 평균대비 집행기여도가 낮은 사업 집중관리
- 그 밖에 관리대상으로 처음 선정되었거나 관련 제도에 변화가 있는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집중관리 등으로, 이를 위해서는 관리대상 사업 정보에 대한 이력관리가 필요

□ 체계적인 실집행 관리 필요

- 분석 결과, 계획에 맞추어 적기집행 혹은 조기집행이 이루어진 사업들의 비목 구성을 보면 자치단체이전, 출연금 등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특징
- 예를 들어, 연중 균등집행형의 자치단체이전 비중과 출연금 비중은 각각 90.0%, 3.4%, 상반기 집중집행형은 64.6%, 12.6%, 평균대비 조기집행 사업은 71.1%, 12.8%, 계획대비 조기집행 사업은 67.7%, 8.2% 등임
-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지출이 경제 활성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면 중앙정부 집행 후 일선 현장까지 자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집행 관리를 위해서 보다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

- 실집행이란 중앙정부가 지자체, 출연기관에 자금을 교부한 이후 교부 받은 기관이 실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실집행은 실제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체감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부분의 관리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음
- 재정당국은 자치단체·민간 보조·출연사업의 집행 절차에 대한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실집행률을 높여나감과 동시에 e호조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실집행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 필요
- e호조시스템(지방재정) 및 에듀파인(지방교육재정)과 dBrain시스템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실집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보조사업의 교부신청 내역, 교부금 결정 내역, 보조사업 예산신청 현황, 지자체 보조사업 매핑 현황, 단계별 집행실적, 총괄 실적현황 등 상세 현황에 대한 조회·관리 기능 등 탑재할 필요

□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맞춤형 관리 필요

- 평균 집행률 수준에 비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사회복지의 주택, 교통및물류의 항공·공항, 철도, 국방의 방위력개선 부문 등 SOC사업과 군시설 사업에 특히 많은 편으로, 집행부진의 원인은 사업마다 다양하게 나타남
- 예를 들어, 사업 단계상 신규 사업에 해당, 혹은 처음 시행되거나 변경된 제도의 적용으로 인한 집행실적 부진, 또는 발주, 계약 등 집행 절차 상에 의한 집행지연 등 매우 다양
- 집행부진 사업 유형을 크게 한 해에만 집행이 부진한 사업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
-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 및 행정절차 등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사업 착수 후 협의지연, 변경 등으로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거나, 예산의 과다 편성

- 으로 인한 집행부진, 법령·지침을 위반하는 집행 사례 등을 관리
-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의 경우 사업집행 단계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 심의 및 검토절차 소요 등 사업추진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업 특성별로 행정절차의 소요기간 최소화를 위한 관리에 집중
- dBrain시스템에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세부사업 관리자가 부진사유 유형, 상세 사유, 향후조치계획 입력, 관련자료 첨부 등을 통해 내역을 등록하고 점검하는 방안 고려

□ 집행점검 결과와 예산편성 간 연계 강화

- 대체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의 경우 예산 규모가 작고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다양할 것으로 나타나 보다 체계적인 집행관리가 요구됨
- 현재 정부는 연례적 집행부진사업이 집행을 제고 방안을 수립하지 않을 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과 연계하거나 예산성과금에 따른 재정개선 효과를 내년도 예산 요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노력 중임
- 이와 더불어 주요 재정사업의 과거 집행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관리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반영하고, 향후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향후 dBrain시스템을 통하여 주요 사업들의 집행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집행점검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과거 집행정보의 이력관리는 물론이고, 연중 재정집행계획을 수립·조정하는 기능, 재정집행실적 순위의 등록·조회 기능 등 여러 관리 방안 고민
- 예를 들어, 회계연도의 재정집행 대상이 되는 목/세목에 대한 집행점검대상별 기준정보를 설정·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연도별로 각 부처 재정책임관이 예산/기금별, 중앙관서별, 공공기관별 집행실적 우수/부진 사업 또는 상세 유형별 대표 사업들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등 탑재할 필요

목 차

I. 서론	1
1. 분석의 목적 및 필요성	1
2. 분석의 범위 및 방법	2
II. 재정집행 관리 및 현황	5
1. 재정집행 관리제도	5
가. 재정집행의 관리	5
1) 정의 및 법적 근거	5
2) 재정집행 관리 절차	5
나. 재정관리점검회의	6
1) 근거 및 연혁	6
2) 회의 운영 및 주요 내용	6
3) 집행현장조사제도	7
2. 주요 관리대상사업	8
가. 사업의 범위	8
1) 포괄 범위	8
2) 예산 규모 범위	8
나.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	11
1) 개요	11
2) 분야별 현황	14
3) 비목별 현황	16
4) 분야별 비목 구성	17
5) 비목별 분야 구성	24
6) 소관별 현황	29
III. 집행을 추이 분석	31

1. 연도별 추이	31
가. 전체 동향	31
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32
1) 분기별 추이	32
2) 월별 추이	33
다.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	35
1) 월별 추이	35
2) 분야별 비교	36
2. 분야별 추이	37
가. 예산현액 규모와 집행률	37
나. 월별 집행률	38
1) 월별 집행률 현황	38
2) 연도별 추이 비교	40
3. 비목별 추이	43

IV. 유형별 집행 특성 분석 45

1. 집행형태에 따른 구분	45
가. 반기별 집중집행형	45
1) 사업 현황	45
2) 연중 집행형태 비교	46
3) 연말 집행률 추이	47
4) 월별 집행률 현황	47
5) 유형별 사업 특성	48
6) 유형별 세부사업 사례	50
나. 연중 균등집행형	53
1) 사업 현황	53
2) 연중 집행형태 비교	54

3) 연말 집행을 추이	54
4) 월별 집행률 현황	55
5) 유형별 사업 특성	56
다. 일회성 집행형	58
1) 사업 현황	58
2) 일회성 집행월별 현황	58
3) 유형별 세부사업 사례	60
4) 연중 집행횟수별 현황	61
2. 관리목표에 따른 구분	63
가.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63
1) 상반기 계획대비 집행실적 기준	63
가) 사업 현황	63
나) 상반기 집행을 추이	64
다) 연말 집행을 추이	64
라) 월별 집행률 현황	65
마) 유형별 사업 특성	66
바) 유형별 세부사업 사례	67
2) 상반기 평균 집행을 대비 기준	70
가) 사업 현황	70
나) 상반기 집행을 추이	71
다) 월별 집행률 현황	71
라) 유형별 사업 특성	72
마) 유형별 세부사업 사례	74
나. 하반기 집행을 제고 목표	76
1) 연말 계획대비 집행실적 기준	76
가) 사업 현황	76
나) 연말 집행을 추이	77
다) 월별 집행률 현황	78
라) 유형별 사업 특성	78

마) 유형별 세부사업 사례	80
2) 연말 평균대비 집행부진	81
가) 사업 현황	81
나) 연말 집행을 추이	82
다) 월별 집행률 현황	82
라) 유형별 사업 특성	83
마) 유형별 세부사업 사례	85

V. 요약 및 시사점 87

1. 요약	87
가. 연도별 집행을 추이	87
나. 분야/비목별 집행 특성	88
다. 집행형태에 따른 구분	88
라. 관리목표에 따른 구분	90
2. 시사점	93
가. 관리대상사업 범위 조정 및 집중관리 필요	93
나. 체계적인 실집행 관리 필요	94
다.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맞춤형 관리 필요	95
라. 집행점검 결과와 예산편성 간 연계 강화	96

참고문헌 98

부록 1 99

부록 2 101

표 목 차

〈표 2-1〉 총지출과 주요 관리대상사업 범위 비교(2020년)	9
〈표 2-2〉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추이	10
〈표 4-1〉 상하반기 집행기여도 격차 상위 15개 사업(2018년)	50
〈표 4-2〉 상하반기 집행기여도 격차 하위 15개 사업(2018년)	51
〈표 4-3〉 상하반기 동일집행형 예산현액 규모 상위 15개 사업(2018년)	52
〈표 4-4〉 연중 균등집행형 예산규모 상위 15개 사업(2018년)	57
〈표 4-5〉 1월, 12월 일회성 집행 예산현액 규모 상위 10개 사업(2018년)	61
〈표 4-6〉 상반기 계획 초과집행기여도 상위 15개 사업(2018년)	68
〈표 4-7〉 상반기 계획 초과집행기여도 하위 15개 사업(2018년)	69
〈표 4-8〉 상반기 초과집행기여도 상위 15개 사업(2018년)	74
〈표 4-9〉 상반기 초과집행기여도 하위 15개 사업(2018년)	75
〈표 4-10〉 연말 계획 초과집행기여도 하위 15개 사업(2018년)	80
〈표 4-11〉 연말 초과집행기여도 하위 15개 사업(2018년)	85

그림 목 차

〈그림 2-1〉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 규모 추이	9
〈그림 2-2〉 세부사업 기준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현황	11
〈그림 2-3〉 기간별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 분포 현황	12
〈그림 2-4〉 선정 기간별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 현황	13
〈그림 2-5〉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분야별 세부사업수	14
〈그림 2-6〉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분야별 예산현액 규모	15
〈그림 2-7〉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비목별 예산현액 규모	16
〈그림 2-8〉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분야별 비목 구성(2018년)	21
〈그림 2-9〉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비목별 분야 구성(2018년)	27
〈그림 3-1〉 연도별 집행실적 추이	31
〈그림 3-2〉 분기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추이	32
〈그림 3-3〉 월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추이	33
〈그림 3-4〉 월별 집행률 추이의 연도별 비교	34
〈그림 3-5〉 월별 계획 vs 실제 집행률 추이	35
〈그림 3-6〉 월별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의 분야별 비교(2018년)	36
〈그림 3-7〉 분야별 예산현액 규모와 연말 집행률 현황(2018년)	37
〈그림 3-8〉 분야별 예산현액 대비 월별 집행률 현황(2018년)	38
〈그림 3-9〉 분야별 예산현액 대비 월별 집행률 추이(2012-18년)	40
〈그림 3-10〉 주요 비목별 예산현액 대비 월별 집행률 추이(2012-18년)	43
〈그림 4-1〉 반기별 집중집행 유형 구분에 따른 사업 현황	45

〈그림 4-2〉 반기별 집중집행 유형 구분에 따른 연중 집행형태 비교	46
〈그림 4-3〉 반기별 집중집행 유형 구분에 따른 집행률 추이 비교	47
〈그림 4-4〉 반기별 집중집행 유형 구분에 따른 월별 집행 현황(2018년)	48
〈그림 4-5〉 반기별 집중집행 유형 구분에 따른 예산현액의 구성(2018년)	49
〈그림 4-6〉 연중 균등집행 유형 구분에 따른 사업 현황	53
〈그림 4-7〉 연중 균등집행 유형 구분에 따른 집행률 추이 비교	54
〈그림 4-8〉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의 연말 집행실적 추이	55
〈그림 4-9〉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의 월별 집행률 현황(2018년)	56
〈그림 4-10〉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의 예산현액 구성(2018년)	57
〈그림 4-11〉 일회성 집행형 구분에 따른 사업 현황	58
〈그림 4-12〉 일회성 집행월별 사업 현황	59
〈그림 4-13〉 1분기 일회성 집행 사업 현황	59
〈그림 4-14〉 4분기 일회성 집행 사업 현황	60
〈그림 4-15〉 연중 집행 횟수별 사업 현황	62
〈그림 4-16〉 상반기 계획대비 조기집행 사업 현황	63
〈그림 4-17〉 계획대비 조기집행 사업의 상반기 집행실적 추이	64
〈그림 4-18〉 계획대비 조기집행 사업의 연말 집행실적 추이	65
〈그림 4-19〉 계획대비 조기집행 사업의 월별 집행 현황(2018년)	66
〈그림 4-20〉 계획대비 조기집행 사업의 예산현액 구성(2018년)	67
〈그림 4-21〉 상반기 평균대비 조기집행 사업 현황	70

〈그림 4-22〉 평균대비 조기집행 사업의 상반기 집행실적 추이	71
〈그림 4-23〉 평균대비 조기집행 사업의 월별 집행 현황(2018년)	72
〈그림 4-24〉 평균대비 조기집행 사업의 예산현액 구성(2018년)	73
〈그림 4-25〉 연말 계획대비 집행부진 사업 현황	76
〈그림 4-26〉 계획대비 집행부진 사업의 연말 집행실적 추이	77
〈그림 4-27〉 계획대비 집행부진 사업의 월별 집행 현황(2018년)	78
〈그림 4-28〉 계획대비 집행부진 사업의 예산현액 구성(2018년)	79
〈그림 4-29〉 연말 평균대비 집행부진 사업 현황	81
〈그림 4-30〉 평균대비 집행부진 사업의 연말 집행실적 추이	82
〈그림 4-31〉 평균대비 집행부진 사업의 월별 집행 현황(2018년)	83
〈그림 4-32〉 평균대비 집행부진 사업의 예산현액 구성(2018년)	84

I. 서론

1. 분석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가 선정한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집행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주요 관리대상사업이란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하는 사업 등은 제외한 주요 사업비를 말한다. 정부는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와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상반기에 최대한 집행이 가능한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연중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집행실적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집행 관리는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연초 경기에 하방 위험요인이 예상되는 경우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실시하여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이고, 연간으로는 불용을 최소화하여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운영하여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들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신속하게 조기 집행되고 연말에 불용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한편, dBrain시스템은 재정관리점검회의의 자료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dBrain시스템에는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집행 정보가 모두 축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 데이터들을 분석에 활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재정집행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예산의 흐름을 중심으로 집행체계를 분석하기보다는 집행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 과정, 제도적 맥락, 정책의 효율성 평가 등에 초점을 맞춘 사례 중심의 연구들이다(윤기웅, 2016).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에서는 월별 회의가 진행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과거 7년간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재정집행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고, 집행형태에 따라 구분한 반기별 집중 집행형, 연중 균등집행형, 일회성 집행형 사업과 집행관리 목표에 따라 상반기 조기집행 사업과 연말 집행부진 사업의 집행 특성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보다 체계적인 재정집행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분석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 기간 2012년 1월~2018년 12월에 대하여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dBrain시스템 월별 집행점검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정부가 매년 새롭게 선정하여 발표한다. 이때,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 등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하는 사업 등은 제외한 주요 사업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세부사업 밑단의 세목 단위로 정한다.²⁾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dBrain시스템에는 재정관리점검회의 자료 지원의 목적으로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집행정보가 월별로 취합된 정보들이 축적되어 있으며, 본 분석에서는 이 월별 집행점검 데이터를 활용하였다.³⁾ 분석에 사용한 주요 정보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액+이·전용 등 증감액), 월별집행계획, 월별집행실적 등이다. 기본적으로 세부사업 단위에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이때 단일 세부사업의 기준은 해당 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이 모두 동일한 세부사업으로 설정한다.

집행 특성을 측정하는 데에는 주로 월별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의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하였다. 또한 실제 재정집행은 예산액에 이월액과 이·전용 등 증감액을 더한 예산현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본 연

2) 따라서 주요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예산 규모는 예산상 각 세부사업 예산 규모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며 일부만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3)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당해년도 재정집행 점검 시점에서 관리되고 있는 집행금액을 집계한 금액이므로 실제 연말 결산액과는 상이할 수 있다.

구에서는 통상적인 ‘집행률’을 예산현액 규모 대비 집행실적 비율(%)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 4장의 집행 특성에 따른 유형별 분석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기준으로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연중 집행형태에 따라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특성을 살펴본다. 상반기와 하반기 집행실적 규모를 기준으로 상반기 집행실적이 하반기 집행실적보다 크면 상반기 집중집행형, 작으면 하반기 집중집행형, 같으면 상하반기 동일집행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3, 6, 9, 12월 집행률을 근거로 연중 집행실적 규모가 대체로 균등한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과 집행이 한 달에 집중되어 이루어지는 일회성 집행형 사업들에 대한 집행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최근 상반기에는 주로 재정조기집행 상황을 파악 및 독려하고 하반기에는 이월·불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정집행 현황을 체크해 보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조기집행, 연말에는 집행부진에 초점을 맞추어 특성을 분석해 본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 조기집행 사업으로는 상반기 집행실적이 계획 규모를 초과한 사업과 상반기 집행률이 평균을 초과한 사업을, 연말 집행부진 사업으로는 연말 집행실적이 계획 규모에 미치지 못한 사업과 연말 집행률이 평균 미만인 사업의 두 유형을 고려하였다.

한편, 이처럼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방법에서는 유형별 집행 특성이 전체 관리대상사업의 집행실적이나 집행률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각 그룹의 집행률에 예산현액 규모 비중을 가중치로 곱한 값을 집행기여도로 정의하고, 각 유형별 사업의 집행실적이 전체 집행실적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였다. 전체 관리대상사업의 집행률은 그룹별 집행률에 각 그룹의 예산현액 규모 비중을 곱해준 값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II. 재정집행 관리 및 현황

1. 재정집행 관리제도

가. 재정집행의 관리

1) 정의 및 법적 근거

재정집행의 관리란 정부가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45개 중앙행정기관, 39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비의 재정집행을 관리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를 근거로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제출된 집행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정집행을 관리한다.

2) 재정집행 관리 절차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매월 경과 후(「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은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 이내에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집행보고서에는 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월별 집행실적, ② 예산 및 기금 등의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 ③ 각 부처 및 기관별 예산낭비신고실적 및 대응 실적(「국가재정법」 제100조에 따른 시정요구내용 및 처리결과 포함), ④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보고서의 내

용을 분석하고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를 확인·점검 후 필요한 때에는 집행 애로 요인의 해소와 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나. 재정관리점검회의

1) 근거 및 연혁

한편,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재정관리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는 2001년 7월 예산집행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재정집행을 점검해 오다,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이를 근거로 재정관리점검단을 설치·운영하였고, 이후 2009년 1월 금융위기를 맞아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2011년 6월에 현재의 재정관리점검회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⁴⁾

2) 회의 운영 및 주요 내용

재정관리점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재정관리점검회의는 기획재정부 2차관과 각부처 1급공무원 및 공기업 부사장이 단장을 맡는다. 실제적으로는 주로 상반기에는 재정조기집행 상황을 파악 및 독려하고, 하반기에는 이월·불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주로 재정관리점검회의의 중점점검대상을 일자리, 복지 등 민생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사업들 위주로 선정하고 일부 부진 사업은 부처 자체 특별점검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부진 해소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조기집행 달성에 힘쓰며, 하반기에는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

4)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2014.

한 점검체계로 전환하여 각 부처·기관별 자체 특별점검단 운영, 부처합동 현장 점검 등으로 연례적 이월·불용 사업 특별 관리 및 집행 애로 요인 해소를 통해 연말 집행을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3) 집행현장조사제도

정부는 2016년 4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집행현장조사제도를 도입하고, 가이드라인 마련→후보사업 발굴→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부터 최종 점검대상사업 확정 및 사업별 점검단 구성을 통해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간 통·폐합 가능성, 집행 및 실집행 제고방안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집행현장조사제도란 집행단계에서 비효율성을 현장에서 실시간(real time)으로 점검하고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4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제기된 제도이다. 집행현장조사제도는 일차적으로 담당 부처 책임하에 비효율·낭비사업 및 집행부진 사업은 수시로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초단기(최소 1~2주)로 대응하고, 이슈가 되는 주요 재정사업은 관계부처 합동의 집행현장 점검단을 구성하여 분기별 또는 상시 현장점검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2. 주요 관리대상사업

가. 사업의 범위

1) 포괄 범위

정부는 매년 상반기에 최대한 집행이 가능한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고 1개월마다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사업의 집행실적을 점검한다. 이때, 주요 관리대상사업이란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하는 사업 등은 제외하고 45개 중앙행정기관(일반회계+특별회계), 39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비를 말한다. 소관별로는 주로 부·처·청의 중앙행정기관 재정사업이, 기금별로는 주로 사업성기금 사업이 해당한다. 사회보험성기금 중에서는 고용보험 기금만 포함되며 계정성기금과 금융성기금은 제외된다. 비목별로는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 등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하는 사업 등은 제외되어 있다.

2) 예산 규모 범위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2020년 예산 규모는 305.5조원이다. 이 중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예산 및 기금의 규모가 262.0조원으로 2020년 총지출 규모(512.3조원) 대비 51.1%, 전체 관리대상사업 규모의 85.8%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43.5조원으로 14.2%이다. 중앙부처 관리대상사업 중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의 규모가 211.5조원으로 총지출 예산 규모(351.1조원)의 60.2%, 기금은 50.5조원으로 총지출 기금 규모(161.1조원)의 31.3%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고려하였다.

〈표 2-1〉 총지출과 주요 관리대상사업 범위 비교(2020년)

(단위: 개,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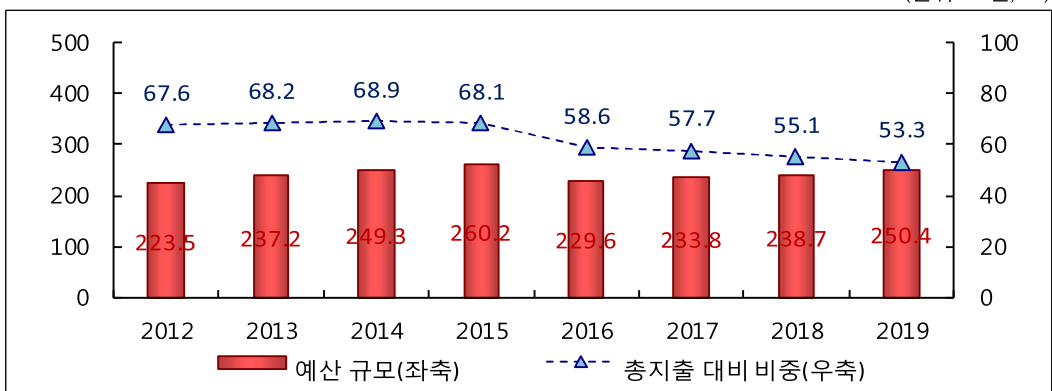
	총지출		주요 관리대상사업	
	대상	예산규모	대상	예산규모
합계	-	512.3조원	-	305.5조원
예산 (일반+특별회계)	중앙행정기관 55개(전체)	351.1조원	중앙행정기관 45개	211.5조원
기금	58개	161.1조원	39개	50.5조원
공공기관	-	-	33개	43.5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0.3.)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223.5조원으로 총지출 규모의 67.6% 수준에 해당하였으며 이후 유사한 비중으로 유지되다 2016년 일부 의무지출 사업 제외 등 관리 대상 범위가 조정되며 총지출 대비 10%p 가량 감소하였다. 이때부터는 기초생활보장, 노인기초연금, 보훈보상금 등 월별로 대체로 균등하게 집행되는 30조원 가량의 의무지출 사업들은 제외하여 관리하고 있다.⁵⁾

〈그림 2-1〉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주: 예산 규모는 기금을 포함한 규모임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각 월호

5) 2018년 기준 총지출 규모에서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약 7%), 인건비 및 경비성 지출, 보전금 등 비목(약 17%), 일부 사회보장성기금과 재정성기금 등 비대상 기금 규모(약 18%) 등을 제외하고 비교해 보면,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관리해야 하는 지출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과거 6년간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예산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249.4조원으로 총지출 규모의 68.9% 수준이었으며 이후 2016년 재량지출의 비중 감소 등으로 관리대상 범위가 조정되면서 감소하여 2019년에는 총지출 대비 53.3% 수준(252.6조원)에 해당하였다.

이들 사업의 연간계획 금액 대비 집행률은 2014년 97.2%에서 2019년 100.5%로 대체로 양호해지는 추세이다.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의 연간계획 금액 대비 집행률은 2014년 97.2%에서 2019년 99.2%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기금의 연간계획 금액 대비 집행률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는 편이긴 하나 과거에 비해서는 대체로 상승하는 추이다. 2019년에는 교육부 57.6조원, 행정안전부 53.4조원, 국토교통부 42.5조원 등 총 253.8조원을 집행하여, 연간계획 규모 252.6조원 대비 100.5% 수준을 보였다.

〈표 2-2〉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추이

(단위: 개, 조원, %)

연도	구분	총지출		주요 관리대상사업				
		대상	예산규모	대상	연간계획(A)	상반기계획	12월실적(B)	집행률(B/A)
'14년 기준	중앙정부		355.8		249.4	143.7	242.4	97.2
	• 예산	53개	250.8	43개	210.8	122.7	202.8	96.2
	• 기금	54개	105.0	40개	38.5	21.0	39.6	102.8
'15년 기준	중앙정부		375.4		260.2	152.5	250.3	96.2
	• 예산	53개	260.1	43개	219.2	127.5	210.8	96.2
	• 기금	54개	115.3	41개	41.0	25.0	39.5	96.3
'16년 기준	중앙정부		386.4		229.6	137.1	223.2	97.2
	• 예산	53개	263.9	43개	188.9	113.5	184.1	97.5
	• 기금	54개	122.5	41개	40.7	23.6	39.0	95.9
'17년 기준	중앙정부		400.5		233.8	135.7	230.3	98.5
	• 예산	53개	274.6	45개	192.7	112.9	187.9	97.5
	• 기금	67개	125.9	43개	41.1	22.8	42.4	103.3
'18년 기준	중앙정부		428.8		238.6	138.9	237.8	99.6
	• 예산	54개	296.3	45개	200.9	118.1	197.9	98.5
	• 기금	67개	132.6	41개	37.8	20.8	39.8	105.4
'19년 기준	중앙정부		469.6		252.6	155.9	253.8	100.5
	• 예산	55개	328.9	45개	208.9	131.2	207.2	99.2
	• 기금	67개	140.6	40개	43.7	24.7	46.6	106.7

주: 기금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연간계획 금액 대비 집행률이 100% 초과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각 월호

나.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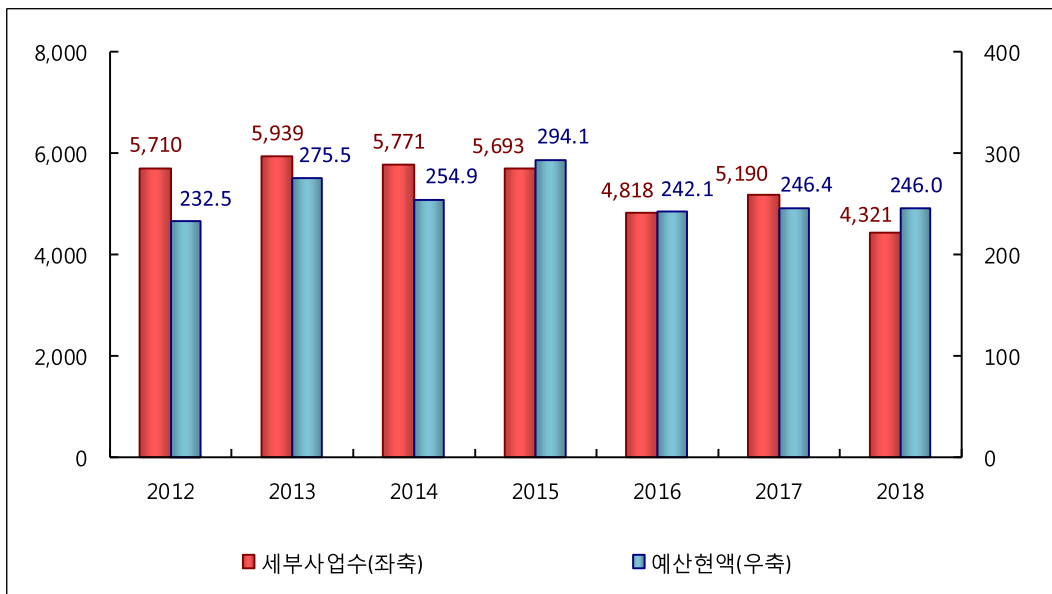
1) 개요

dBrain시스템 집행관리 정보를 기준으로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관리대상사업 예산현액 규모는 2012년 232.5조원에서 2015년 294.1조원으로 대체로 증가하다 의무지출 사업 제외 등으로 2016년부터 소폭 축소되어 2018년에는 246.0조원 수준이다.

한편, 관리대상사업은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하는 사업 등은 제외한 주요 사업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정된 대상 사업이 예산상 각 세부사업 예산 규모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며 일부만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세부사업 단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8년 4,438개로 2012년에 비해 1,272개 사업이 감소하였다.

〈그림 2-2〉 세부사업 기준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현황

(단위: 개,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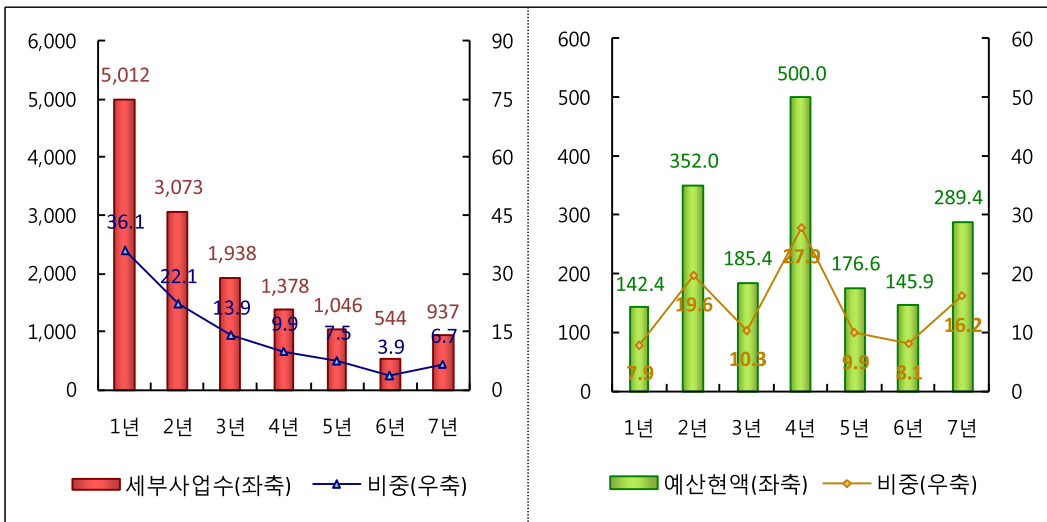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분석 기간인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846개 사업들(세부사업 기준)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집행이 관리되었다. 이 중 한 해 혹은 두 해만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관리가 이루어진 세부사업이 각각 5,012개, 3,073개로 58.2%이며, 937개의 사업은 7년간 계속 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집행관리를 받아왔다.6) 예산 규모로는, 7년간 총 1,791.6조원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집행관리 대상이었는데, 그 중 4년간 집행관리를 받은 사업의 규모가 500.0조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다음으로 7년(289.4조원), 2년(352.0조원), 3년(185.4조원), 5년(176.6조원), 6년(145.9조원), 1년(142.4조원) 등의 순이었다.

〈그림 2-3〉 기간별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 분포 현황

(단위: 개, 조원,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첫 해였던 2012년에는 한 해만 관리대상이 되었던 세부사업수는 1,511개로 분석기간의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이후 감소하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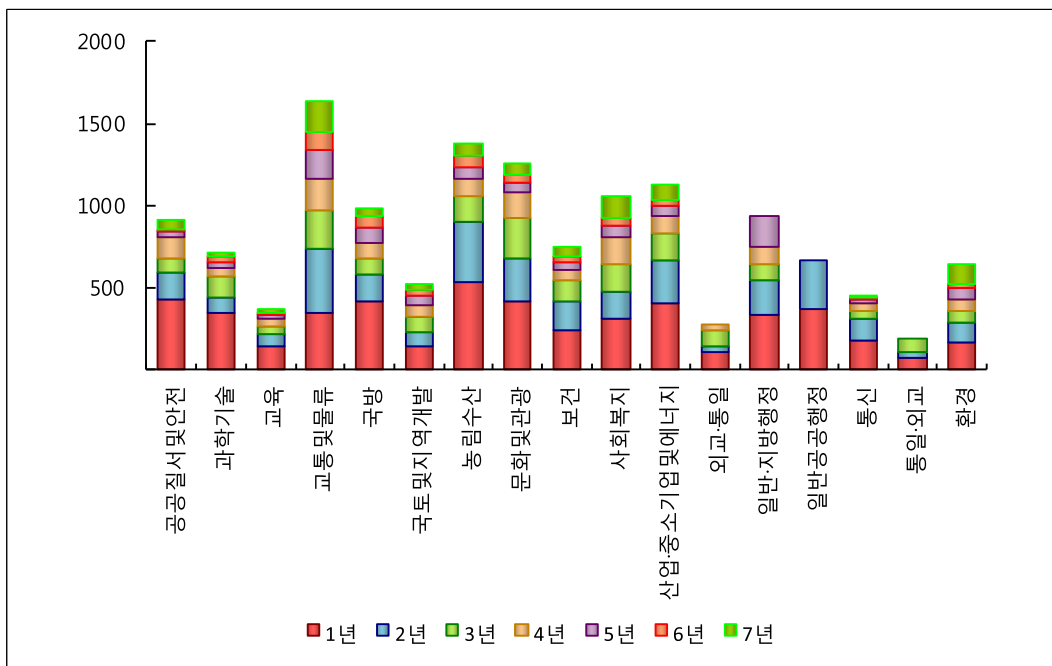
6) 본 연구에서는 단일 세부사업의 기준은 해당 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이 모두 동일한 세부사업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세부사업명은 동일하더라도 사업 연도에 따라 속하는 부문명 또는 프로그램명 등이 다를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분류하였다.

를 보이다 2017년 이후 다소 증가하였다. 분야별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연수를 살펴보면, 교통및물류, 국토및지역개발, 사회복지, 보건, 환경 등의 분야는 지속적으로 관리대상이 되어온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공공질서및안전, 과학기술, 교육, 국방 등의 분야에서는 한 해만 관리대상이 되었던 사업이 40% 이상의 비중을 보였다.

특히 7년 동안 계속 관리대상이 되어온 937개 사업들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교통및물류에 191개(20.4%)로 가장 많은 사업이 분포하였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 122개(13.0%), 환경 117개(12.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00개(10.7%) 등의 순이었다. 이들 사업의 2018년 예산 규모는 사회복지가 12.3조원으로 전체의 30.5%를, 다음으로 교통및물류 6.6조원(16.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6조원(11.3%), 국방 4.2조원(10.4%) 등 순이다.

〈그림 2-4〉 선정 기간별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 현황

(단위: 개)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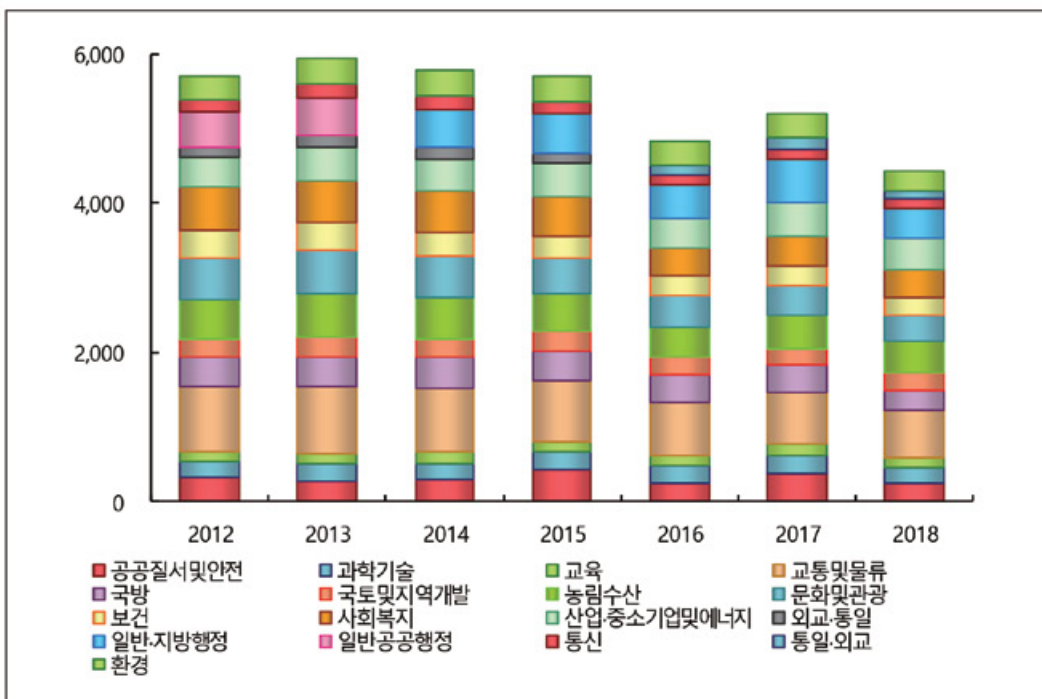
2) 분야별 현황

세부사업수

2018년 기준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분야별 세부사업수는 교통및물류가 632개로 전체 4,321개 중 14.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반·지방행정(413개, 9.6%), 농림수산(404개, 9.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399개, 9.2%), 사회복지(364개, 8.4%), 문화및관광(361개, 8.4%), 국방(265개, 6.1%), 보건(247개, 5.7%), 공공질서및안전(235개, 5.4%), 환경(232개, 5.4%) 등의 순서이다. 2012년에 비해 교통및물류, 문화및관광, 사회복지, 국방, 보건 등 분야의 세부사업 비중은 줄어들고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과학기술, 교육 등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5〉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분야별 세부사업수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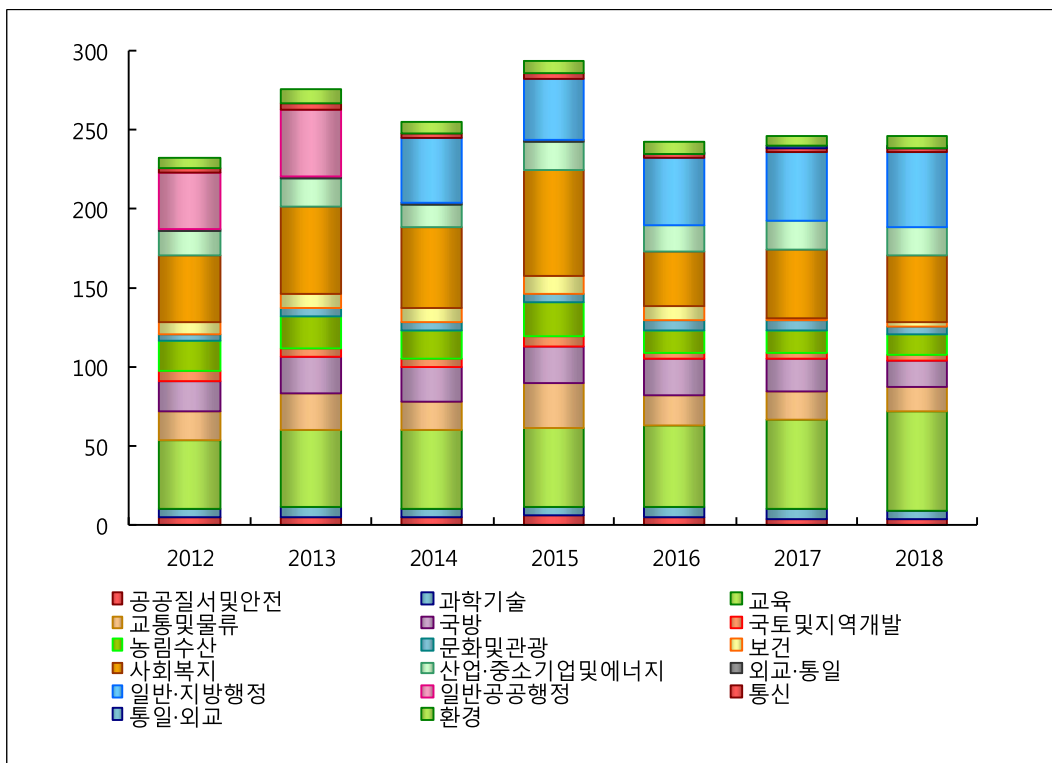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예산현액 규모

예산현액 규모는 교육 분야가 62.1조원으로 전체 246.0조원의 25.2%를 차지하며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반·지방행정(47.9조원, 19.5%), 사회복지(42.4조원, 17.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7.6조원, 7.2%), 국방(17.0조원, 6.9%), 교통및물류(15.3조원, 6.2%), 농림수산(12.9조원, 5.2%), 환경(6.5조원, 2.7%), 과학기술(5.9조원, 2.4%), 문화및관광(5.8조원, 2.8%) 등의 순서이다. 예산현액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에 비해 2018년에는 사회복지, 교통및물류, 국방, 농림수산, 보건, 공공질서및안전 등 분야의 예산 비중은 줄고 교육, 문화및관광,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과학기술 등 분야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림 2-6〉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분야별 예산현액 규모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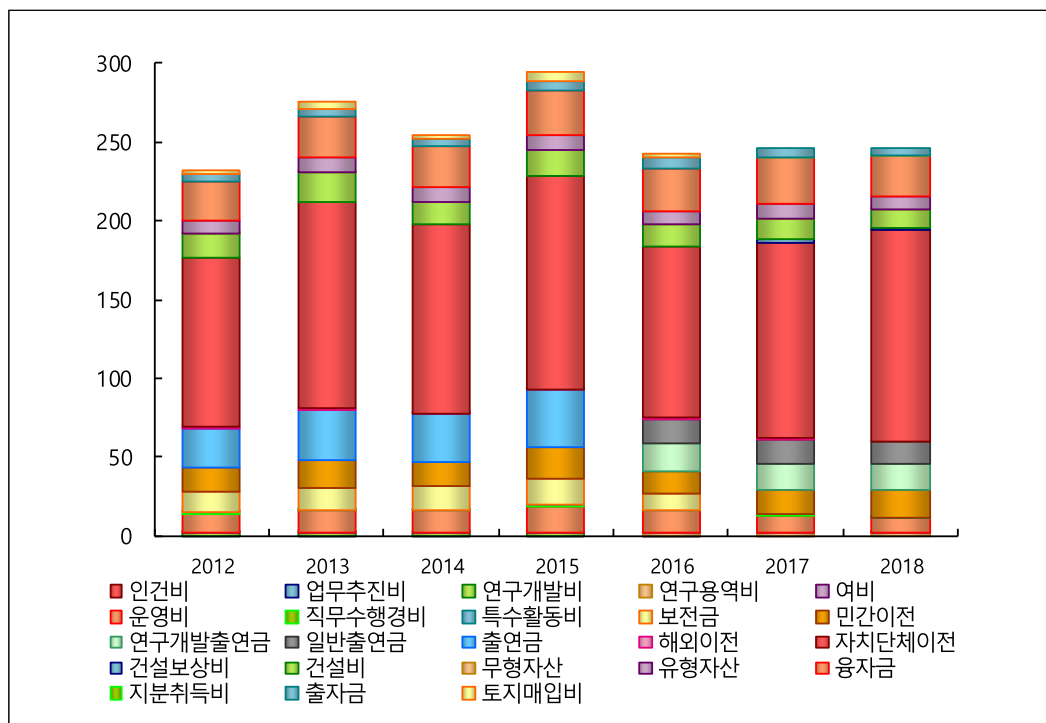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비목별 현황

2018년 기준 비목별 예산현액 규모는 자치단체이전이 134.9조원으로 전체 246.0조원 중 54.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용자금(26.2조원, 10.7%), 민간이전(16.9조원, 6.9%), 연구개발출연금(16.5조원, 6.7%), 일반출연금(13.9조원, 5.7%), 건설비(12.0조원, 4.9%), 운영비(9.3조원, 3.8%), 유형자산(7.6조원, 3.1%), 출자금(4.5조원, 1.8%) 등의 순서이다. 2018년에는 2012년에 비해 물건비와 자산취득의 비중은 줄어들고 이전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여비, 운영비, 직무수행경비, 특수활동비, 보전금, 해외이전, 건설비, 유형자산, 용자금 등 비중은 줄어들고 자치단체이전, 민간이전, 출연금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7〉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비목별 예산현액 규모

(단위: 조원,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분야별 비목 구성

2018년 기준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분야별 비목 구성을 세부사업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사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특징적으로 과학기술, 통신은 연구개발출연금, 교육은 일반출연금, 교통및물류와 국토및지역개발은 건설비, 민간이전을 포함하는 사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한편 예산현액 규모의 비목 비중을 살펴보면, 과학기술, 통일·외교는 연구개발출연금, 일반출연금 등 출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문화및관광,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교육, 농림수산, 보건, 사회복지, 환경은 자치단체이전, 민간이전 등 이전지출 비중이, 교통및물류, 국방, 국토및지역개발은 건설비, 유형자산, 융자금, 출자금 등 자산취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질서및안전

공공질서및안전은 전체 235개 관리대상사업 중 운영비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이 198개로 비목들 중에서 비중이 가장 컸다. 이 분야의 집행관리대상 운영비 예산현액 규모는 0.9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24.9%)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치단체이전(0.8조원, 22.1%), 직무수행경비(0.6조원, 16.0%), 유형자산(0.5조원, 14.1%), 건설비(0.3조원, 8.6%)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기술

과학기술은 228개 관리대상사업 중 연구개발출연금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이 134개로 전체 비목들 중 포함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 분야의 연구개발출연금 예산 규모는 5.3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89.4%)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반출연금(0.3조원, 4.6%), 운영비(0.1조원, 2.1%) 등의 순이다.

교육

교육은 129개 관리대상사업 중 일반출연금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이 38개로 전체 비목들 중 포함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운영비(32개), 연구개발출연금(31개), 민간이전(29개) 등의 순이었다. 한편, 자치단체이전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 수는 7개밖에 안 되었으나 예산 규모가 53.5조원이나 차지하며 이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86.1%)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일반출연금(5.2조원), 연구개발출연금(2.2조원, 3.6%) 등의 순이다.

교통및물류

교통및물류는 632개 사업 중 건설비를 대상 비목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업이 262개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 분야에서 대상으로 선정되어 집행이 관리되는 건설비의 예산 규모는 5.1조원으로 동분야 관리대상비목 중 33.2%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일반출연금(3.8조원, 24.8%), 자치단체이전(1.6조원, 10.4%), 출자금(1.5조원, 9.5%), 민간이전(1.4조원, 9.3%), 연구개발출연금(0.8조원, 5.0%), 건설보상비(0.7조원, 4.8%)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방

국방은 267개 사업 중 운영비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이 197개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유형자산(152개), 건설비(101개), 연구용역비(66개) 등의 순이다. 이 분야의 유형자산 예산 규모가 6.5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38.4%)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운영비(4.3조원, 25.3%), 건설비(3.3조원, 19.7%), 연구개발출연금(1.6조원, 9.7%), 연구용역비(0.9조원, 5.2%) 등의 순이다.

국토및지역개발

국토및지역개발은 235개 사업 중 건설비를 관리대상으로 포함한 사업이 111개로 사업수 비중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건설보상비(55개), 연구용역비(40

개), 운영비(37개), 출자금(32개) 등의 순이다. 예산현액 규모는 자치단체이전이 1.6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41.1%)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건설비(1.1조원, 28.9%), 출자금(0.4조원, 11.2%), 건설보상비(0.3조원, 7.0%) 등의 순이다.

농림수산

농림수산은 407개 사업 중 운영비를 포함한 사업수가 183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민간이전(170개), 자치단체이전(160개) 등의 순이며, 예산현액 규모는 자치단체이전이 4.6조원(35.6%)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민간이전(3.0조원, 23.4%), 융자금(3.0조원, 23.0%) 등의 순이다.

문화및관광은 361개 사업 중 민간이전을 포함한 사업이 216개, 다음으로 운영비(179개), 자치단체이전(100개) 등의 순이며, 예산현액은 민간이전(2.4조원, 41.8%), 자치단체이전(1.8조원, 31.1%), 융자금(0.6조원, 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

보건은 247개 사업 중 운영비를 포함한 사업이 156개, 다음으로 연구용역비(102개), 민간이전(98개), 유형자산(78개) 등의 순이며, 예산현액 규모는 자치단체이전(1.1조원, 45.1%), 민간이전(0.4조원, 17.3%), 연구개발출연금(0.4조원, 14.9%), 운영비(0.2조원, 8.6%) 등의 순이다.

사회복지

사회복지 365개 사업 중 운영비를 포함한 사업이 192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민간이전(175개), 자치단체이전(114개) 등의 순이며, 예산현액 규모는 자치단체이전이 18.7조원으로 전체 44.0%를 차지하며 가장 컸고, 다음으로 융자금(15.2조원, 35.8%), 민간이전(5.0조원, 11.7%) 등의 순이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405개 사업 중 민간이전을 포함한 사업이 129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구개발출연금(122개), 운영비(89개), 일반출연금(77개), 연구용역비(59개) 등의 순이다. 예산현액 규모는 융자금(7.1조원, 40.3%), 연구개발출연금(4.6조원, 26.0%), 민간이전(2.8조원, 15.7%), 일반출연금(1.5조원, 8.7%) 등의 순이다.

일반·지방행정

일반·지방행정은 417개 사업 중 운영비를 포함한 사업이 314개, 다음으로 연구용역비(159개), 유형자산(104개) 등의 순이며, 예산현액 규모는 자치단체이전이 46.4조원(96.9%)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통신은 122개 사업 중 민간이전을 포함한 사업이 47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운영비(41개), 연구개발출연금(29개), 일반출연금(22개) 등의 순이며, 예산현액 규모는 연구개발출연금(0.7조원, 36.3%), 운영비(0.6조원, 29.4%), 민간이전(0.5조원, 23.4%) 등의 순이다.

통일·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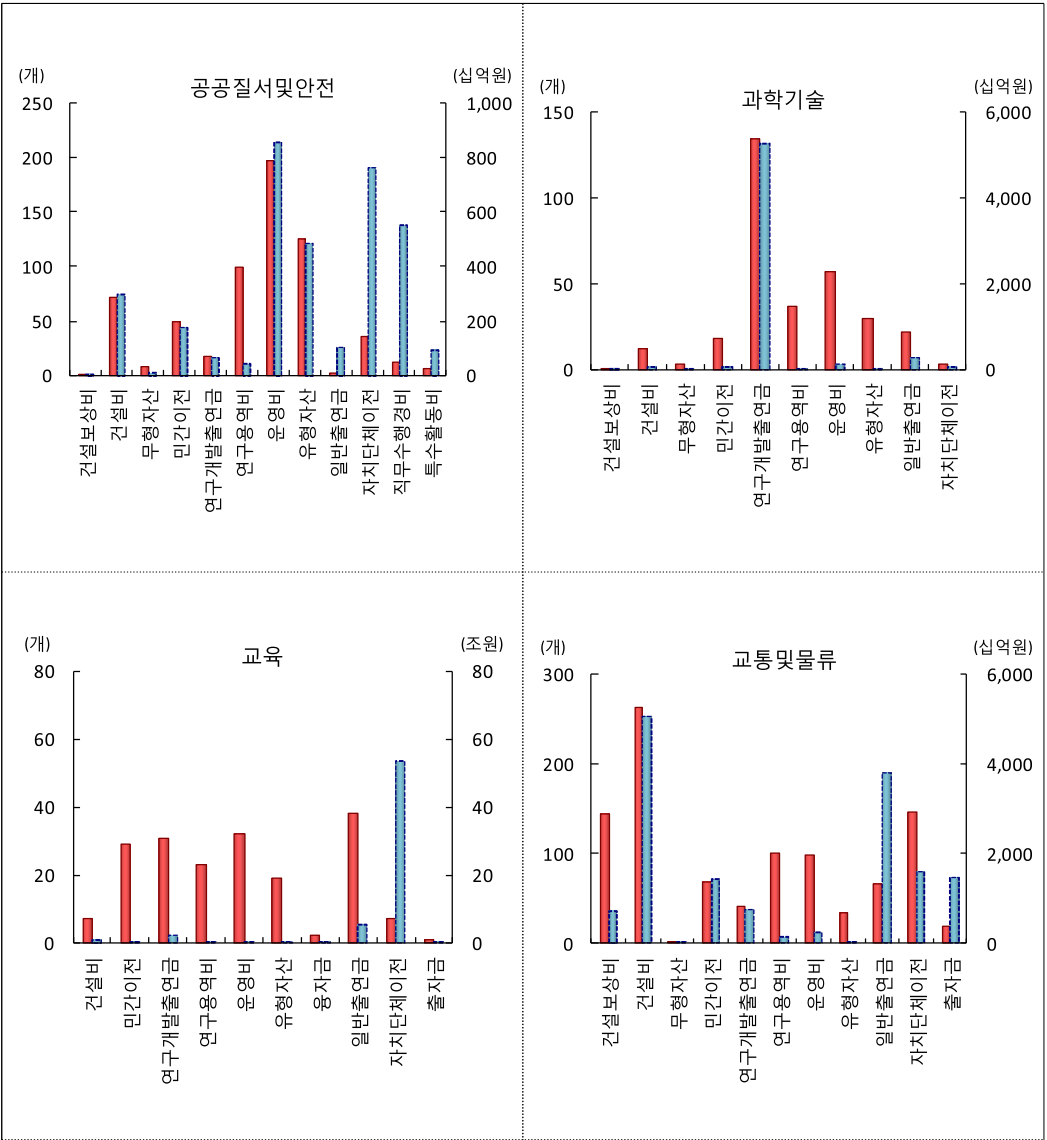
통일·외교는 109개 사업 중 운영비를 포함한 사업이 66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구용역비(44개), 일반출연금(41개), 유형자산(30개), 민간이전(16개) 등의 순이며, 예산현액 규모는 일반출연금이 0.8조원(72.3%)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운영비(0.2조원, 15.0%), 민간이전(0.09조원, 8.4%)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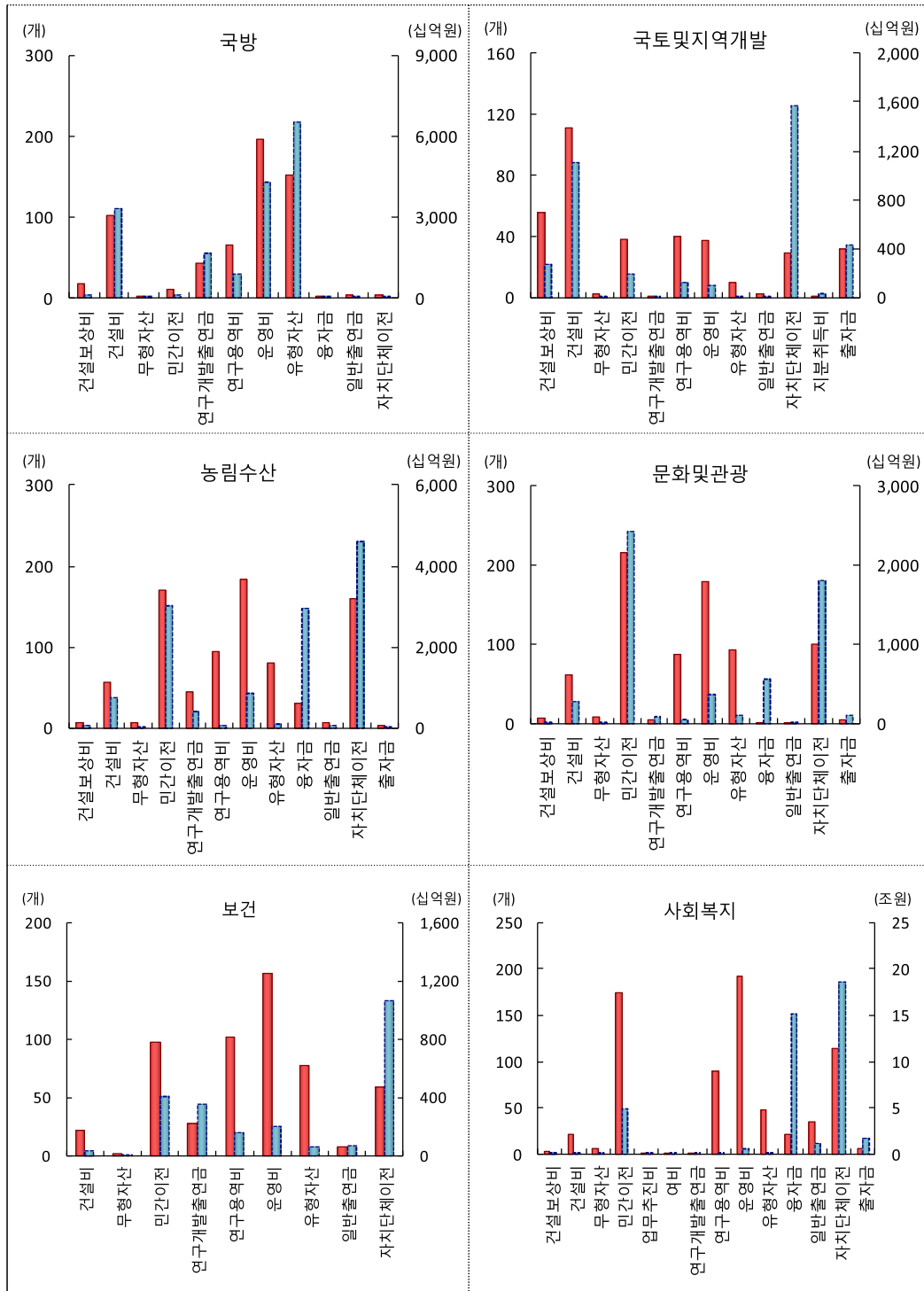
환경

마지막으로 환경은 270개 사업 중 운영비를 포함하는 사업이 137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치단체이전(119개), 연구용역비(103개), 민간이전(86개) 등의

순이다. 예산현액 규모는 자치단체이전이 4.2조원으로 6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민간이전(0.6조원, 8.8%), 일반출연금(0.4조원, 6.8%), 건설비(0.3조원, 4.1%) 등의 순이다.

〈그림 2-8〉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분야별 비목 구성(2018년)





5) 비목별 분야 구성

한편, 2018년 기준 비목별로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분야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설보상비

건설보상비는 교통및물류와 국토및지역개발에 각각 145개와 55개로 대부분의 사업이 분포해 있으며, 예산현액 규모는 교통및물류가 0.7조원으로 51.9%, 다음으로 국토및지역개발(0.3조원, 18.9%), 환경(0.2조원, 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비

건설비는 교통및물류에 262개로 사업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국토및지역개발(111개), 국방(101개), 공공질서및안정(71개) 등의 순이며, 예산현액 규모는 교통및물류가 5.1조원으로 42.3%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국방(3.3조원, 27.8%), 국토및지역개발(1.1조원, 9.2%) 등의 순이다.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공공질서및안전과 문화및관광에 각 8개 사업으로 많으며 예산현액 규모는 공공질서및안전이 0.01조원으로 전체 44.7%를 차지하였다.

민간이전

민간이전은 문화및관광이 216개 사업으로 관리대상사업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회복지(175개), 농림수산(170개),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29개), 보건(98개) 등의 순이며, 예산현액 규모로는 사회복지가 5.0조원(2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농림수산(3.0조원, 17.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2.8조원, 16.3%) 등의 순이다.

연구개발출연금

연구개발출연금은 과학기술이 134개로 사업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22개), 농림수산(44개), 국방(43개) 등 순이며 예산현액 규모는 과학기술이 5.3조원으로 31.4%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6조원, 27.7%), 교육(2.2조원, 13.4%), 국방(1.6조원, 10%) 등의 순이다.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는 일반·지방행정이 159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환경(103개), 보건(102개), 교통및물류(100개), 공공질서및안전(99개) 등의 순이며, 예산현액 규모로는 국방이 0.9조원(44.5%)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보건(0.2조원, 8.2%), 교통및물류(0.2조원, 7.8%) 등의 순이다.

운영비

운영비는 일반·지방행정이 314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공질서및안전(198개), 국방(197개), 사회복지(192개), 농림수산(183개), 문화및관광(197개) 등의 순이며, 예산현액 규모는 국방이 4.3조원으로 46.3%의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공공질서및안전(0.9조원, 9.2%), 농림수산(0.8조원, 9.1%), 통신(0.6조원, 6.1%), 사회복지(0.5조원, 5.4%) 등의 순이다.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국방이 152개로 사업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공질서및안전(126개), 일반·지방행정(104개), 문화및관광(92개), 농림수산(81개) 등의 순이며, 예산현액 규모는 국방이 6.5조원으로 85.5%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공공질서및안전(0.5조원, 6.4%), 일반·지방행정(0.1조원, 1.7%) 등의 순이다.

융자금

융자금은 농림수산이 30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회복지(21개),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3개) 등의 순으로 전반적으로 대상사업수가 많지 않으나 예산현액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를 보였는데, 그 중 사회복지가 15.2조원(57.9%)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7.1조원, 27.0%), 농림수산(11.3%) 등의 순이다.

일반출연금

일반출연금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가 77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통및물류(66개), 일반·지방행정(43개), 통일·외교(41개), 교육(38개) 등의 순이며, 예산현액 규모는 과학기술이 5.2조원으로 37.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교통및물류(3.8조원, 27.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5조원, 11.0%), 사회복지(1.2조원, 8.6%) 등의 순이다.

자치단체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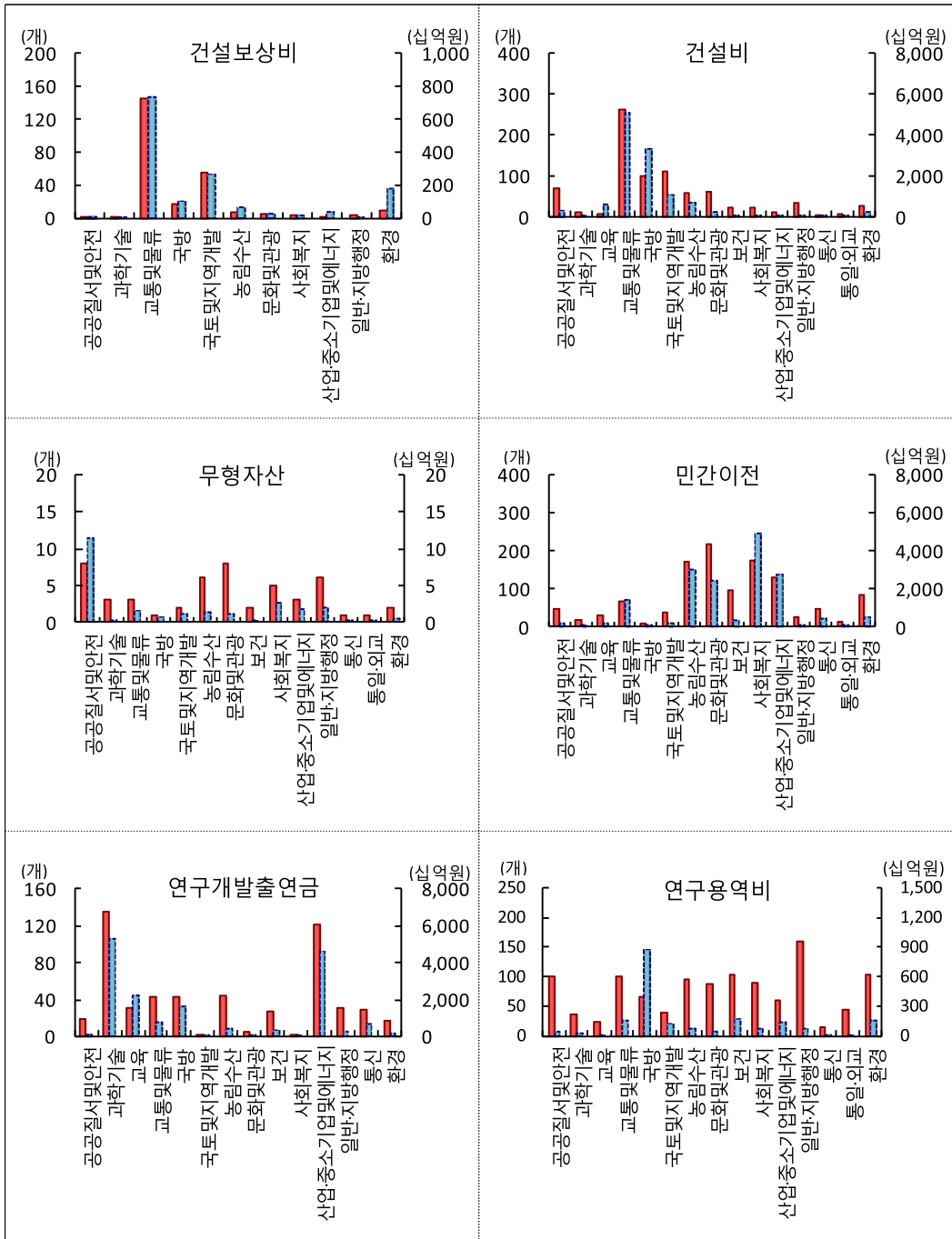
자치단체이전은 농림수산이 160개로 사업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통및물류(146개), 환경(119개), 사회복지(114개) 등의 순이며, 예산현액 규모는 교육이 7개 사업밖에 안됨에도 불구하고 53.5조원으로 39.6%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일반·지방행정(46.4조원, 34.4%), 사회복지(18.7조원, 13.8%), 농림수산(4.6조원, 3.4%)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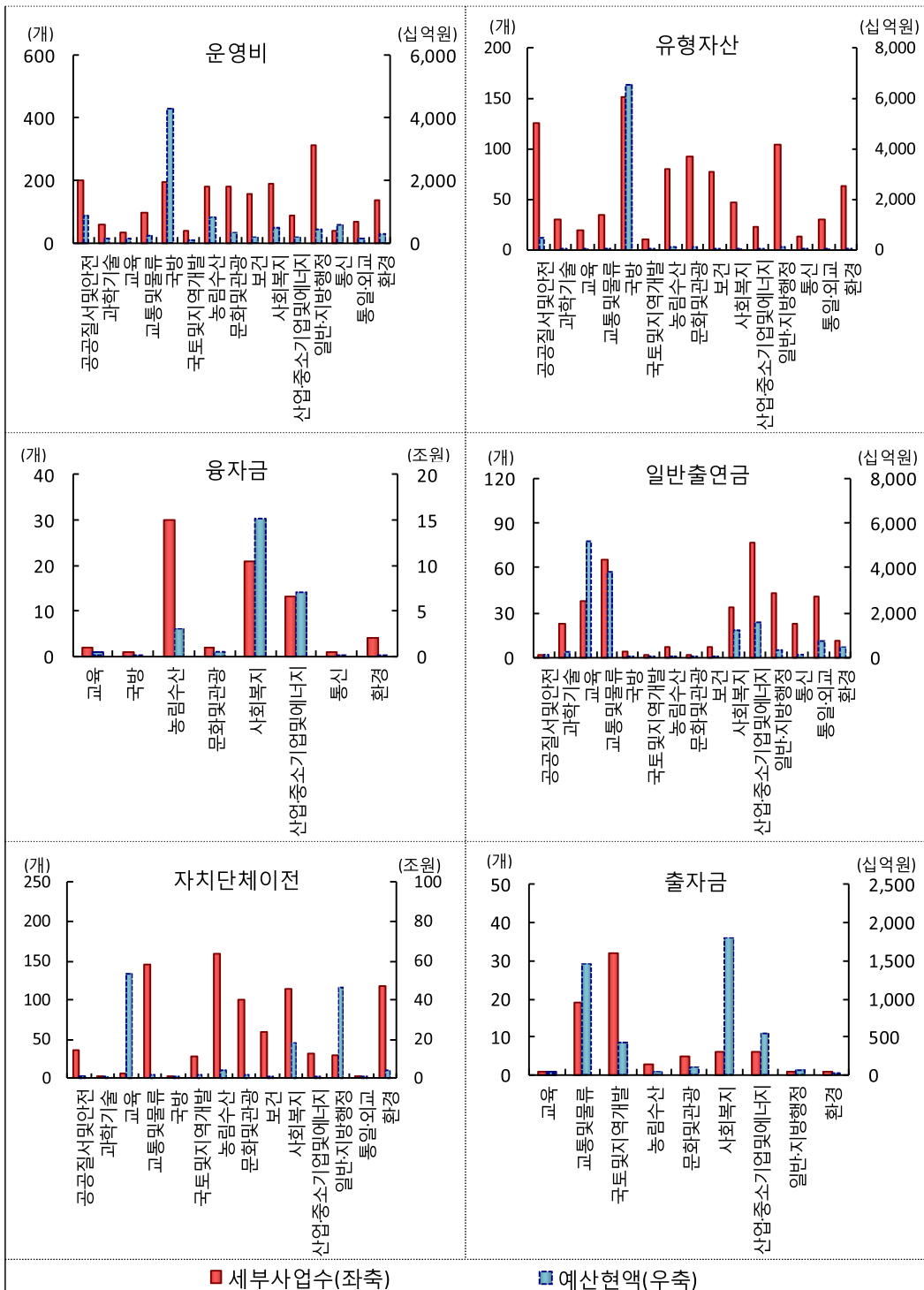
출자금

출자금은 국토및지역개발이 32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통및물류(19개), 사회복지(6개),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6개) 등의 순이며, 예산현액 규모는 사회복지가 1.8조원으로 40.0%의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교통및물류(1.5조원, 32.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0.6조원, 12.4%) 등의 순이다.

〈그림 2-9〉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비목별 분야 구성(2018년)

(단위: 개, 십억원)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6) 소관별 현황

2018년 기준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 세부사업수를 소관별로 살펴보면, 교통부가 695개로 전체 4,421개 사업 중 16.1%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46개(8.0%), 보건복지부 282개(6.5%), 산업통상자원부 272개(6.3%), 문화체육관광부 254개(5.9%), 환경부 252개(5.8%), 해양수산부 244개(5.6%), 행정안전부 203개(4.7%), 농림축산식품부 170개(3.9%), 국방부 137개(3.2%), 방위사업청 125개(2.9%), 교육부 119개(2.8%), 고용노동부 101개(2.3%), 중소벤처기업부 79개(2.2%) 등의 순이다. 예산현액 규모로는, 교육부가 62.0조원으로 전체 246.0조원 중 2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48.0조원(19.5%), 국토교통부 34.5조원(14.0%), 보건복지부 18.5조원(7.5%), 중소벤처기업부 10.1조원(4.1%), 방위사업청(3.6%), 농림축산식품부 8.7조원(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3조원(3.4%), 국방부 8.2조원(3.3%), 산업통상자원부 7.1조원(2.9%), 환경부 6.4조원(2.6%), 고용노동부 6.0조원(2.4%), 문화체육관광부 4.8조원(1.9%), 해양수산부 4.6조원(1.9%) 등의 순서이다.

Ⅲ. 집행률 추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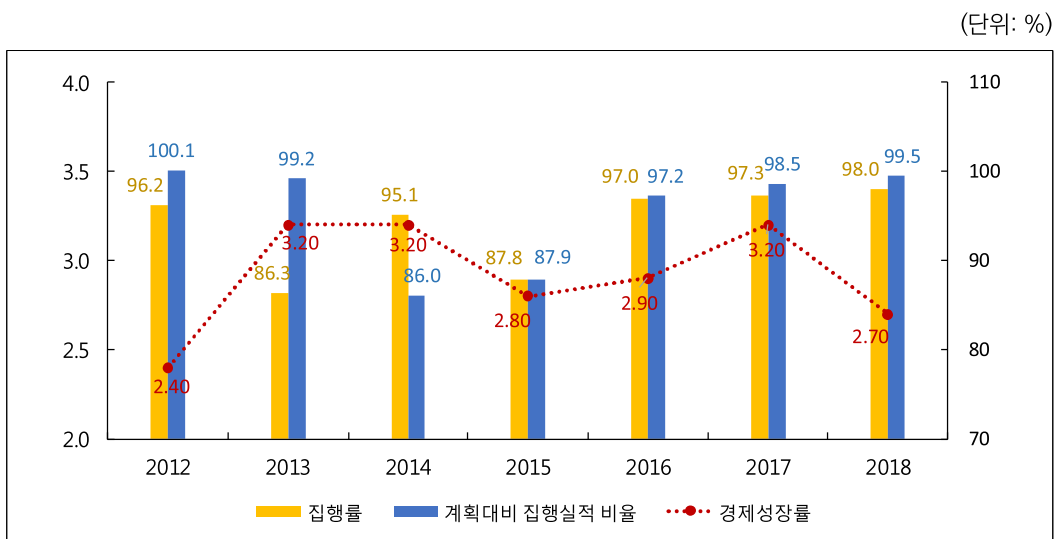
1. 연도별 추이

가. 전체 동향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연도별 집행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에는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 100.1%를 달성하며 96.2% 수준의 집행률을 보였다.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86.3%, 87.8%로 다소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연말 집행률과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 모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매월 개최되는 재정관리점검회의와 집행현장조사제도 등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연도별 집행률이나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을 경제성장률(실질 GDP 증가율)과 비교해보면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 연도별 집행실적 추이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KOSIS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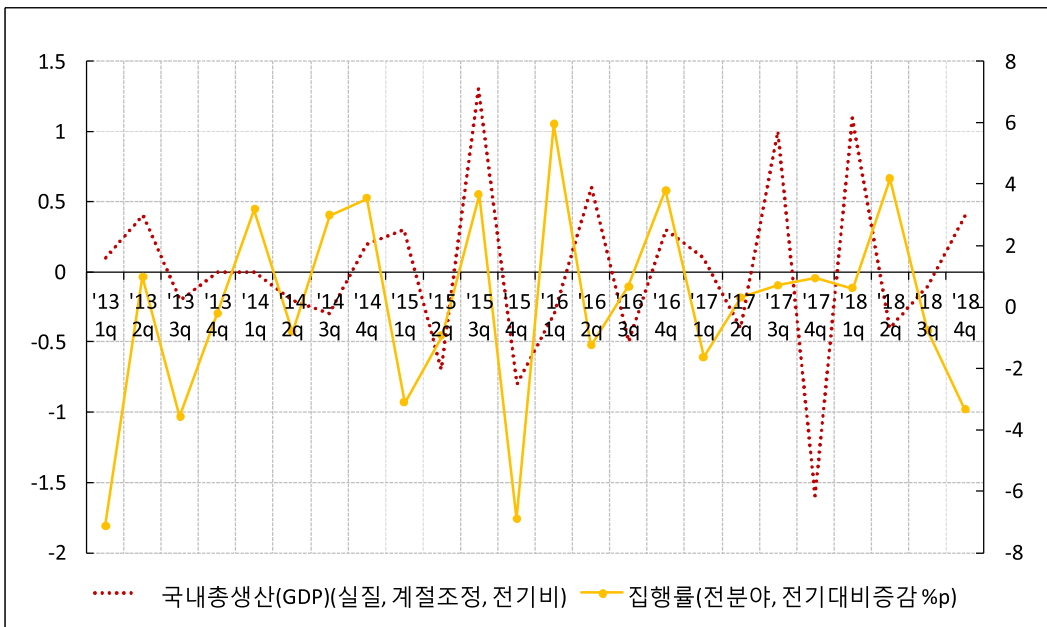
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1) 분기별 추이

분기별로 집행률과 경제성장률의 전기대비 증감 추이를 비교해보면 2015년 이전에는 어느 정도 동행성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이후부터는 특히 상반기를 위주로 한 분기 정도 집행률이 선행성을 보이며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재정의 경기보완 역할이 보다 잘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로 2016년부터 집행단계의 비효율성을 현장에서 실시간(real time)으로 점검하여 반영하는 집행현장조사제, 집행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조기집행 4대 지침 등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들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고 있다.

〈그림 3-2〉 분기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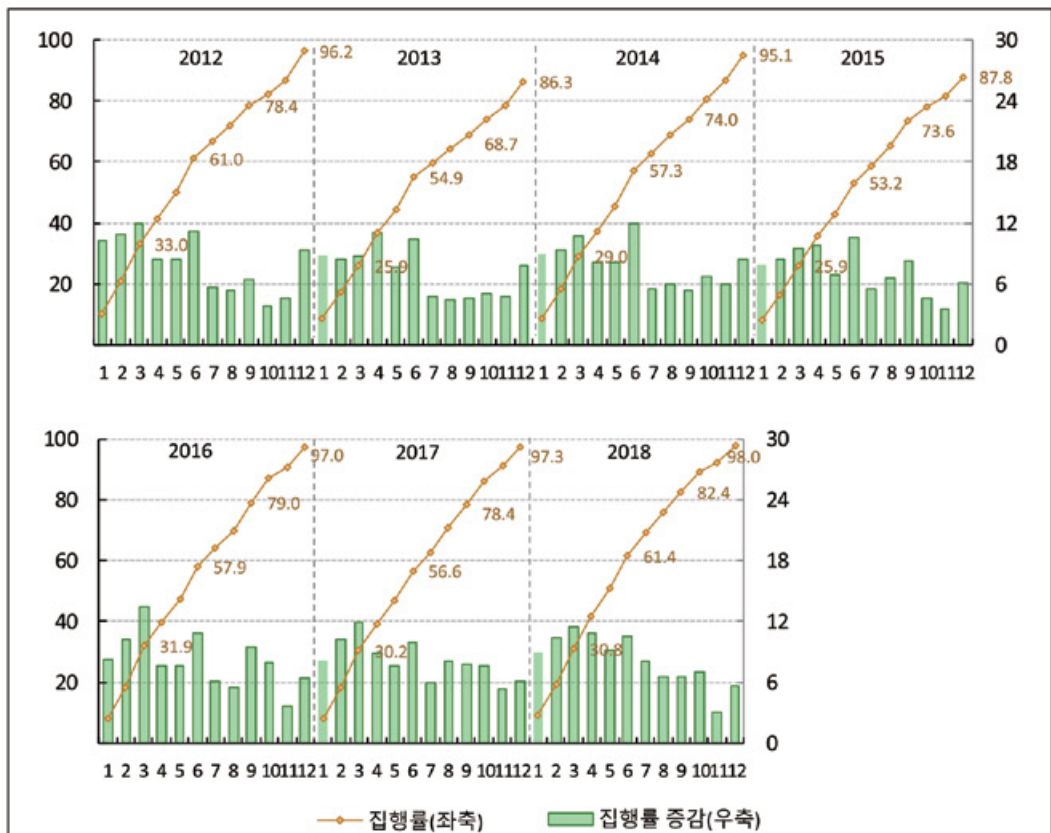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KOSIS 국가통계포털

2) 월별 추이

월별 집행실적 추이는 상반기에는 대부분 계획규모에 비해 집행실적 규모가 큰 편으로 연말로 갈수록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2014년과 2015년에는 집행계획이 실제 집행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설정되어 관리되었다. 2016년 이후에는 12월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월별 집행실적이 계획에 비해 높게 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별 집행을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상반기 집행률은 60% 내외 수준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연말 집행률이 낮았던 2013년과 2015년은 상반기 집행률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3-3〉 월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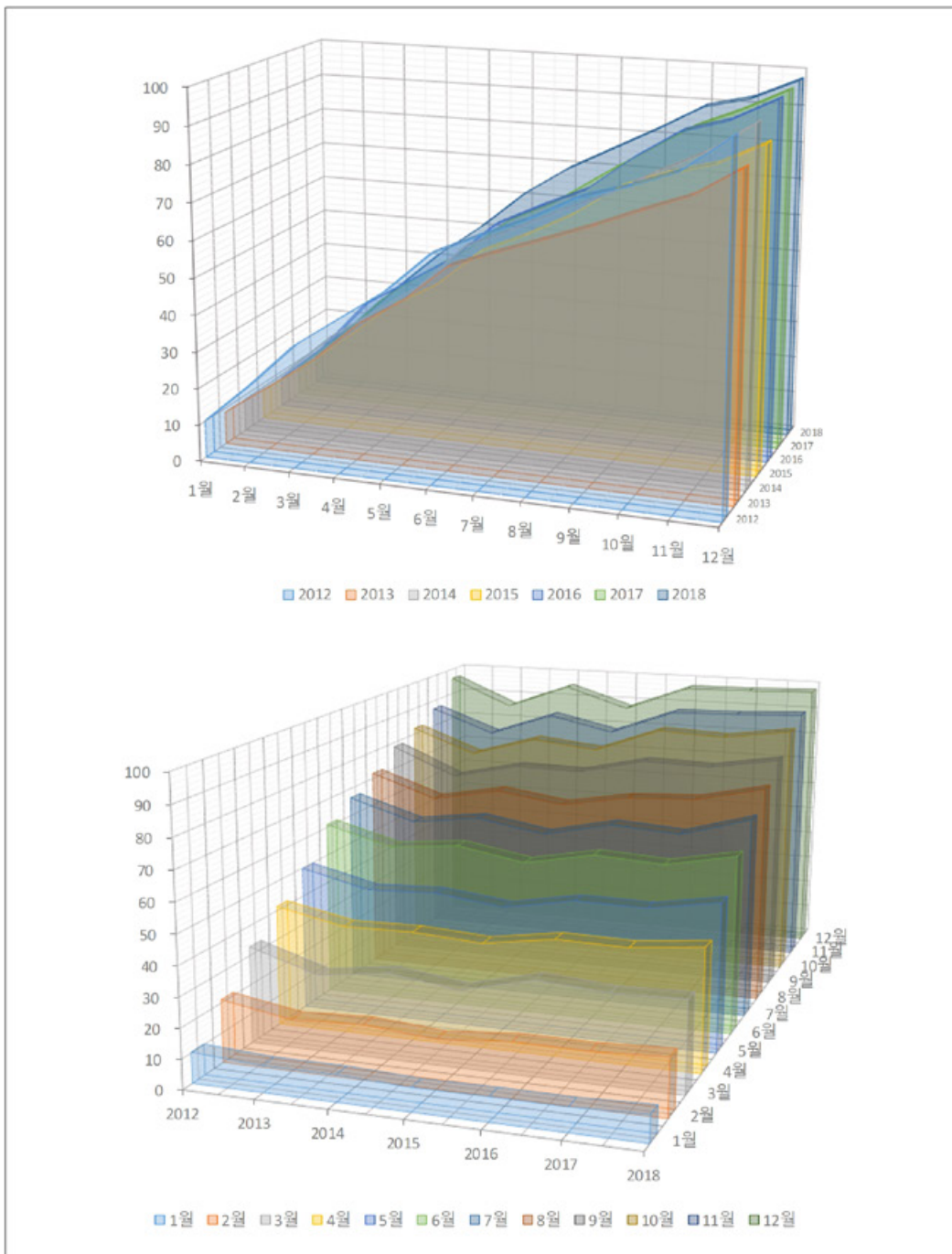
(단위: %, %p)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그림 3-4〉 월별 집행률 추이의 연도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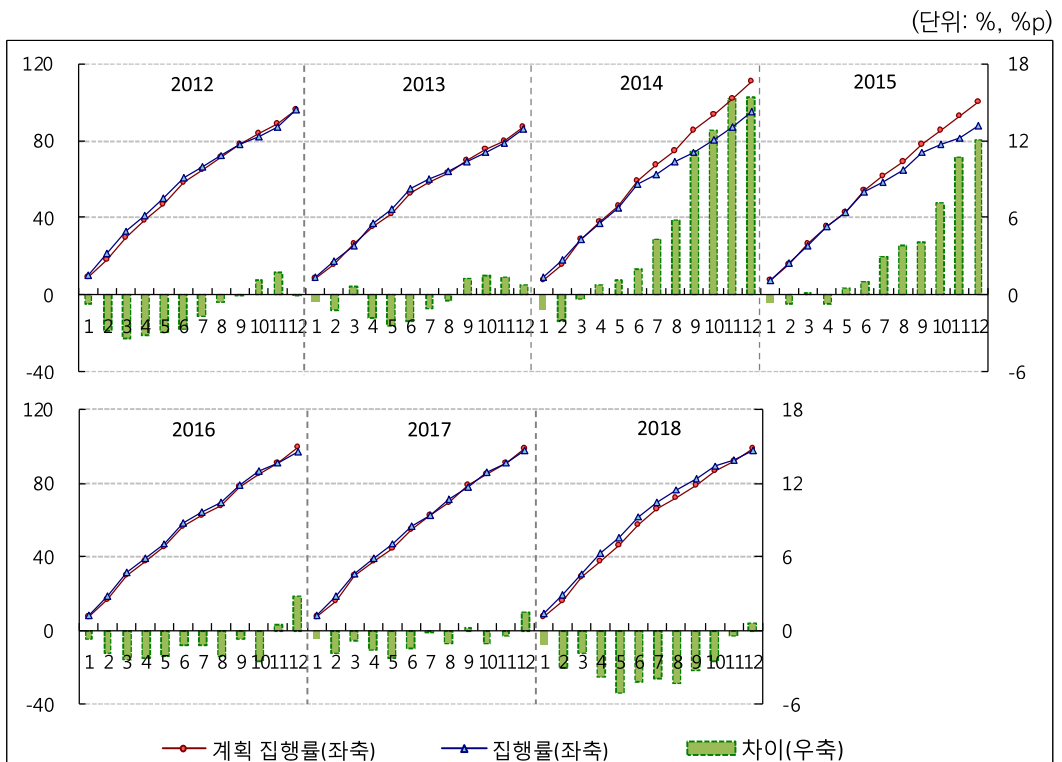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다.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

1) 월별 추이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2015년에는 하반기 이후 집행 계획과 실적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2016년 이후에는 계획과 거의 근사한 실제 집행패턴을 보이고 있다. 계획했던 수준만큼 집행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계획 수준보다 과도하게 초과집행이 일어나는 것도 적정 수준의 계획 설정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근래 들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수준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5〉 월별 계획 vs 실제 집행률 추이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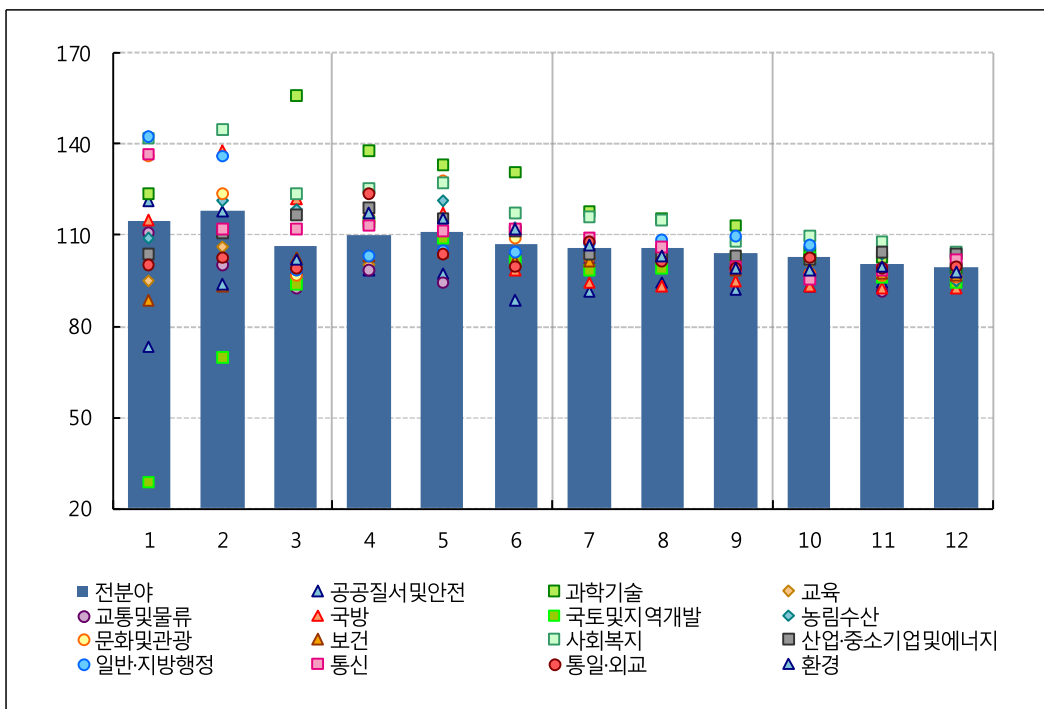
2) 분야별 비교

2018년 기준 월별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을 분야별로 나누어 들여다보면, 연초에는 분야별로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보이며 다양한 수준의 비율을 보인다 연말로 갈수록 대체로 평균에 수렴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는 과학기술 분야와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각각 계획대비 가장 높은 비율과 가장 낮은 비율의 집행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2018년 분야별 비목 구성 현황에 따르면 과학기술은 예산현액 규모의 90% 이상이 출연금(연구개발출연금 89.4%, 일반출연금, 4.6%)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토및지역개발은 건설비, 출자금, 건설보상비 등의 비중이 큰데, 출연금과 건설비 및 출자금 등의 연초 집행이 비탄력적임을 시사한다.

〈그림 3-6〉 월별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의 분야별 비교(2018년)

(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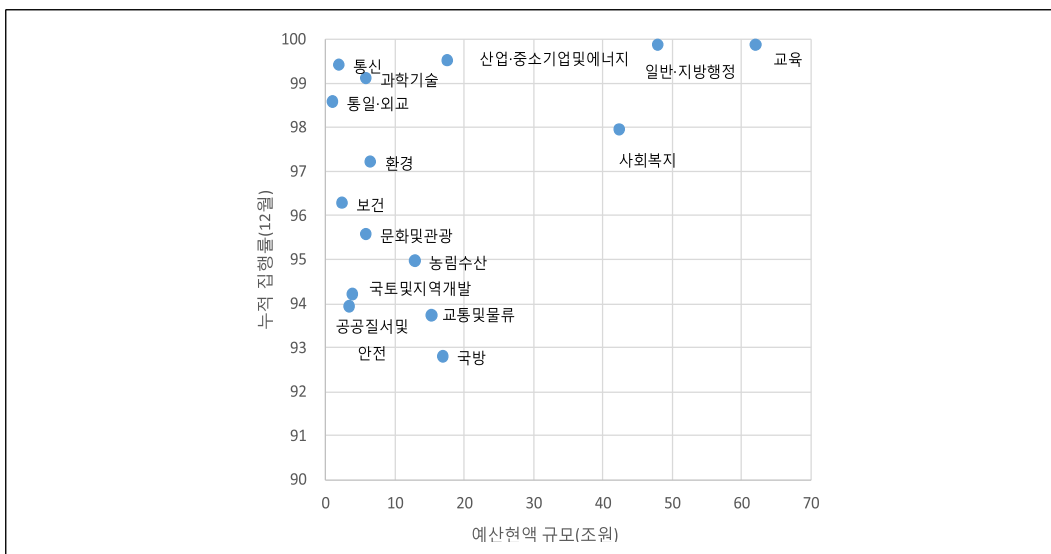
2. 분야별 추이

가. 예산현액 규모와 집행률

분야별로 2018년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예산현액 규모와 연말 집행률을 비교해보면, 예산현액 규모가 큰 교육, 일반·지방행정,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의 집행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고, 그 밖에 규모가 작은 분야의 경우에는 92%~99%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집행률은 교육 분야가 99.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반·지방행정(99.9%), 산업·중소기업·에너지(99.5%), 통신(99.4%), 과학기술(99.1%), 통일·외교(98.6%), 사회복지(98.0%), 환경(97.2%), 보건(96.3%), 문화및관광(95.6%), 농림수산(95.0%), 국토및지역개발(94.2%), 공공질서및안전(93.9%), 교통및물류(93.7%), 국방(92.8%)의 순서이다.

〈그림 3-7〉 분야별 예산현액 규모와 연말 집행률 현황(2018년)

(단위: %, 조원)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나. 월별 집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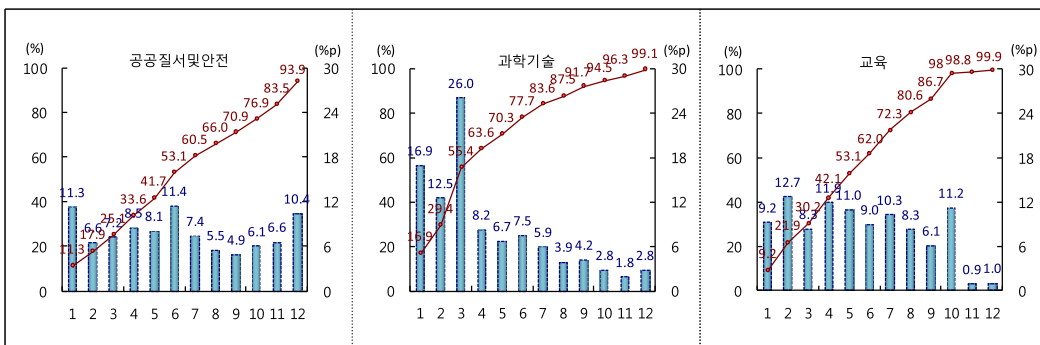
1) 월별 집행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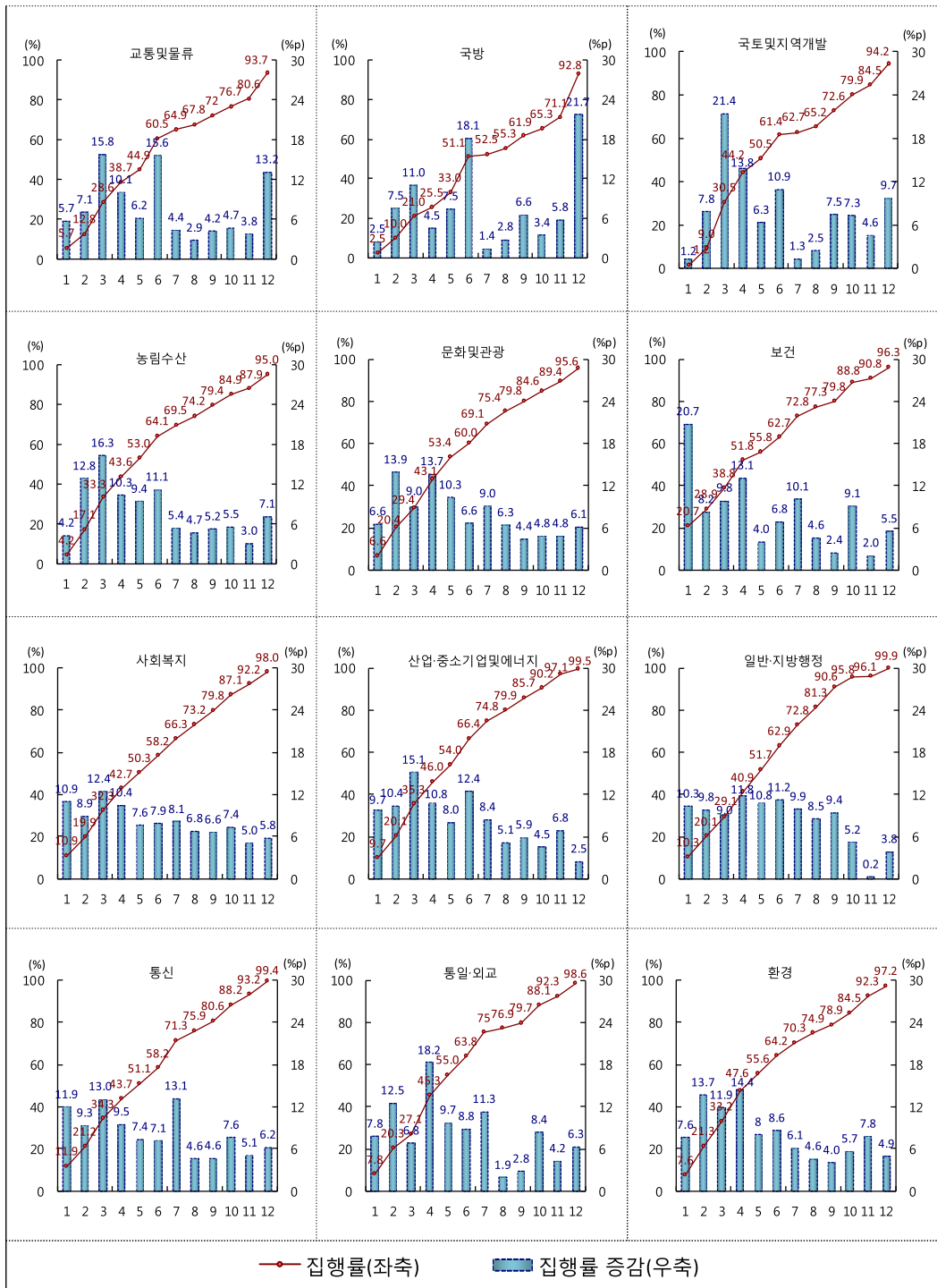
2018년 기준 월별 집행률 추이를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과학기술(16.9%), 보건(20.7%), 사회복지(10.9%), 일반·지방행정(10.3%) 등 이전지출의 비중이 큰 분야들은 연초(1월) 집행률이 10% 이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다. 특히, 연구개발출연금 비중이 89.4%를 차지하는 과학기술 분야는 1/4분기에 집행률이 이미 55.4%를 달성하여 다른 분야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상반기(6월)까지 집행률이 55% 미만인 분야는 국방(51.1%), 공공질서및안전(53.1%) 등이다.

연말 집행률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분야로는 국방(21.7%p), 교통및물류(13.2%p), 공공질서및안전(10.4%p), 국토및지역개발(9.7%p) 등이며, 주로 연구개발출연금, 자치단체이전과 같은 이전지출 비중이 큰 교육(1.0%p),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2.5%p), 과학기술(2.8%p) 등의 분야의 연말 집행률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에 그쳐 차이를 보였다.

〈그림 3-8〉 분야별 예산현액 대비 월별 집행률 현황(2018년)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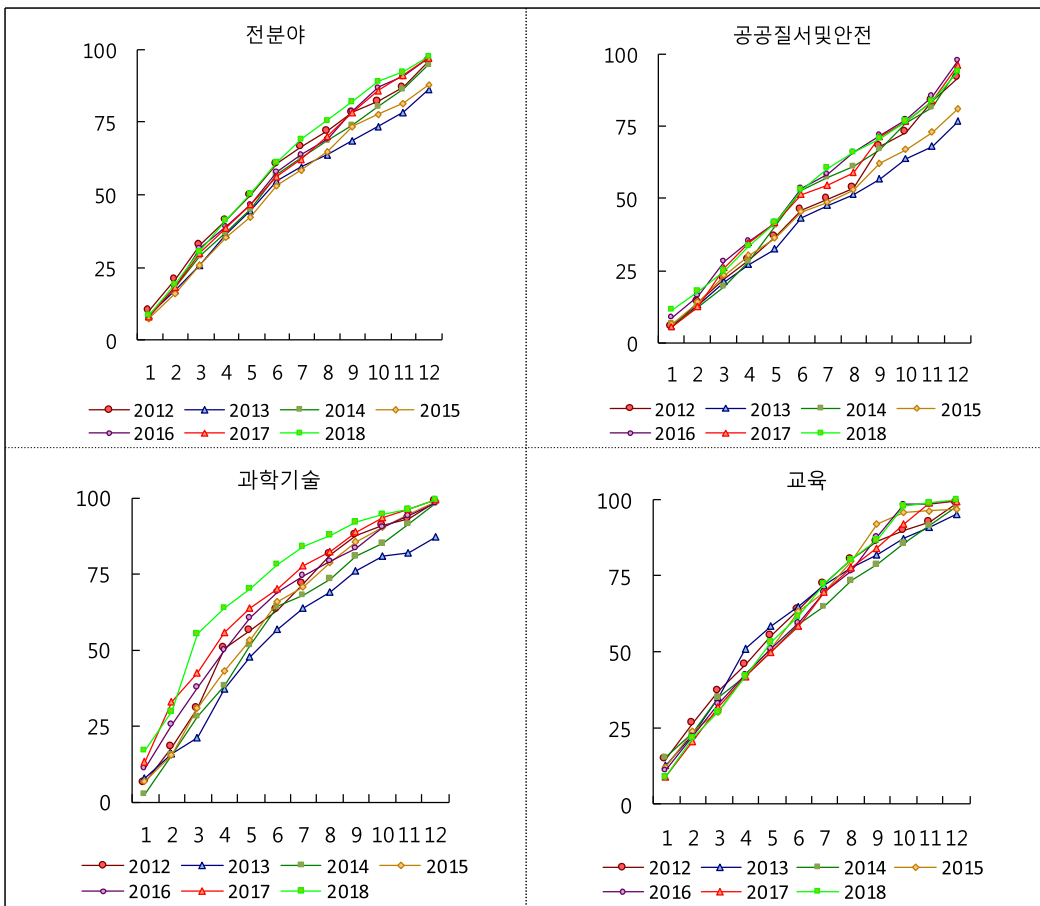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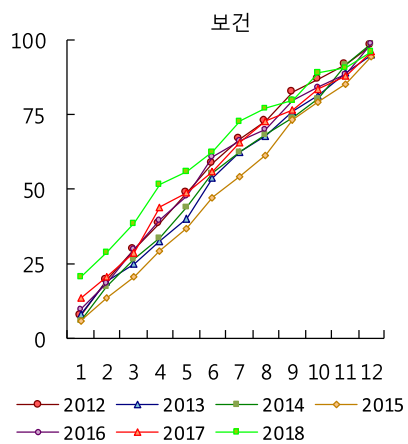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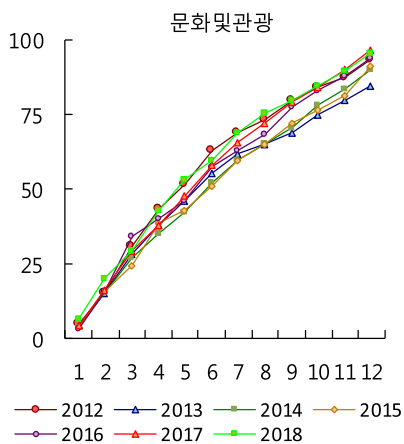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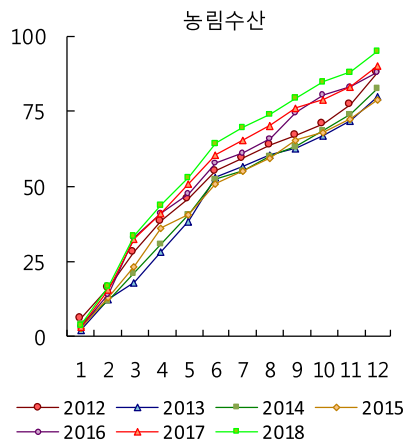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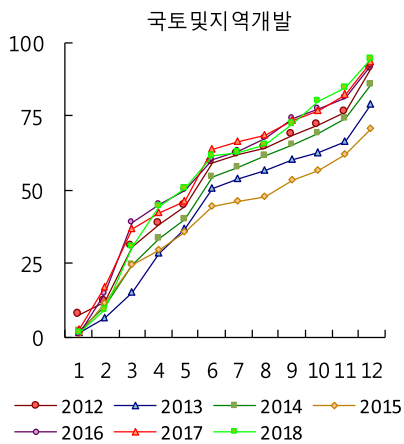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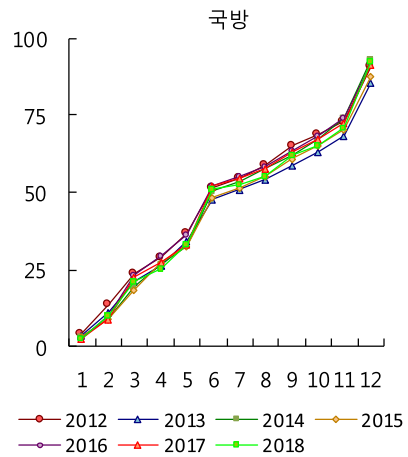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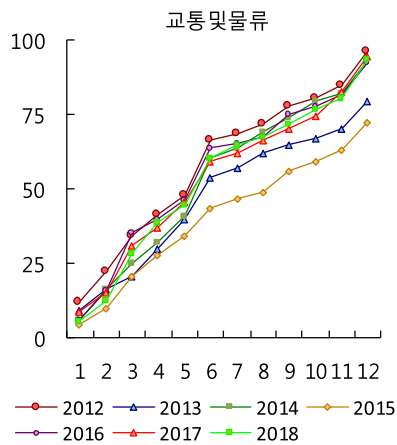
2) 연도별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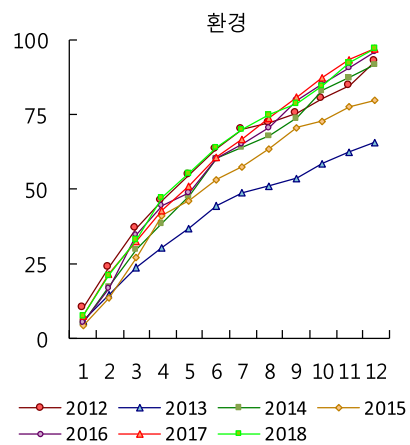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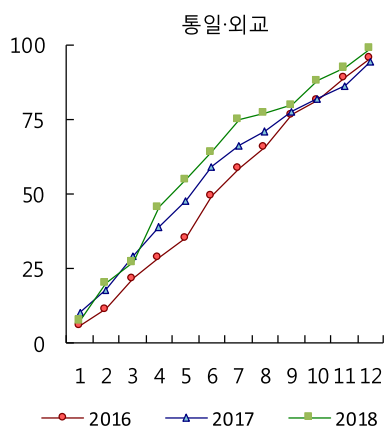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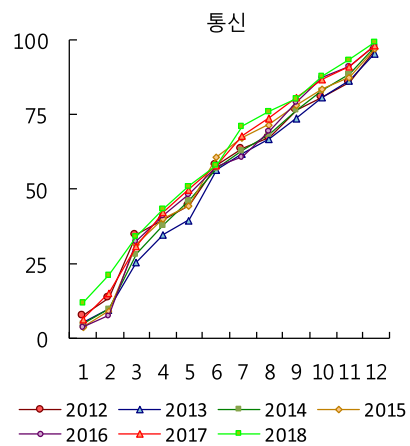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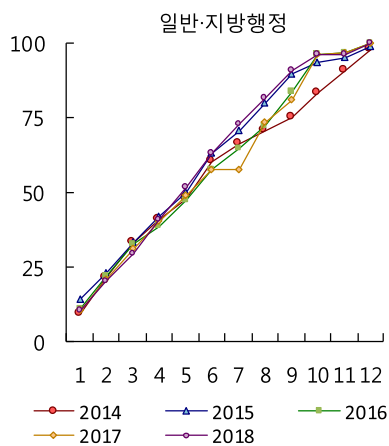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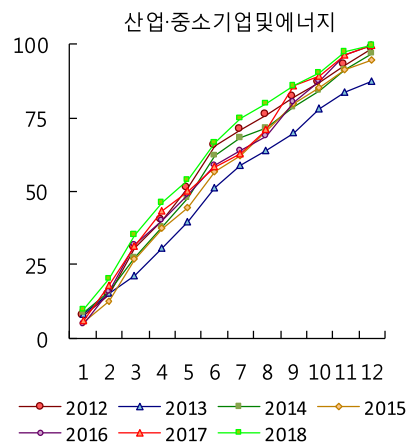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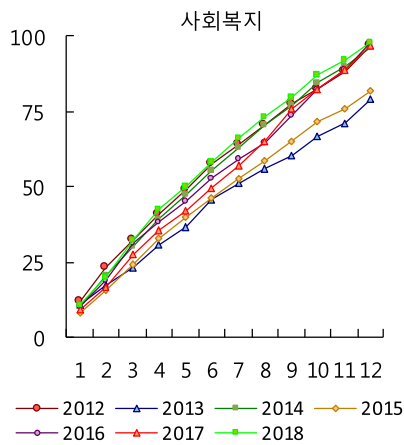
이와 같은 분야별 집행률의 월별 패턴은 각 연도에 따라 수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 왔다. 즉, 과학기술, 보건, 사회복지, 일반·지방행정, 통신 등 분야는 연초 집행실적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국방,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상반기까지의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다. 또한 국방, 교통및물류, 공공질서및안전,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연말 집중 집행의 형태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림 3-9〉 분야별 예산현액 대비 월별 집행률 추이(2012-18년)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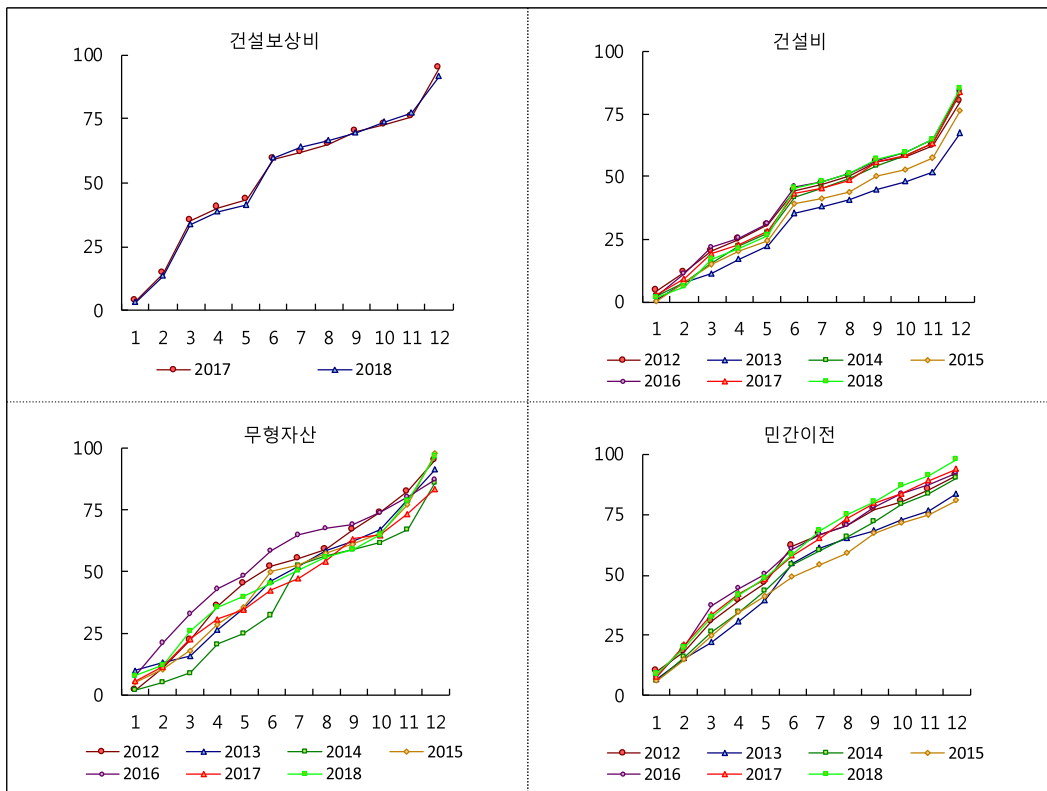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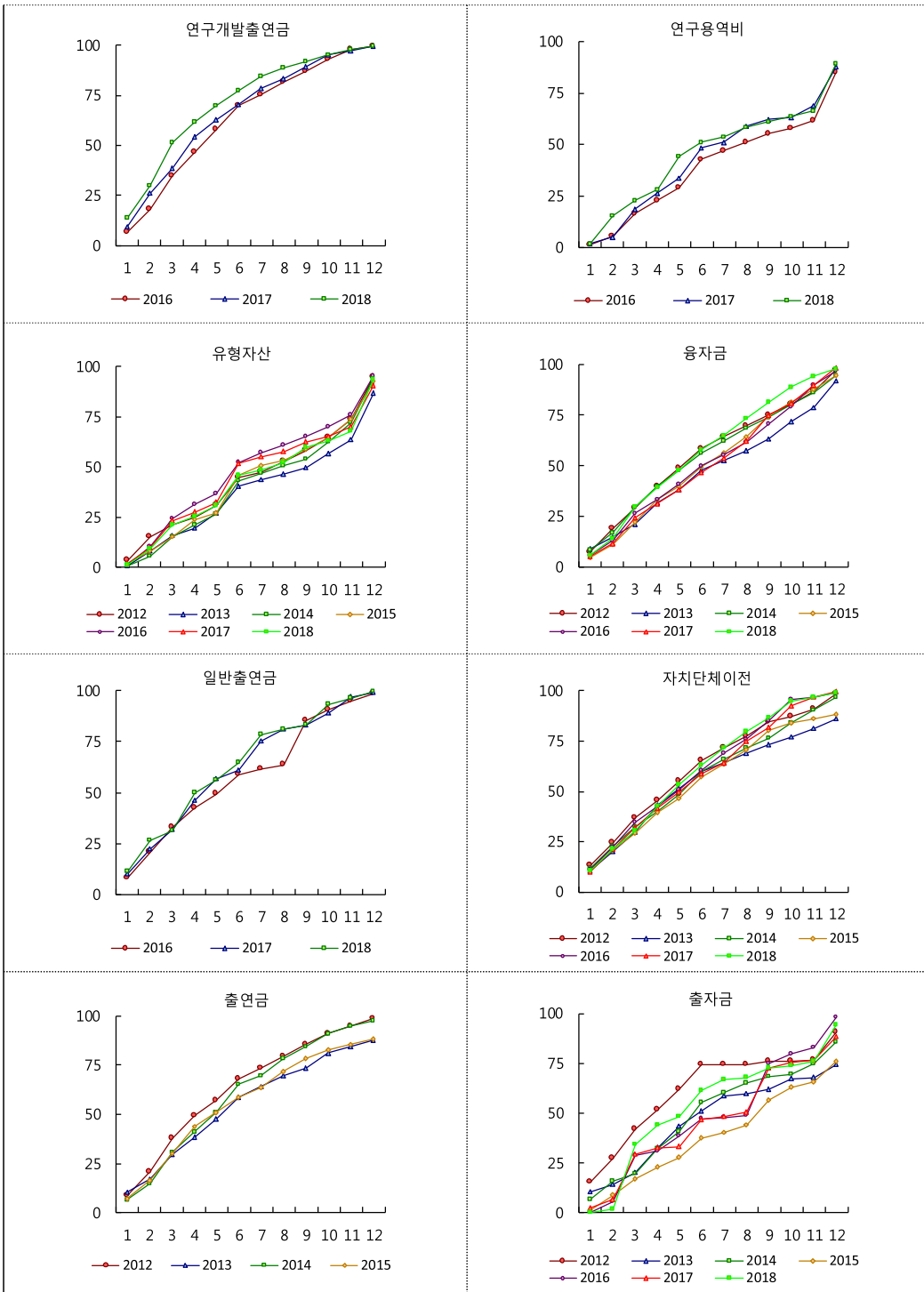
3. 비목별 추이

2018년 기준 월별 집행률 추이를 비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건설보상비, 건설비, 무형자산,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운영비, 유형자산, 출자금 등은 대체로 상반기말(6월)과 연말(12월)에 집행률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반면 연구개발출연금, 일반출연금, 자치단체이전, 출연금 등은 연말 집행률이 전월 대비 상대적으로 소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또한 민간이전, 운영비, 용자금 등은 연중 집행실적이 균등한 반면, 건설보상비, 건설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유형자산, 출자금 등은 3, 6, 12월에 특히 많이 집행되는 등 불균등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였다.

〈그림 3-10〉 주요 비목별 예산현액 대비 월별 집행률 추이(2012-18년)

(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Ⅳ. 유형별 집행 특성 분석

1. 집행형태에 따른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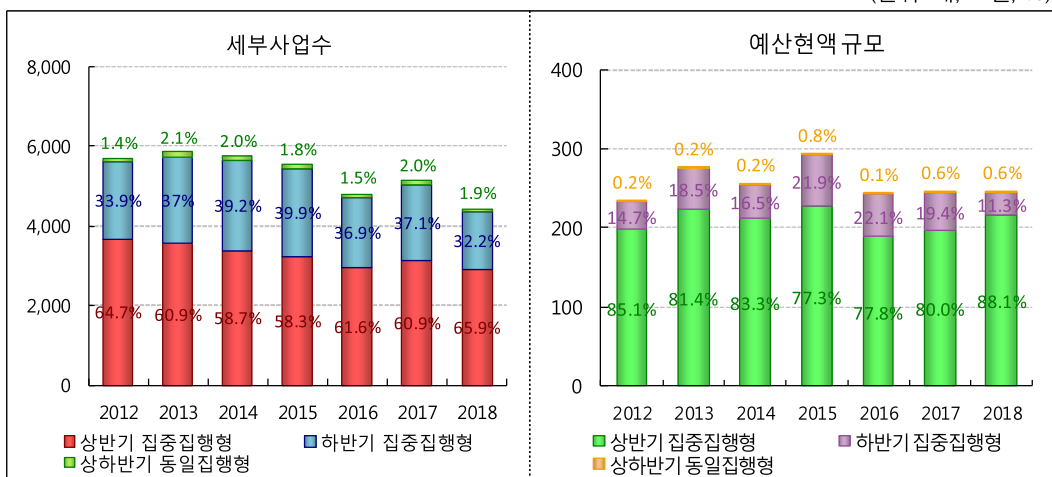
가. 반기별 집중집행형

1) 사업 현황

집행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기준으로 사업 유형을 구분하였다. 각 세 부사업단위에 대하여 상반기(1월~6월) 집행실적이 하반기(7월~12월) 집행실 적보다 크면 상반기 집중집행형, 작으면 하반기 집중집행형, 같으면 상하반기 동일집행형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2018년 기준 상반기 집중집행형 2,916개 (65.9%), 하반기 집중집행형 1,428개(32.2%), 상하반기 동일집행형 84개(1.9%) 이며, 이 사업유형별 예산현액의 규모는 각각 216.6조원(88.1%), 27.9조원 (11.3%), 1.5조원(0.6%)이다.

〈그림 4-1〉 반기별 집중집행 유형 구분에 따른 사업 현황

(단위: 개,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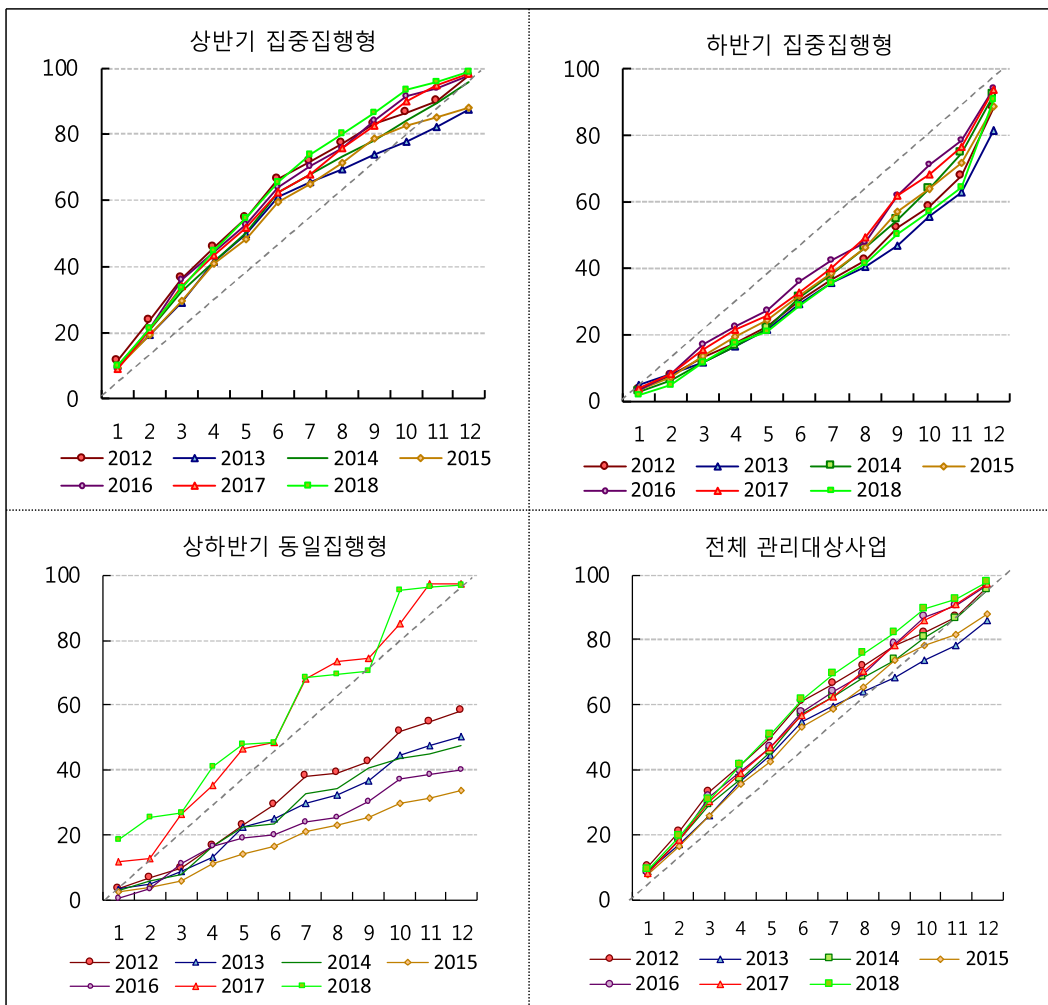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연중 집행형태 비교

세 유형의 연중 집행형태가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월별 집행을 추이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상반기 집중집행형과 하반기 집중집행형 사업 모두 연말 시점에서는 전체 평균에 근접한 집행률 수준을 보이지만 회계연도 중 집행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있어서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림 4-2〉 반기별 집중집행 유형 구분에 따른 연중 집행형태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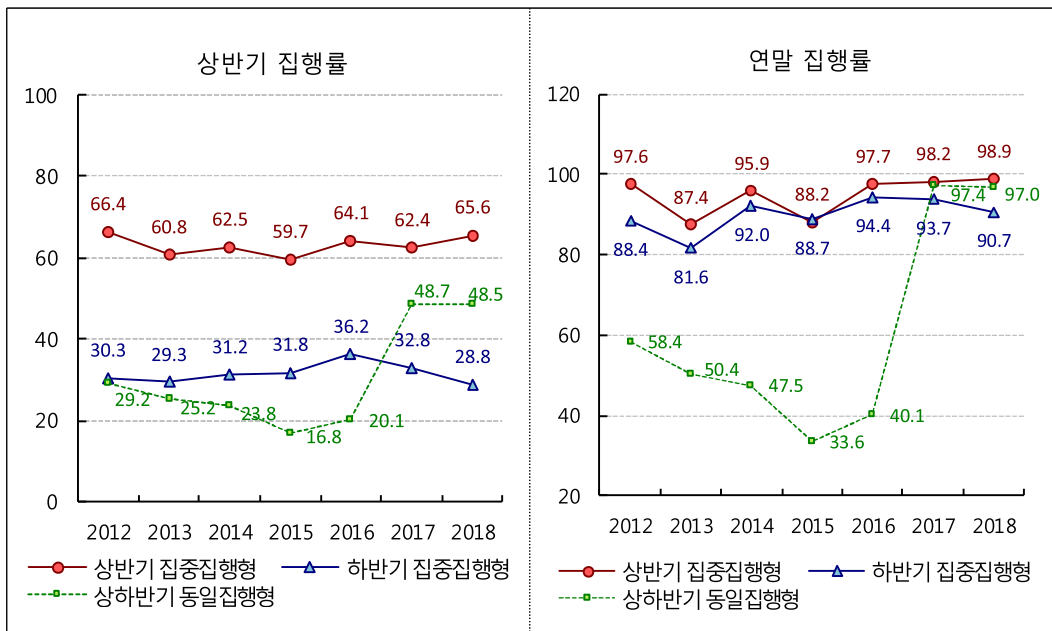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연말 집행률 추이

상반기 집중집행형과 하반기 집중집행형의 상반기 집행률은 각각 60%와 30%대 수준이다. 연말 집행률은 상반기 집중집행형 사업의 경우 2013년과 2015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95% 이상의 수준이고, 하반기 집중집행형은 90%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 유형의 연도별 집행률 추이를 비교해보면, 상반기와 연말 모두 상반기 집중집행형 사업의 집행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이후 상반기 집중집행형 사업의 집행률과 집행기여도가 다소 증가하는 모습이다.

〈그림 4-3〉 반기별 집중집행 유형 구분에 따른 집행률 추이 비교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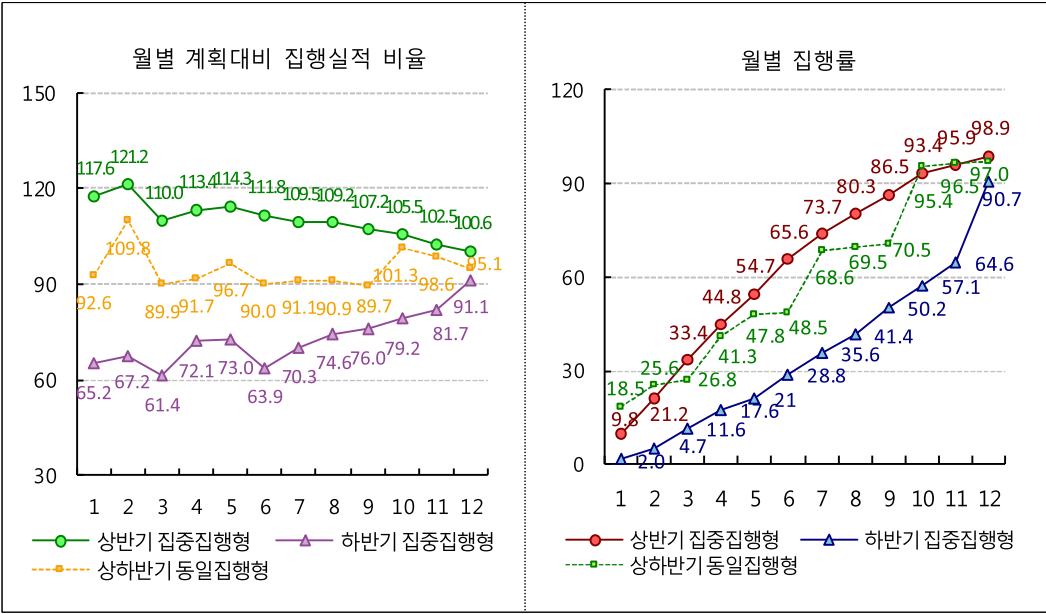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월별 집행률 현황

상반기 집중집행형 사업들은 연초에 집행률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반면

하반기 집중집행형 사업은 연말에 가까워져서야 집행률이 크게 상승하며, 상반기 동일집행형은 불규칙적으로 한번씩 상승하는 모습이다. 상반기 집중집행형 사업을 제외한 하반기 집중집행형 사업과 상하반기 동일집행형 사업은 대체로 계획한 규모만큼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들에 해당한다. 하반기 집중집행형 사업의 경우 11월까지도 집행기여율이 7.9% 수준 밖에 못 미치고 있는데, 예산현액 규모의 비중이 11.3%임을 감안하였을 때, 이 그룹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집행실적이 11월까지도 전체 집행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4〉 반기별 집중집행 유형 구분에 따른 월별 집행 현황(2018년) (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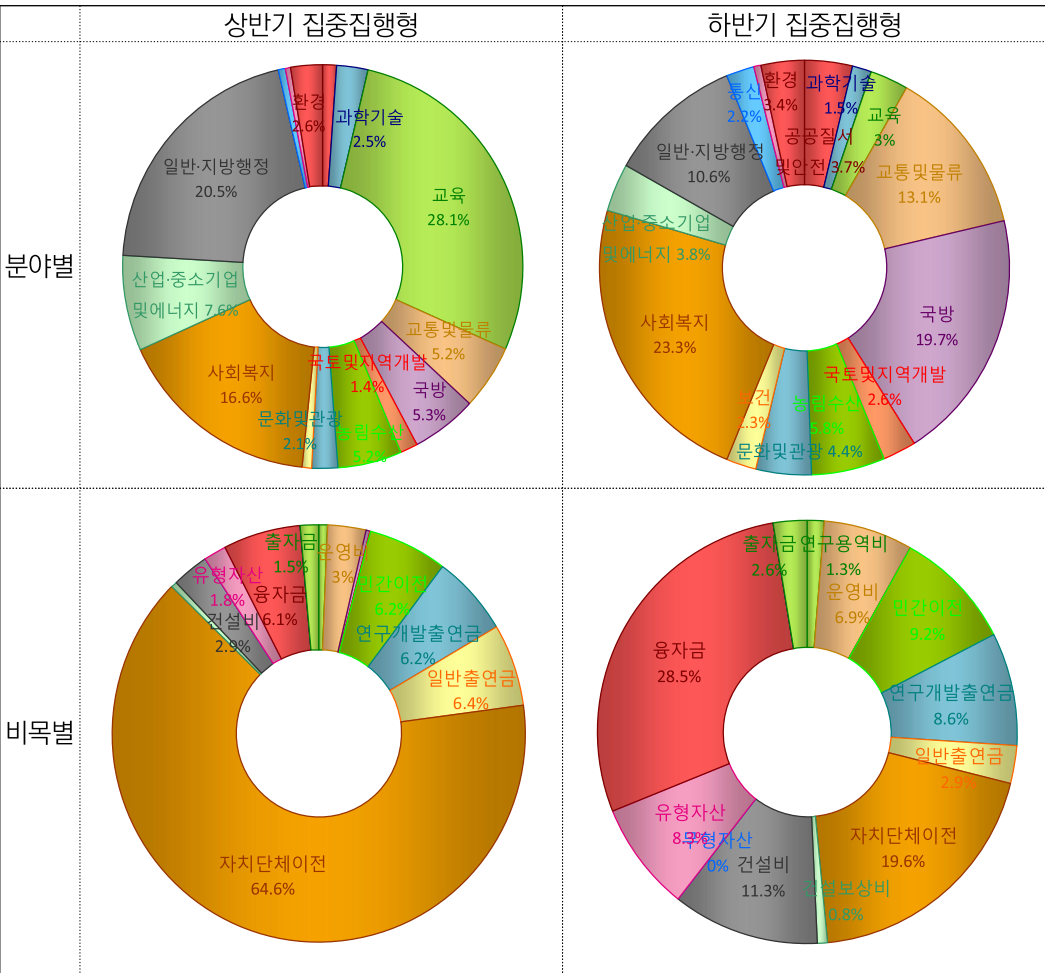
5) 유형별 사업 특성

세 유형의 분야별 예산현액 구성을 살펴보면, 상반기 집중집행형 사업은

상대적으로 교육, 일반·지방행정,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가, 하반기 집중 집행형 사업은 국방, 교통및물류, 사회복지 분야가, 상하반기 동일집행형 사업은 교육, 교통및물류,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비목별로는 상반기 집중집행형 사업은 자치단체이전 등의 비중이, 하반기 집중집행형 사업은 융자금, 유형자산, 건설비 등의 비중이, 상하반기 동일집행형 사업은 건설비, 건설보상비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림 4-5〉 반기별 집중집행 유형 구분에 따른 예산현액의 구성(2018년)

(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6) 유형별 세부사업 사례

상반기 집중집행형 사업

2018년 상반기 집행을 차이에 예산현액 규모 비중을 가중치로 곱한 상반기 집행기여도 상위 15개 사업은 <표 4-1>과 같다. 이 사업들은 상반기에 큰 규모로 집행함으로써 전체 상반기 집행률을 끌어올린 사업들로 해석할 수 있다. 자치단체이전, 융자금 등 비중이 큰 사업들이 다수로 지방교부세, 교육재정 교부금 등 자치단체교부금, 의료급여경상보조, 교육·보육·양육 지원, 창·취업 지원, 농산어촌개발 지원 등 주요 민생안전 사업이 해당된다.

<표 4-1> 상반기 집행기여도 격차 상위 15개 사업(2018년)

	세부사업	분야	부문	관리 대상 사업 연수 (년)	예산 현액 규모 (조원)	12월 집행률 (%)	상반기 집행률 (%)	하반기 집행률 (%)	상하 반기 집행률 격차 (%p)	상하 반기 집행 기여도 격차 (%p)	비목 구성
1	보통교부세	일반· 지방행정	지방행정· 재정지원	2	42.5	100.0	65.2	34.8	30.4	5.256	자치단체이전 100%
2	보통교부금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4	48.2	100.0	62.1	37.9	24.1	4.727	자치단체이전 100%
3	의료급여경상보조	사회복지	기초생활 보장	7	5.6	100.0	70.3	29.7	40.6	0.925	자치단체이전 100%
4	주택구입· 전세자금(융자)	사회복지	주택	3	8.8	99.9	57.4	42.5	14.9	0.533	융자금 100%
5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회복지	보육·가족 및여성	7	3.4	100.0	67.7	32.3	35.4	0.487	자치단체이전 100%
6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2	3.9	100.0	60.0	40.0	20.0	0.316	자치단체이전 100%
7	창업기업자금 (융자)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진흥· 고도화	5	2.0	100.0	68.5	31.5	37.0	0.308	융자금 100%
8	개인기초연구 (과학기술부)(R&D)	과학기술	기술개발	2	0.8	100.0	97.5	2.5	94.9	0.298	연구개발출연금 100%
9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교육	유아및초중 등교육	4	0.8	100.0	91.0	9.0	82.0	0.277	자치단체이전 100%
10	민간인대(융자)	사회복지	주택	3	1.9	100.0	65.8	34.2	31.7	0.251	융자금 100%
11	산지유통종합자금 (융자)	농림수산	농업·농촌	5	0.6	96.1	92.9	3.3	89.6	0.218	융자금 100%
12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진흥· 고도화	6	0.5	100.0	100.0	0.0	100.0	0.183	출자금 100%
13	맞춤형 국가정학금 지원	교육	고등교육	4	4.0	99.9	55.5	44.4	11.1	0.183	일반출연금 100%
14	일반농산어촌개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농림수산	농업·농촌	7	1.0	83.3	61.3	22.0	39.4	0.164	자치단체이전 100%
15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사회복지	보육·가족 및여성	5	0.9	100.0	70.6	29.4	41.3	0.158	자치단체이전 1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하반기 집중집행형 사업

상하반기 집행기여도 하위 15개 사업은 <표 4-2>와 같다. 이 사업들은 하반기 집중집행형 사업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상반기와 비교하여 하반기에 더 큰 규모로 집행하여 전체 하반기 집행률에 영향을 미친 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사회복지 분야의 주택과 노동 부문, 국방 분야의 방위력개선 부문,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의 지역및도시 부문, 교통및물류 분야의 해운·항만 부문 사업들로, 자치단체이전, 융자금, 유형자산, 출자금, 민간이전 등의 비중이 큰 사업들이다.

<표 4-2> 상하반기 집행기여도 격차 하위 15개 사업(2018년)

세부사업	분야	부문	관리 대상 사업 연수 (년)	예산 현액 규모 (조원)	12월 집행률 (%)	상반기 집행률 (%)	하반기 집행률 (%)	상하 반기 집행률 격차 (%p)	상하 반기 집행 기여도 격차 (%p)	비목 구성
1 부동산교부세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2	1.8	100.0	24.7	75.3	-50.7	-0.367	자치단체이전 100%
2 아동수당 지급	사회복지	보육·가족 및여성	1	0.7	98.9	1.2	97.7	-96.5	-0.274	자치단체이전 99.7%
3 집주인임대주택 사업	사회복지	주택	1	0.3	99.4	2.0	97.3	-95.3	-0.127	융자금 100%
4 공공임대(용자)	사회복지	주택	2	1.5	99.9	40.6	59.3	-18.7	-0.115	융자금 100%
5 고용창출장려금	사회복지	노동	1	0.5	86.7	19.4	67.3	-47.9	-0.107	민간이전 99.1%
6 울산급 Batch-II	국방	방위력개선	1	0.5	94.1	26.8	67.3	-40.6	-0.089	유형자산 99.1%
7 현무2차성능개량	국방	방위력개선	1	0.3	96.5	18.3	78.3	-60.0	-0.080	유형자산 66.8%
8 행복주택출자	사회복지	주택	3	1.0	74.4	27.7	46.7	-19.0	-0.076	출자금 76.0%
9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1	0.7	100.0	35.8	64.2	-28.3	-0.076	자치단체이전 100%
10 철마-II 성능개량	국방	방위력개선	1	0.2	98.1	0.0	98.1	-98.1	-0.068	유형자산 96.8%
1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회복지	노동	2	0.4	98.8	32.1	66.8	-34.7	-0.060	민간이전 90.6%
12 도시재생지원 (출자)	사회복지	주택	2	0.2	72.1	0.0	72.1	-72.1	-0.059	출자금 100%
13 도시재생사업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1	0.3	92.4	22.9	69.4	-46.5	-0.057	자치단체이전 100%
14 한국해양진흥 공사출자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1	0.1	100.0	0.0	100.0	-100.0	-0.053	출자금 100%
15 K-2전차	국방	방위력개선	1	0.2	60.7	0.2	60.5	-60.3	-0.049	유형자산 98.9%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하반기 동일집행형 사업

한편, 예산현액 기준으로 한 상하반기 동일집행형 상위 15개 사업은 <표 4-3>과 같다. 이 사업들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동일한 규모로 집행을 한 사업들로 SOC 관련 사업이 많으며,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 형태의 사업들이 많았다. 일반출연금의 비중을 100%로 하는 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자차단체이전, 연구개발출연금, 민간이전의 비중을 100%로 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4-3> 상하반기 동일집행형 예산현액 규모 상위 15개 사업(2018년)

	세부사업	분야	부문	관리 대상 사업 수 (년)	예산 현액 규모 (조원)	6월 집행률 (%)	12월 집행률 (%)	상(하) 반기 집행 기여도 (%p)	6월 계획 대비 집행률 (%)	12월 계획 대비 집행률 (%)	비목 구성
1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교육	고등교육	5	0.44	50.0	100.0	0.089	100.0	100.0	일반출연금 100%
2	소방안전교부세	일반· 지방행정	지방행정· 재정지원	2	0.42	50.0	100.0	0.085	100.0	100.0	자차단체이전 100%
3	포항·삼척철도건설	교통및물류	철도	7	0.12	50.0	100.0	0.025	82.5	100.0	일반출연금 100%
4	부산·울산·복합철	교통및물류	철도	7	0.11	50.0	100.0	0.022	82.5	100.0	일반출연금 100%
5	동두천·연천 전철화	교통및물류	철도	5	0.07	50.0	100.0	0.015	82.5	100.0	일반출연금 100%
6	정보보호핵심원천 기술개발(R&D)	통신	방송통신	1	0.06	50.0	100.0	0.013	100.0	100.0	연구개발출연금 100%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2	0.03	50.0	100.0	0.006	100.0	100.0	민간이전 100%
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정보화)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진흥· 고도화	4	0.02	50.0	100.0	0.005	100.0	100.0	일반출연금 100%
9	포승·평택철도건설	교통및물류	철도	7	0.02	50.0	100.0	0.004	82.5	100.0	일반출연금 100%
10	수원발 KTX	교통및물류	철도	2	0.02	50.0	100.0	0.004	82.5	100.0	일반출연금 100%
11	인천지하철1호선 송도연장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2	0.02	50.0	100.0	0.003	82.5	100.0	자차단체이전 100%
12	익산·대야 복합철	교통및물류	철도	7	0.01	50.0	100.0	0.003	82.5	100.0	일반출연금 100%
1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R&D)	보건	보건의료	6	0.01	50.0	100.0	0.003	100.0	100.0	연구개발출연금 100%
14	안문중재위원회지원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2	0.01	50.0	100.0	0.002	100.0	100.0	민간이전 100%
15	소외계층방송 접근권보장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2	0.01	50.0	100.0	0.002	100.0	100.0	민간이전 1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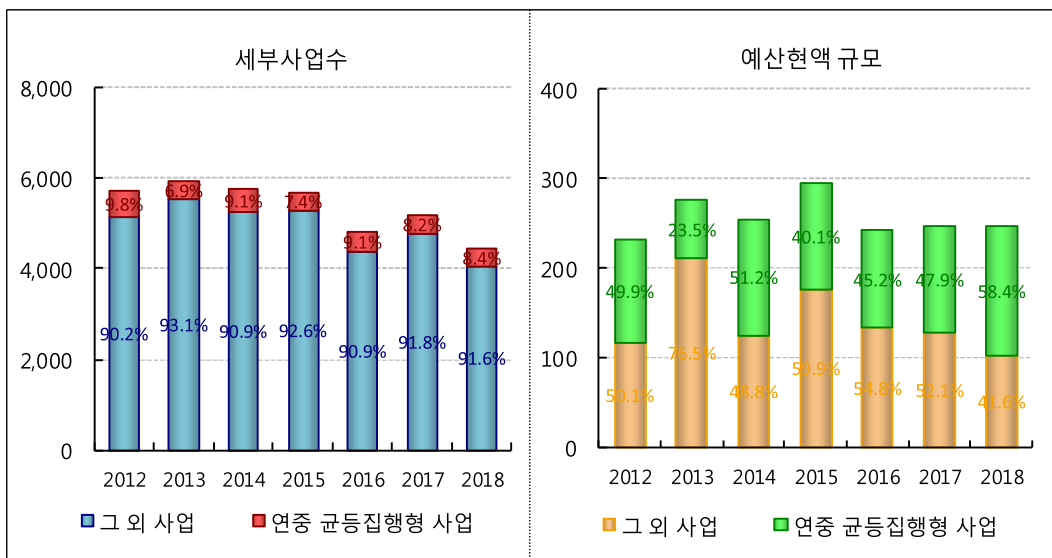
나. 연중 균등집행형

1) 사업 현황

집행이 한 회계연도 동안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분기별 집행률이 전체 100%의 1/4, 2/4, 3/4, 4/4 수준 $\pm 50\%$ 편차 범위 내에 유지하는 사업을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으로 정의하고 분석하였다. 즉, 각 세부사업단위에 대하여 '12.5% < 3월 집행률 $\leq$ 37.5%', '37.5% < 6월 집행률 $\leq$ 62.5%', '62.5% < 9월 집행률 $\leq$ 87.5%', '87.5% < 12월 집행률'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업이다. 그 결과 전체 관리대상사업의 1/10에 다소 못 미치는 수의 사업들이 해당되었는데, 예산현액 규모는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 기준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은 375개로 전체의 8.4%에 해당하며, 이 사업들의 예산현액 규모는 143.8조원으로 전체 규모의 58.4%에 해당한다.

〈그림 4-6〉 연중 균등집행 유형 구분에 따른 사업 현황

(단위: 개,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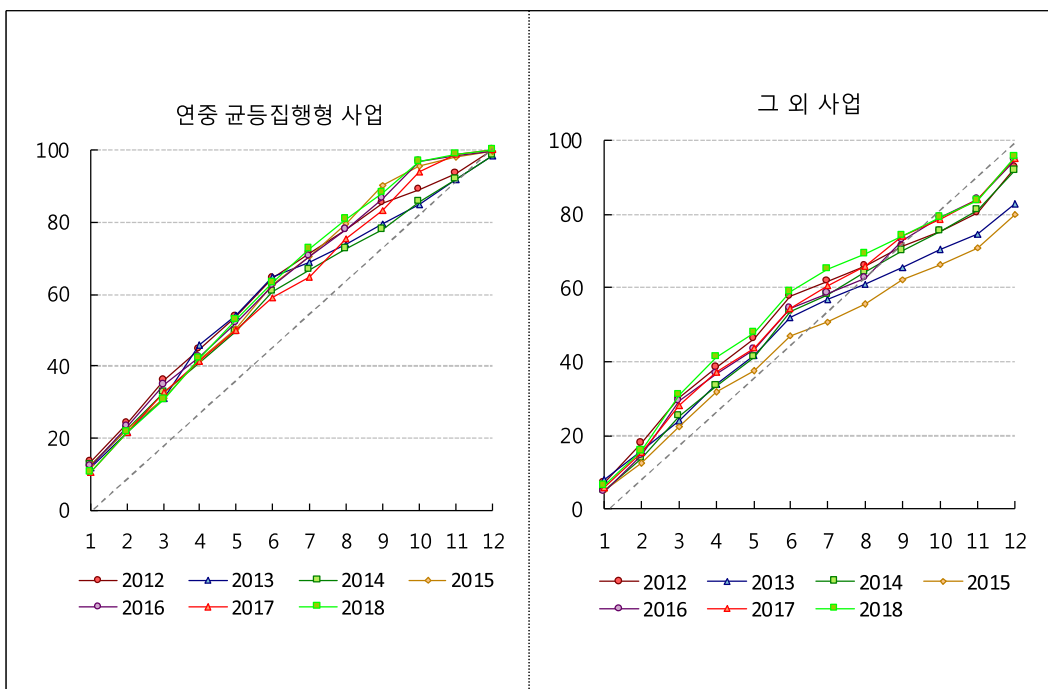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연중 집행형태 비교

연중 균등하게 집행한 사업들과 아닌 사업들의 월별 집행을 추이를 그려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의 경우 12월을 제외하고는 월별로 거의 일정한 기울기로 상승하는 반면, 그 외 사업의 경우 월별로 집행을 기울기가 규칙적이지 않고 대체로 하반기에 느리게 증가하다 12월에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이는 월별 평균 집행을 그래프이므로 개별 사업들의 집행패턴은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림 4-7〉 연중 균등집행 유형 구분에 따른 집행률 추이 비교

(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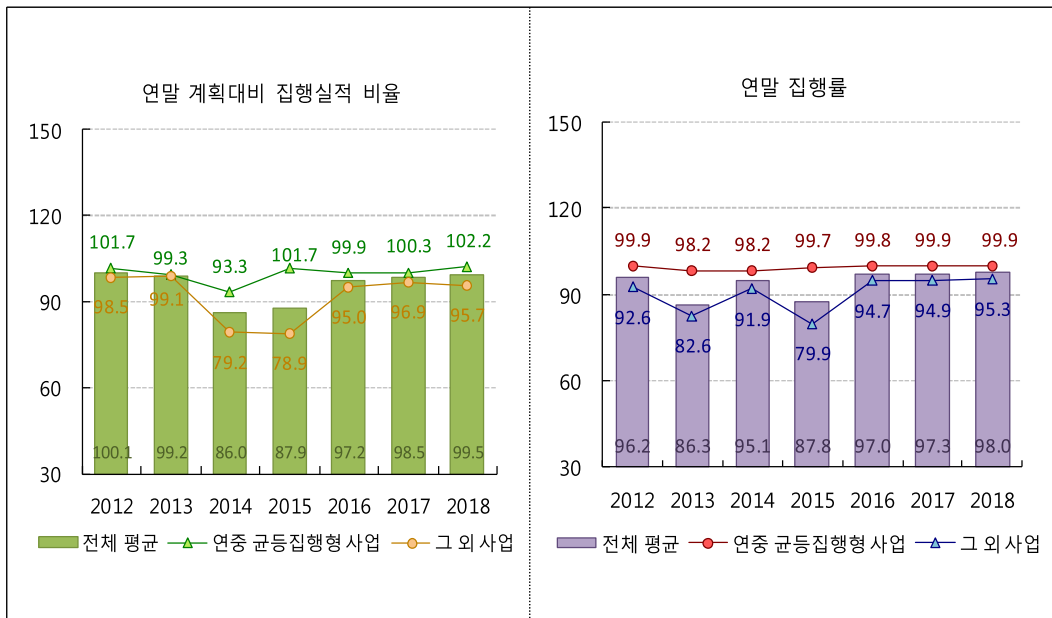
3) 연말 집행률 추이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은 해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집행실적을 달성해

왔다. 2013년만을 제외하고 모두 연말에 100% 수준의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을 보였으며, 연말 집행을 역시 전반적으로 집행률 수준이 저조하였던 2013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100%에 달하는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림 4-8〉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의 연말 집행실적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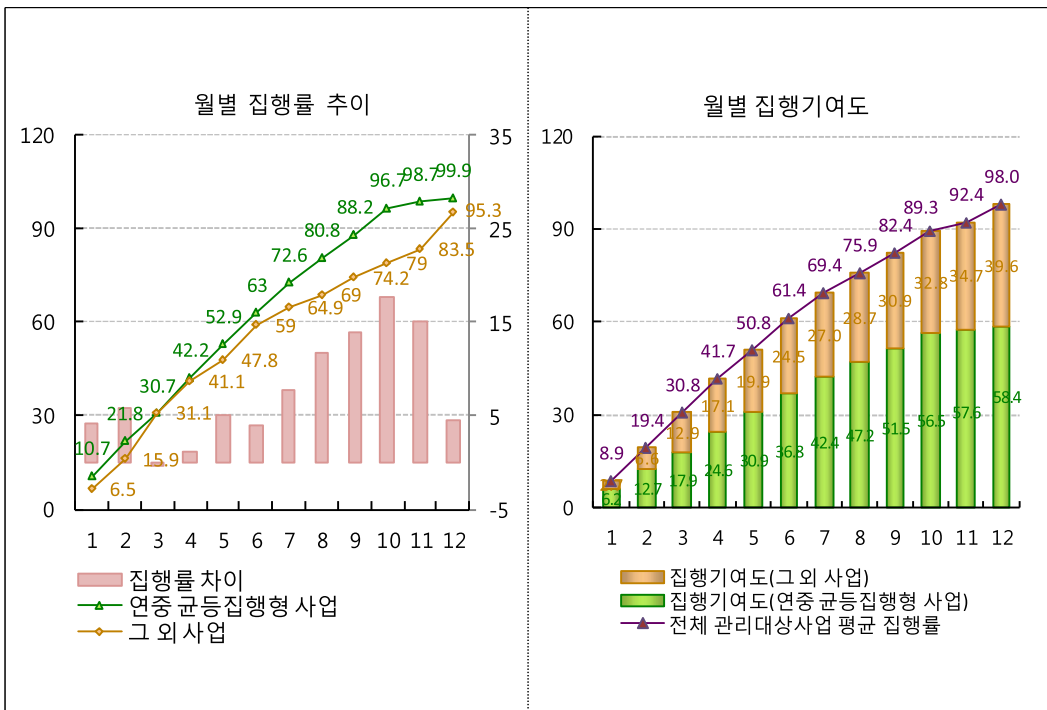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월별 집행을 현황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의 집행률은 10월까지 거의 비슷한 증가 속도로 상승하는 것과는 달리 나머지 사업의 집행률은 상반기까지는 비슷하게 상승하다 이후 크게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두 그룹의 집행률 격차가 14%p 정도까지 벌어졌다가 이후 다시 감소하는 모습이다. 상반기 집중집행형 사업을 제외한 하반기 집중집행형 사업과 상반기 동일집행형 사업은 대체로 계획한 규모만큼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들에 해당한다.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은 예산현액 규모 비중에 비해서도 집행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9〉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의 월별 집행률 현황(2018년)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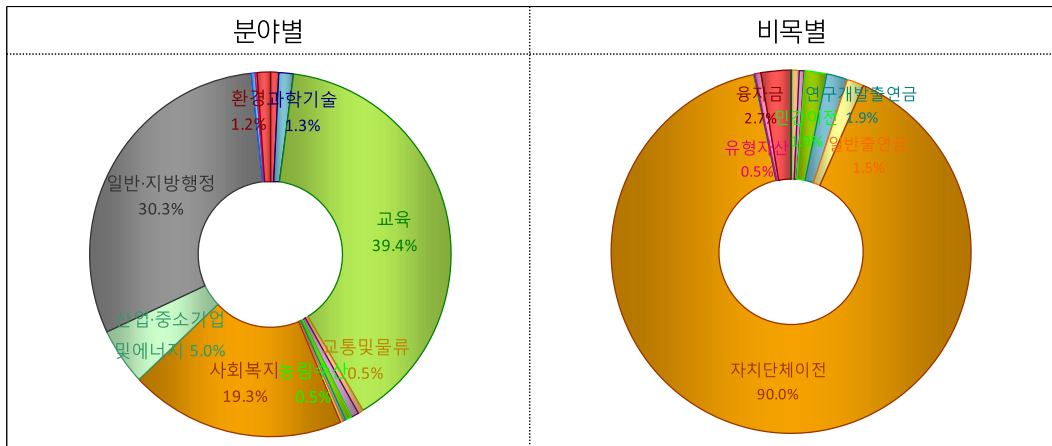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5) 유형별 사업 특성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들의 예산현액 구성을 살펴보면, 교육, 일반·지방행정,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비목별로는 이전지출이 95.4%, 특히 이 중에서도 자치단체이전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사업들 중 예산현액 규모가 큰 상위 사업들을 살펴보면, 자치단체교부금과 의료급여경상보조, 그밖에 보육 및 교육지원, 창업지원, 주거지원 등의 사업들이 해당한다.

〈그림 4-10〉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의 예산현액 구성(2018년)

(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4-4〉 연중 균등집행형 예산규모 상위 15개 사업(2018년)

	세부사업	분야	부문	관리대상사업연수(년)	예산현액규모(조원)	6월 계획 대비 집행 비율 (%)	12월 계획 대비 집행 비율 (%)	6월 집행률 (%)	12월 집행률 (%)	6월 초과 집행 기여도 (%p)	12월 초과 집행 기여도 (%p)
1	보통교부금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4	48.2	104.0	100.0	62.1	100.0	0.1406	7.564
2	보통교부세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2	42.5	105.4	100.0	65.2	100.0	0.667	6.671
3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회복지	주택	3	8.8	143.9	116.7	57.4	99.9	-0.142	1.382
4	의료급여경상보조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7	5.6	118.0	104.3	70.3	100.0	0.204	0.881
5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교육	고등교육	4	4.0	108.4	99.9	55.5	99.9	-0.096	0.634
6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2	3.9	100.0	100.0	60.0	100.0	-0.021	0.611
7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회복지	보육·가족및여성	7	3.4	121.7	103.9	67.7	100.0	0.087	0.532
8	소상공인지원(융자)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7	2.1	98.9	105.7	57.4	99.5	-0.033	0.321
9	창업기업자금(융자)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	2.1	107.4	100.0	68.5	100.0	0.060	0.321
10	민간임대(융자)	사회복지	주택	3	2.0	247.2	179.7	65.8	100.0	0.035	0.306
11	주거급여지원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3	1.1	100.0	96.8	59.4	98.2	-0.009	0.166
12	신장장애인자금(융자)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금융지원	2	1.1	104.0	110.2	55.1	100.0	-0.027	0.170
13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회복지	보육·가족및여성	2	1.0	155.2	102.2	66.1	100.0	0.020	0.160
14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	사회복지	노동	3	0.7	152.2	116.0	60.1	100.0	-0.004	0.110
15	하수관로정비	환경	상하수도·수질	1	0.7	169.6	98.2	64.1	97.8	0.008	0.102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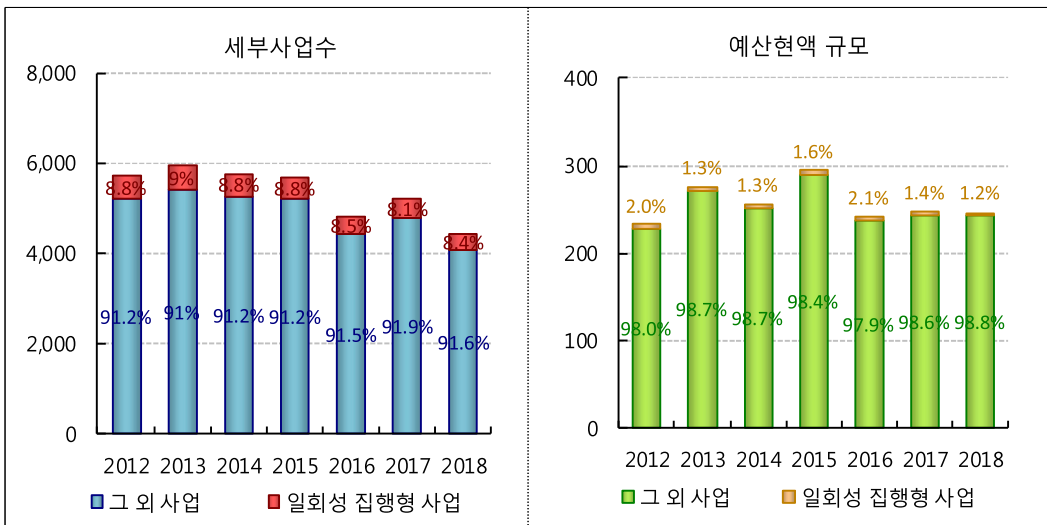
다. 일회성 집행형

1) 사업 현황

일 년에 집행을 단 한 번 하는 사업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집행실적이 증가한 월의 수가 1달인 사업들을 일회성 집행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8년 기준 일회성 집행형 사업은 372개로 전체 관리대상사업의 8.4%에 해당하며, 예산현액의 규모는 2.9조원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하였다.

〈그림 4-11〉 일회성 집행형 구분에 따른 사업 현황

(단위: 개,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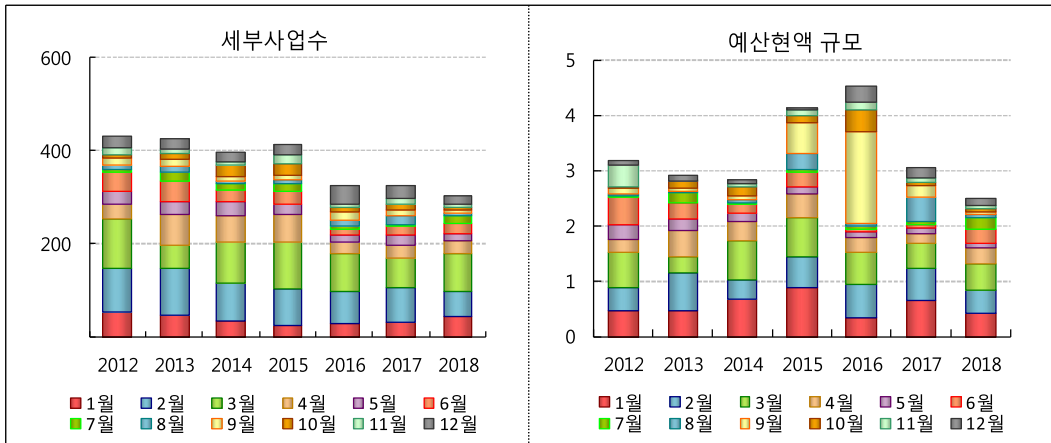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일회성 집행월별 현황

주로 상반기에 집행하는 사업들이 많았으며, 특히 1월~3월에 집행하는 사업수가 58.7%, 예산현액 비중은 52.4%로 과반수였다. 하반기인 7월~12월 중에는 12월 집행 사업이 5.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림 4-12〉 일회성 집행월별 사업 현황

(단위: 개,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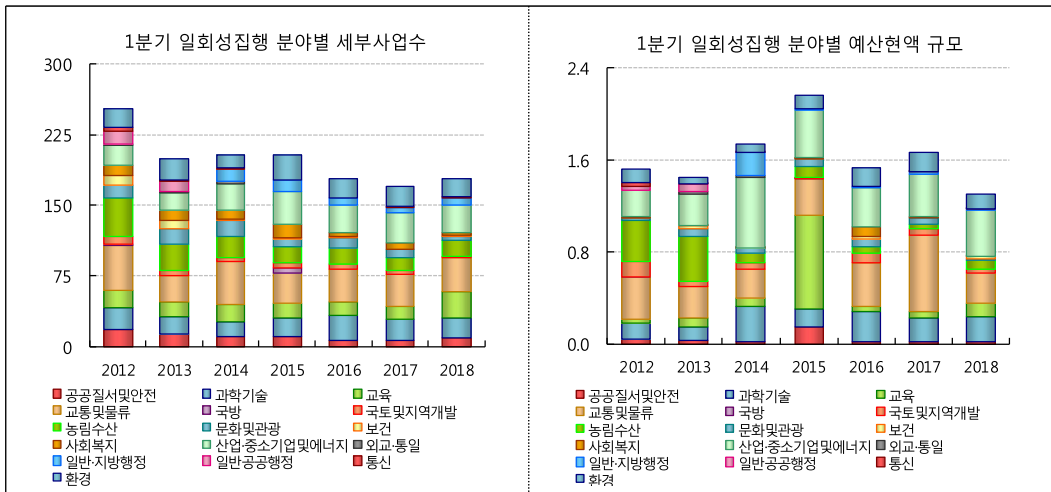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분기(1월~3월)에 일회성 집행을 한 사업들의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과학기술, 교육, 교통및물류,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환경 등 분야의 연구개발출연금 및 일반출연금 비중이 큰 사업들이 해당된다.

〈그림 4-13〉 1분기 일회성 집행 사업 현황

(단위: 개,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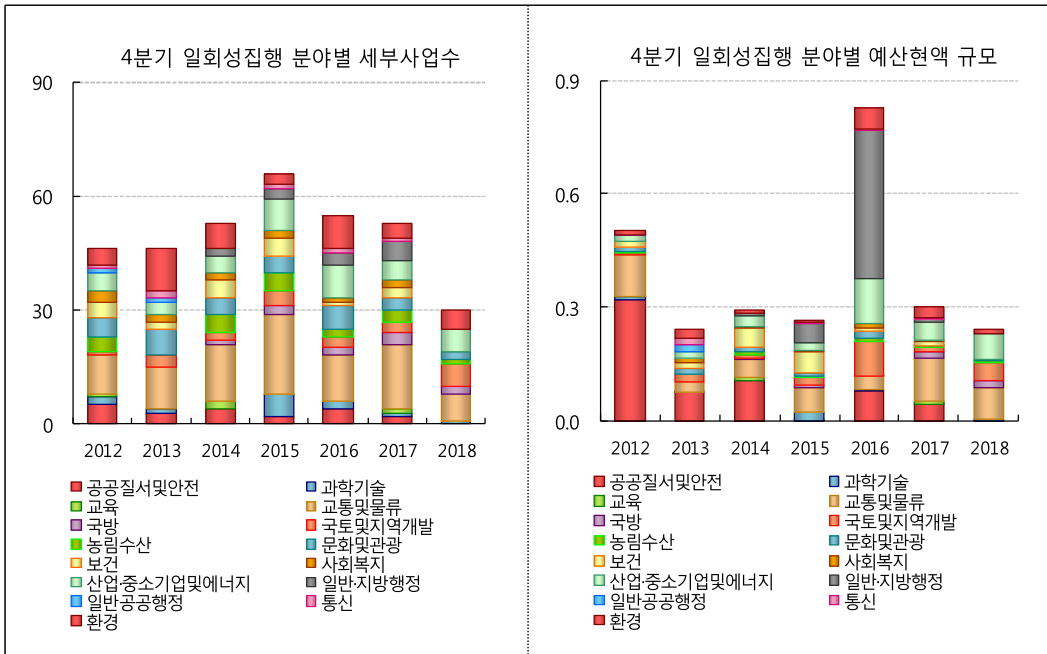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반면 4분기(10월~12월)에 일회성 집행을 한 사업들은 교통및물류, 국토및 지역개발, 국방,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환경 등 분야의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유형자산, 출자금, 민간이전 등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그림 4-14〉 4분기 일회성 집행 사업 현황

(단위: 개, 십억원)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유형별 세부사업 사례

1월과 12월에 일회성 집행을 한 예산현액 규모 상위 10개 사업은 각각 <표 4-5>와 같다. 1월에 일회성 집행을 한 예산현액 규모 상위 10개 사업은 연구개발출연금, 일반출연금의 비중을 100%로 하는 과학기술, 교통및물류,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환경 분야의 R&D 사업들이다. 반면, 12월의 경우 교통및물류, 국방, 국토및지역개발, 농림수산, 환경 분야의 자치단체이전, 출자금, 유형자산 비중이 큰 국방 및 SOC 사업들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1월, 12월 일회성 집행 예산현액 규모 상위 10개 사업(2018년)

		세부사업	분야	부문	관리대상사업수(년)	예산현액규모(조원)	비목 구성
1월 일회성 집행	1	차세대중형위성개발(R&D)	과학기술	기술개발	4	0.049	연구개발출연금 100%
	2	울산신항인입철도	교통및물류	철도	7	0.046	일반출연금 100%
	3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금융지원	6	0.036	일반출연금 100%
	4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환경	대기	4	0.032	민간이전 100%
	5	다목적실용위성개발(R&D)	과학기술	기술개발	3	0.032	연구개발출연금 100%
	6	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R&D)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진흥· 고도화	3	0.021	연구개발출연금 100%
	7	정자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R&D) (해수부)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2	0.021	연구개발출연금 100%
	8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연구 (R&D)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2	0.020	연구개발출연금 100%
	9	모태조합 출자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진흥· 고도화	2	0.020	출자금 100%
	10	극지및대양과학연구(R&D)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5	0.016	연구개발출연금 100%
12월 일회성 집행	1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1	0.057	자치단체이전 100%
	2	전기요금 한시할인 지원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에너지및자원 개발	1	0.036	민간이전 100%
	3	장거리 대집어뢰	국방	방위력개선	1	0.020	유형자산 100%
	4	김포-파주고속도로	교통및물류	도로	3	0.011	출자금 100%
	5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조성	농림수산	수산·어촌	5	0.004	자치단체이전 100%
	6	고덕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	국토및지역개발	수자원	1	0.003	자치단체이전 100%
	7	대전도시철도2호선건설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4	0.003	자치단체이전 100%
	8	우아·신설경전철건설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4	0.002	자치단체이전 100%
	9	폐기물 처리 재해복구비	환경	폐기물	3	0.0011	자치단체이전 100%
	10	상하수도시설 재해복구비	환경	상하수도·수질	3	0.0005	자치단체이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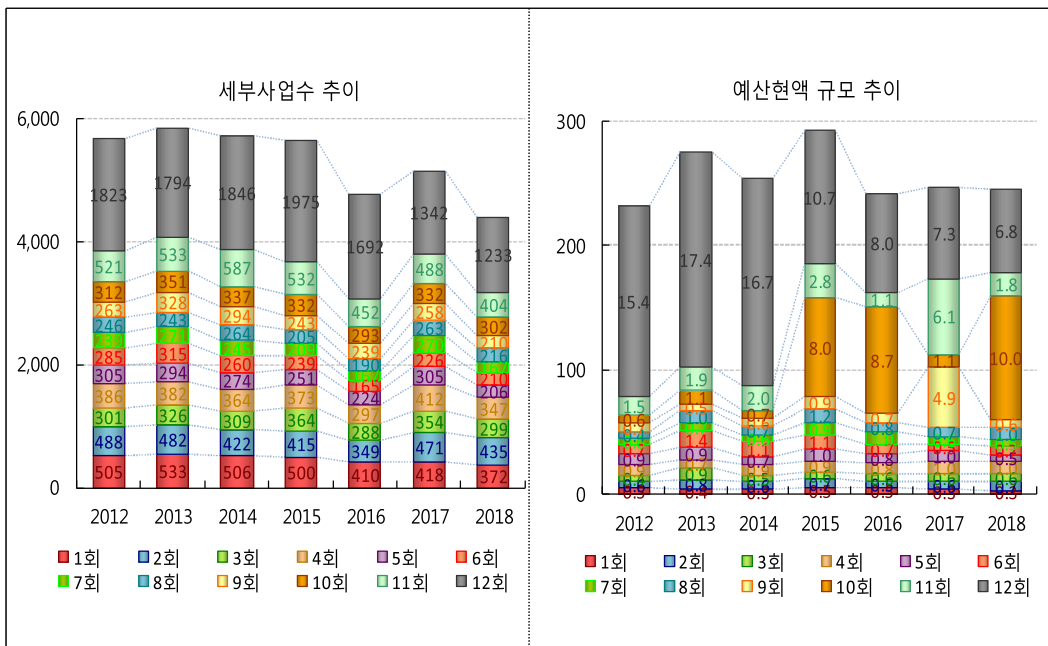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연중 집행횟수별 현황

본고에서 살펴본 가장 특수한 형태인 일회성 집행형 사업에 대해서만 살펴 보았으나 이외에도 2회 집행에서부터 12회 집행까지 사업별로 집행형태가 다양하다. 대체로 연중에 10회~12회에 걸쳐 집행하는 사업의 규모가 가장 컸으며, 특히 이처럼 정기적으로 집행하는 사업들은 교육, 국방, 사회복지,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예산현액 규모가 큰 사업들이 해당하였다.

〈그림 4-15〉 연중 집행 횟수별 사업 현황

(단위: 개, 조원,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관리목표에 따른 구분

가.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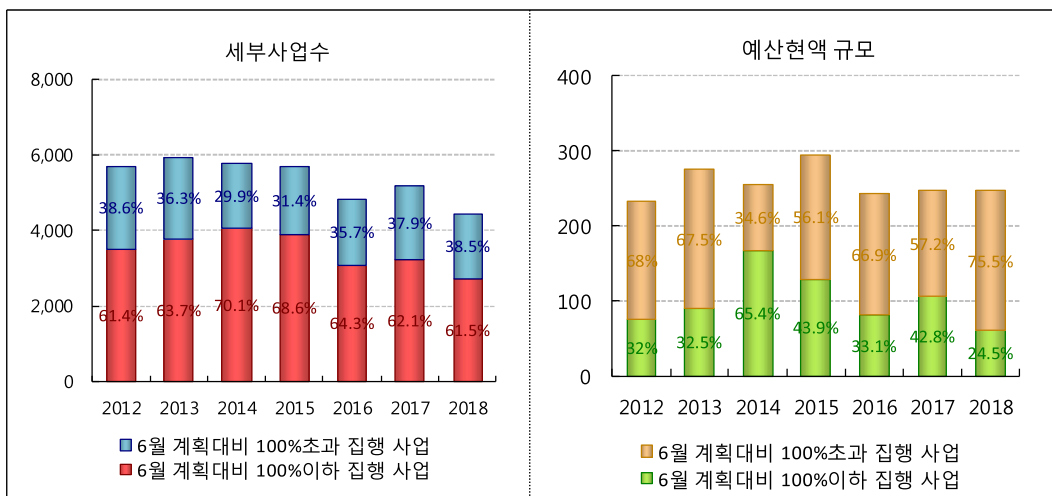
1) 상반기 계획대비 집행실적 기준

가) 사업 현황

계획 수준에 비해 조기집행이 이루어진 사업들과 아닌 사업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6월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이 100% 초과인 사업을 조기집행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2018년 기준 전체 4,438개 사업 중 1,707개(38.5%) 사업이 상반기에 계획 수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예산현액 규모는 185.7조원으로 전체(246.0조원)의 75.5%에 해당하는데, 이로부터 예산 규모가 작은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상반기 계획 수준에 맞는 집행관리가 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계획대비 조기집행 사업의 비중은 2015년부터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림 4-16〉 상반기 계획대비 조기집행 사업 현황

(단위: 개,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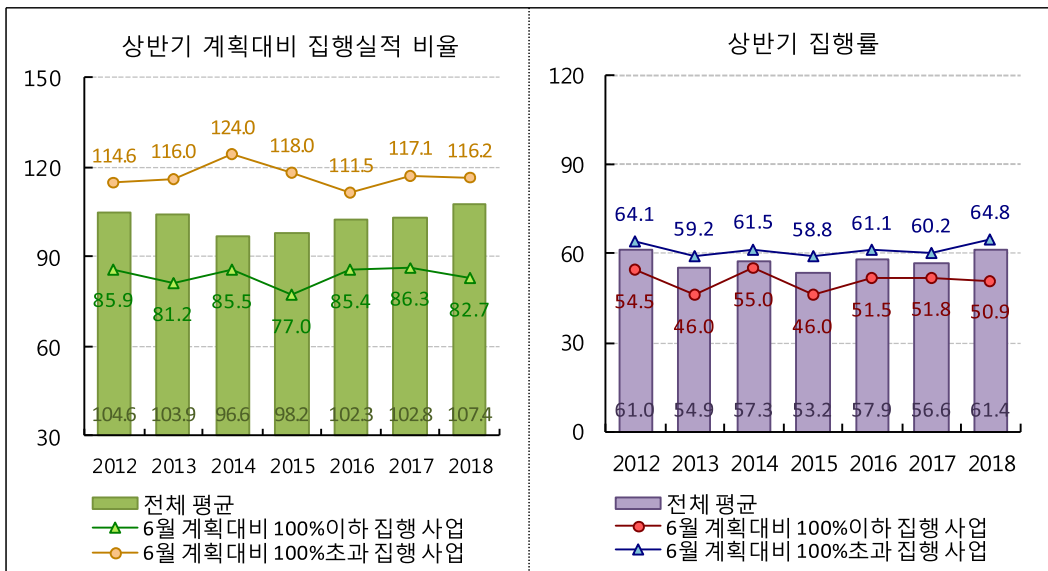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나) 상반기 집행률 추이

상반기에 계획한 재정집행 규모를 초과하여 집행한 조기집행 사업들의 6월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은 대체로 110%대 중반을, 계획 규모 이하로 집행한 사업들의 6월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은 대체로 80%대 초중반 수준을 보였다. 또한 6월 집행률은 각각 60%대 초중반 수준과 50%대 초중반 수준으로 10%p 이상 차이가 있었다. 상반기에 계획한 규모를 초과하여 집행한 사업의 상반기 집행기여도는 예산현액 비중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4-17〉 계획대비 조기집행 사업의 상반기 집행실적 추이

(단위: %, %p)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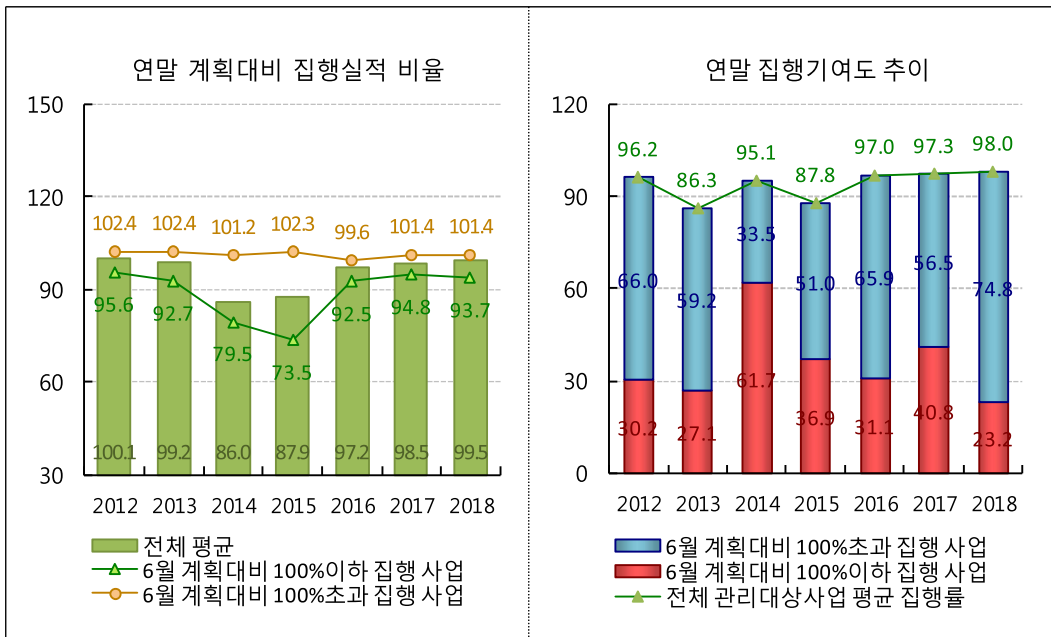
다) 연말 집행률 추이

상반기에 계획규모를 초과하여 집행한 사업들의 연말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을 살펴보면, 상반기보다는 그 값이 작아지기는 하나 여전히 100%를 초과하는 수준을 보였으며 연말 집행률도 평균 집행률 수준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말에는 상반기에 계획규모 이하로 집행하였던 사업들의 집행률도

어느정도 상승하여 상반기 초과집행 사업의 집행기여율이 상반기보다는 다소 낮아지나 여전히 예산현액 비중보다는 큰 값을 보였다.

〈그림 4-18〉 계획대비 조기집행 사업의 연말 집행실적 추이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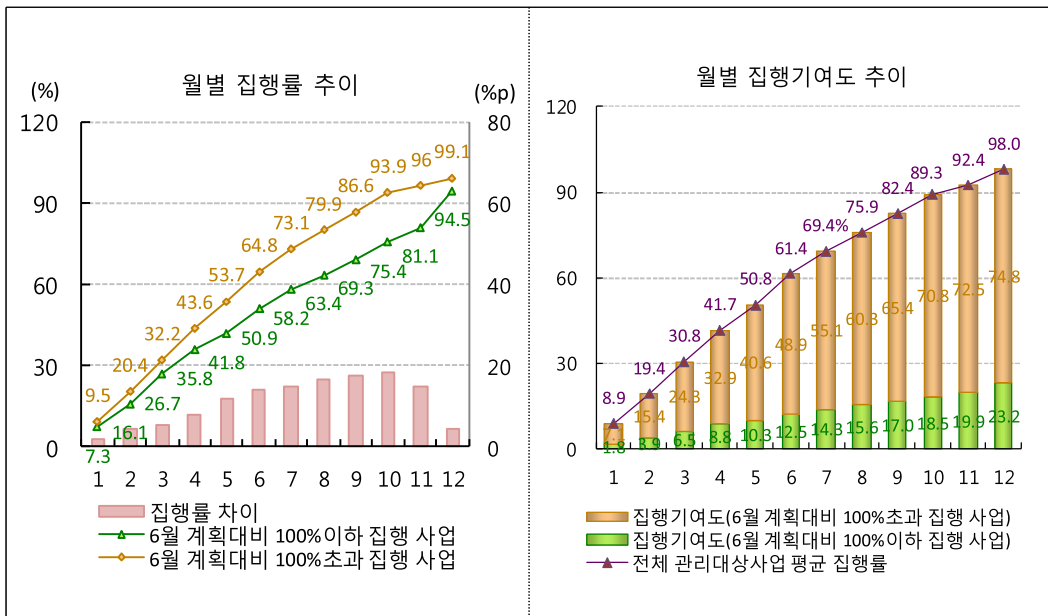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라) 월별 집행률 현황

이들 두 사업군의 월별 집행률 추이를 비교해보면 두 그룹 간 집행형태의 차이가 보다 명확히 나타난다. 상반기에 계획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업들은 하반기에도 비슷한 속도로 집행률이 상승한 반면, 상반기에 계획 이하로 집행한 사업들은 11월까지 상대적으로 더딘 속도로 상승하다 12월이 되어서야 밀어내기식 집행을 하여 평균 집행률 수준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2018년 기준 두 그룹간 월별 집행률을 비교해보면 10월까지 차이가 점차 더 벌어지다 11월 이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9〉 계획대비 조기집행 사업의 월별 집행 현황(2018년)

(단위: %, %p)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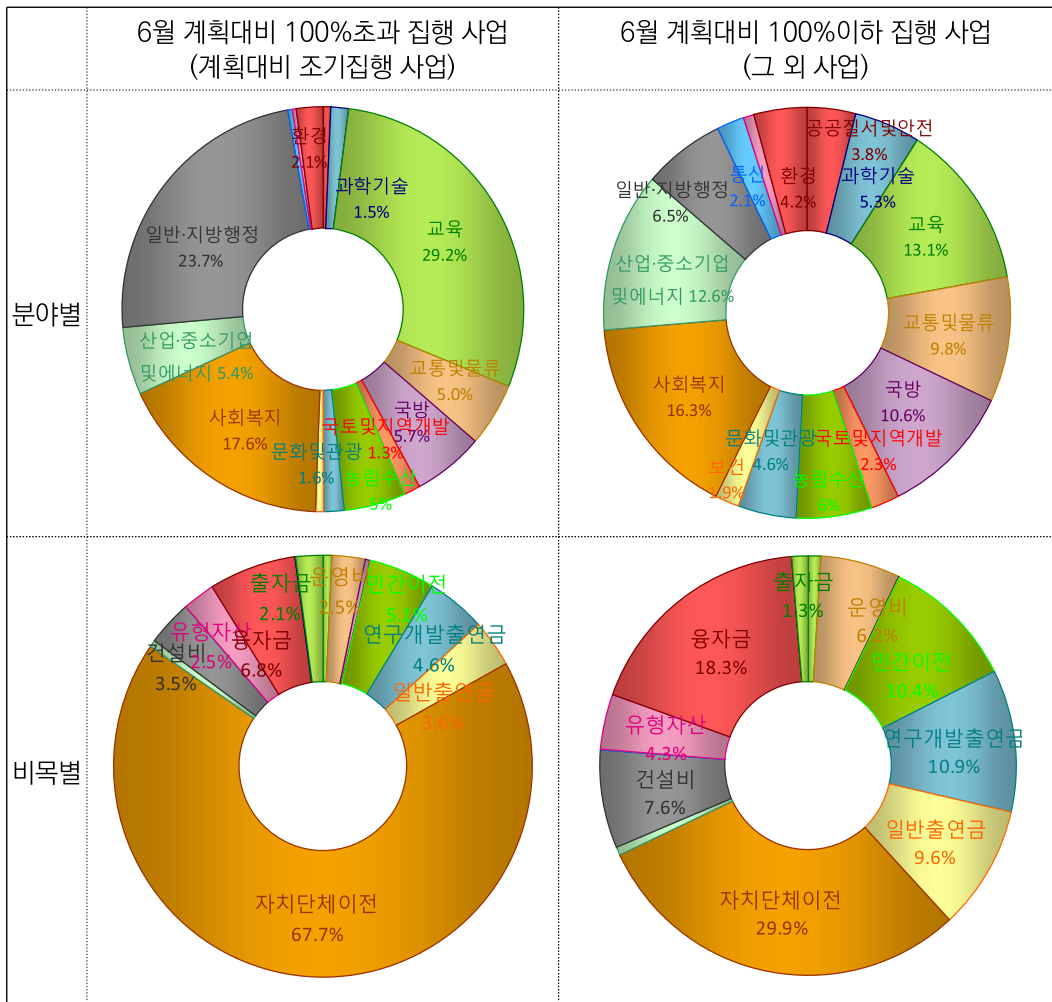
마) 유형별 사업 특성

두 그룹의 분야별 예산현액 구성을 살펴보면, 계획대비 조기집행 사업은 아닌 사업들에 비해 일반·지방행정(17.1%p), 교육(16.1%p), 사회복지(1.3%p) 분야의 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분야는 특히 자치단체이전의 비목 구성 비중이 매우 높은 분야에 해당한다.

실제 비목 구성을 살펴보면, 상반기 계획에 비해 초과집행한 사업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업들에 비해 자산취득과 물건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은 (16.6%p, 3.6%p) 반면 이전지출의 비중은 훨씬 크다(20.2%p). 특히, 상반기 계획대비 초과집행한 사업군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업들에 비해 자치단체이전의 비중이 매우 크게(37.8%p) 나타나고 있다.

〈그림 4-20〉 계획대비 조기집행 사업의 예산현액 구성(2018년)

(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바) 유형별 세부사업 사례

상반기 계획대비 조기집행 사업

2018년 사업별 상반기 계획대비 실제 집행 비율과 정확히 계획한 수준만큼 집행하였을 때인 100%와의 차이에 예산현액 규모 비중을 가중치로 곱한 상반기 계획 초과집행기여도 기준으로 상위 15개 사업은 <표 4-6>과 같다. 이 사업

들은 상반기에 계획에 비해 훨씬 큰 규모로 초과집행하여 전체 초과집행 비율을 끌어올린 대표적인 사업들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은 사회복지, 국방, 농림수산, 과학기술, 교육,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의 사업들로 자치단체이전, 연구개발출연금의 비목 비중이 100%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방 분야의 2개 사업은 유형자산 비중이 100%였다.

〈표 4-6〉 상반기 계획 초과집행기여도 상위 15개 사업(2018년)

	세부사업	분야	부문	관리대상사업수(년)	예산현액규모(조원)	6월계획대비집행비율(%)	6월계획초과집행기여도(%)p	12월계획대비집행비율(%)	6월집행률(%)	12월집행률(%)	비목 구성
1	전술함대지유도탄(경사형)	국방	방위력개선	1	0.01	799,883.3	46.8	100.0	100.0	100.0	유형자산 100%
2	수산물가공산업육성(생활)	농림수산	수산·어촌	3	0.02	90,770.4	6.44	100.0	54.5	100.0	자치단체이전 100%
3	구축함용TACM성능개량	국방	방위력개선	1	0.01	175,175.2	5.06	99.9	49.2	99.9	유형자산 100%
4	수산물가공산업거점단지조성	농림수산	수산·어촌	5	0.01	75,596.7	4.09	86.7	45.4	86.7	자치단체이전 100%
5	주택구입·전세자금(용자)	사회복지	주택	3	8.82	143.9	1.57	116.7	57.4	99.9	용자금 100%
6	대항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무역및투자유치	7	0.24	1,634.5	1.50	100.0	68.1	100.0	민간이전 100%
7	민간임대(용자)	사회복지	주택	3	1.95	247.2	1.17	179.7	65.8	100.0	용자금 100%
8	보통교부세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2	42.47	105.4	0.94	100.0	65.2	100.0	자치단체이전 100%
9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지원	환경	환경일반	2	0.01	16,387.5	0.93	100.0	96.6	100.0	운영비 100%
10	보통교부금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4	48.16	104.0	0.78	100.0	62.1	100.0	자치단체이전 100%
11	의료급여경상보조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7	5.61	118.0	0.41	104.3	70.3	100.0	자치단체이전 100%
12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R&D))	과학기술	기술개발	2	0.77	221.9	0.38	100.0	97.5	100.0	연구개발출연금 100%
13	기타교육용탄약	국방	전력유지	7	0.00	80,573.8	0.33	100.0	72.2	100.0	운영비 100%
14	영유아보육료지원	사회복지	보육·가족및여성	7	3.38	121.7	0.30	103.9	67.7	100.0	자치단체이전 100%
15	집단연구지원(R&D)	과학기술	기술개발	3	0.20	389.7	0.23	100.0	98.0	100.0	연구개발출연금 1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반기 계획대비 집행지연 사업

2018년 상반기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들의 계획대비 실제 집행 비율이 100%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지의 차이에 예산현액 규모 비중을 가중치로 곱한 상반기 계획 초과집행기여도 하위 15개 사업은 <표 4-7>과 같다. 이 사업들은 상반기까지 계획한 규모에 비해 집행실적이 크게 미치지 못하여 전체 계획대비 집행 비율을 떨어트린 대표적 사업들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 국방, 교통및물류, 국토및지역개발, 일반·지방행정 분야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전지출 이외에 출자금, 유형자산, 건설비, 융자금 등 비중이 큰 사업들이 많아 상위 15개 사업들과는 비목 구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표 4-7> 상반기 계획 초과집행기여도 하위 15개 사업(2018년)

	세부사업	분야	부문	관리대상연수(년)	예산현액규모(조원)	6월 계획 대비 집행률 (%)	6월 계획 초과 집행 기여도 (%p)	12월 계획 대비 집행률 (%)	6월 집행률 (%)	12월 집행률 (%)	비목 구성
1	행복주택출자	사회복지	주택	3	0.99	56.9	-0.173	73.1	27.7	74.4	출자금 76.0% 자산대여 23.1%
2	공공임대(융자)	사회복지	주택	2	1.52	75.4	-0.152	88.8	40.6	99.9	융자금 100%
3	부동산교부세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2	1.78	82.2	-0.129	100.0	24.7	100.0	자산대여 100%
4	집주인임대주택사업	사회복지	주택	1	0.33	4.7	-0.127	111.1	2.0	99.4	융자금 100%
5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1	0.7	52.7	-0.126	100.0	35.8	100.0	자산대여 100%
6	고용창출장려금	사회복지	노동	1	0.5	48.9	-0.114	86.7	19.4	86.7	민간이전 99.1%
7	울산급 Batch- II	국방	방위력개선	1	0.5	58.1	-0.092	94.6	26.8	94.1	유형자산 99.1%
8	K-2전차	국방	방위력개선	1	0.2	0.3	-0.081	52.2	0.2	60.7	유형자산 98.9%
9	도시재생지원(출자)	사회복지	주택	2	0.20	0.0	-0.081	72.1	0.0	72.1	출자금 100%
10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국방	방위력개선	1	0.5	65.4	-0.076	83.6	43.0	88.2	유형자산 97.9%
11	도시재생사업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및도시	1	0.30	38.3	-0.076	92.4	22.9	92.4	자산대여 100%
12	철매-II 성능개량	국방	방위력개선	1	0.17	0.0	-0.069	98.1	0.0	98.1	유형자산 96.8%
13	가로주택정비사업	사회복지	주택	1	0.20	16.4	-0.068	33.8	7.8	33.8	융자금 100%
14	도로유지보수	교통및물류	도로	7	0.59	74.1	-0.062	89.7	44.6	90.6	건설비 97.6%
15	민자철도운영지원	교통및물류	철도	3	0.48	69.4	-0.060	99.3	42.0	99.3	민간이전 68.9% 운영비 31.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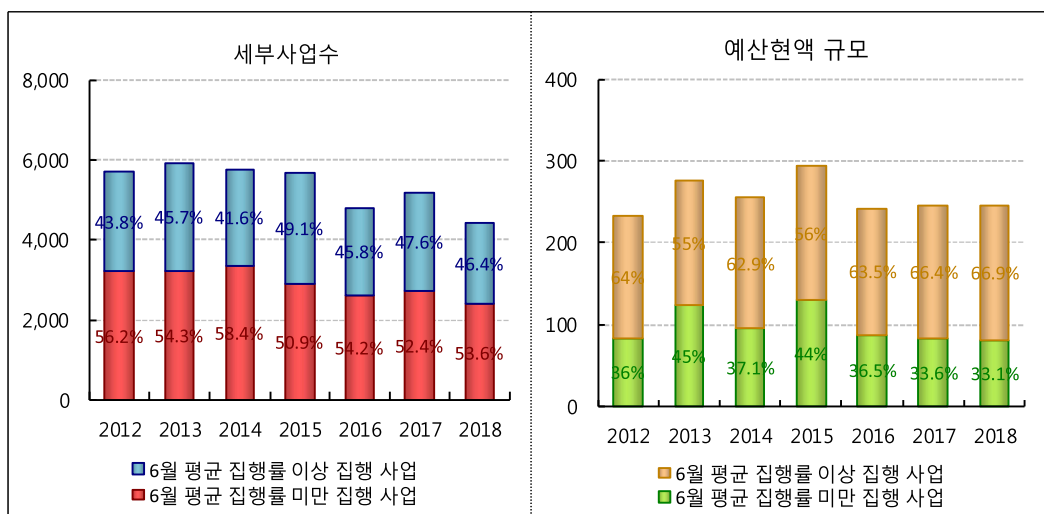
2) 상반기 평균 집행률 대비 기준

가) 사업 현황

상반기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과 아닌 사업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6월 집행률이 해당 연도별 평균 집행률 수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눠보았다.⁷⁾ 그 결과 상반기에 평균 집행률 수준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사업의 비율은 40%대 중후반 수준으로 과반수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사업들의 예산현액 규모 비중은 전체 예산현액 규모의 60%대 중후반으로 사업수 비중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6월 집행률이 평균 집행률보다 높은 사업은 2,061개(47.6%), 이하인 사업은 2,377개(53.6%)이며, 두 그룹의 예산현액 규모는 각각 164.6조원(66.9%)과 81.4조원(33.1%)이다.

〈그림 4-21〉 상반기 평균대비 조기집행 사업 현황

(단위: 개, 조원,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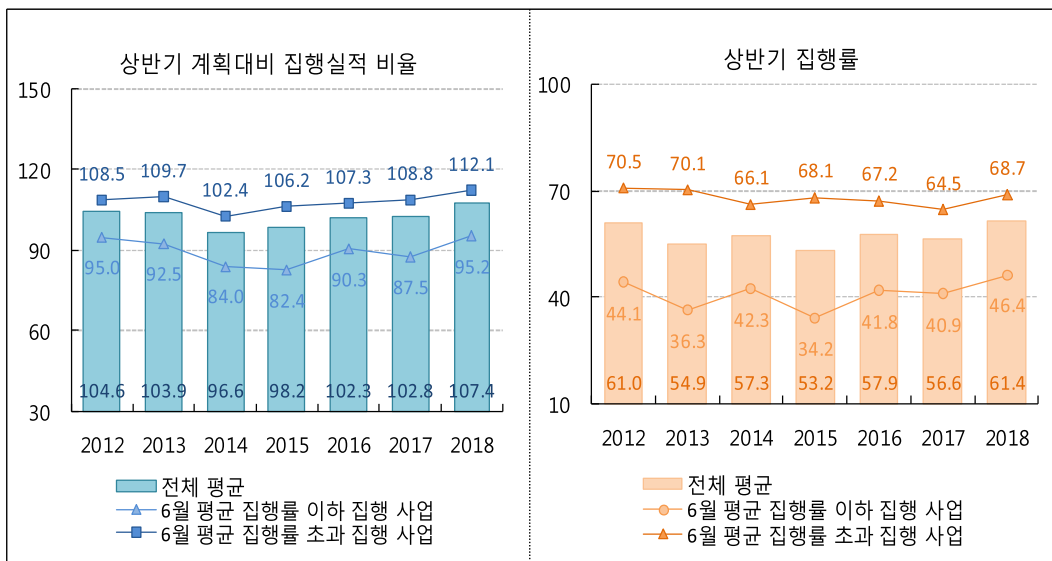
7)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6월 평균 집행률은 순서대로 61.0%, 54.9%, 57.3%, 53.2%, 57.9%, 56.6%, 61.4%이다.

나) 상반기 집행률 추이

6월 평균 집행률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업들의 상반기 집행률은 60%대 후반 수준으로, 아닌 사업들과의 격차가 22%p~34%p까지 다소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그룹의 집행기여도는 전체의 75%에 이르는데 예산현액 규모 비중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한편, 두 그룹의 상반기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을 보면 상반기 평균 집행률 수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업들은 대체로 6월 계획 규모 이상으로 집행을 한 반면, 그 밖의 사업들의 경우 상반기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계획 규모에 못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22〉 평균대비 조기집행 사업의 상반기 집행실적 추이

(단위: %, %p)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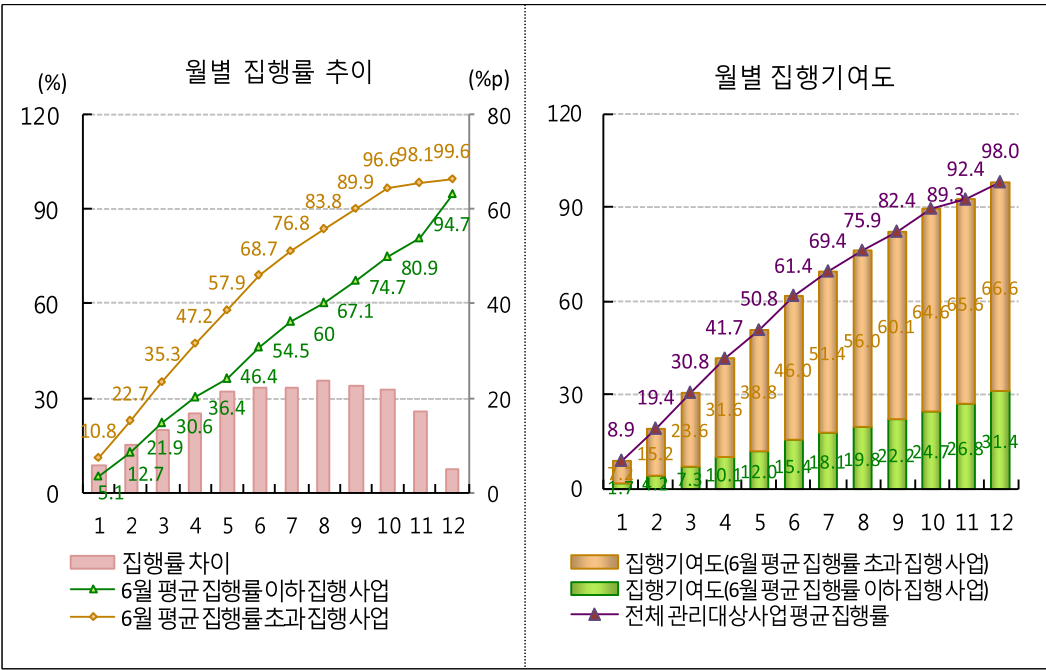
다) 월별 집행률 현황

두 그룹의 월별 집행률 추이를 비교해보면, 6월 평균 집행률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업들은 상반기부터 집행률이 빨리 증가하여 두 그룹 간 집행률 격차가 상당히 벌어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두 그룹의 집행률 차이는 2018년 기준 5월

에서 10월까지 6개월 동안 20%p 이상의 갭을 유지하였다. 두 그룹의 예산현액 규모 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계산한 월별 집행기여도를 살펴보면, 6월 평균 집행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업들의 집행기여도는 하반기로 갈수록 소폭 줄어들다 12월에 한 번 더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림 4-23〉 평균대비 조기집행 사업의 월별 집행 현황(2018년)

(단위: %, %p)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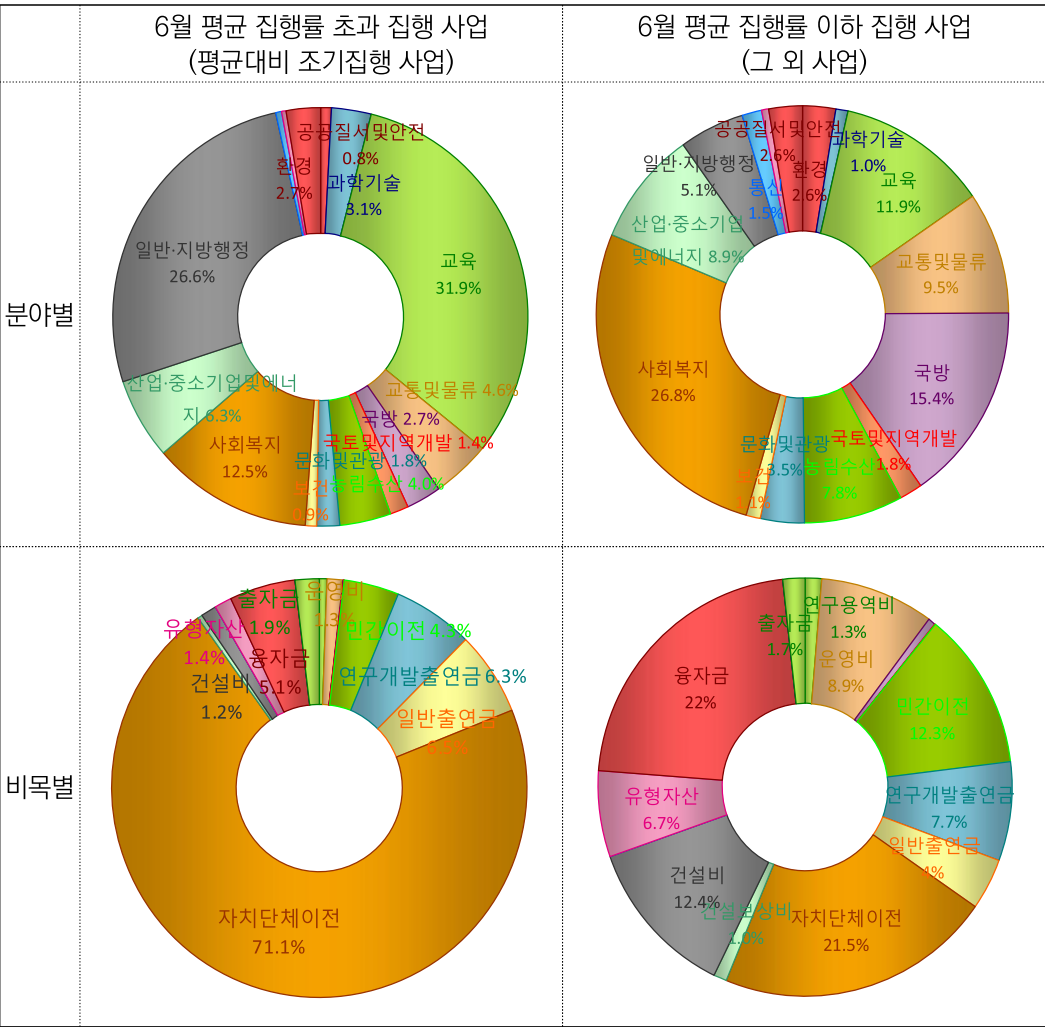
라) 유형별 사업 특성

두 그룹의 분야별 예산현액 구성을 살펴보면, 6월 평균 집행을 초과집행 사업군이 아닌 사업군에 비해 교육(21.4%p), 일반·지방행정(20.0%p) 분야의 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두 분야는 특히 자치단체이전의 비목 구성 비중이 매우 높은 분야에 해당한다. 두 그룹의 예산현액 구성을 보면, 6월 평균 집행을 수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업들의 경우 달성하지 못한 사업들에 비해

자산취득과 물건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은(33.9%p, 8.9%p) 반면 이전지출의 비중이 훨씬 크다(42.7%p). 6월 평균 집행률 수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업들은 자치단체이전, 연구개발출연금, 일반출연금 등의 비중이 큰 반면 6월 평균 집행률 수준 이하로 집행한 사업들은 건설비, 유형자산, 융자금, 운영비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림 4-24〉 평균대비 조기집행 사업의 예산현액 구성(2018년)

(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마) 유형별 세부사업 사례

상반기 평균대비 조기집행 사업

2018년 6월 집행률과 6월 평균 집행률과의 차이에 예산현액 규모 비중을 가중치로 곱하여 계산한 6월 초과집행기여도를 기준으로 한 상위 15개 사업은 <표 4-8>과 같다. 이 사업들은 상반기에 큰 규모로 초과집행함으로써 전체 조기집행률을 끌어올린 대표 사업이다. 일반·지방행정,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농림수산 등 분야는 다양하였으며, 의료급여, 교부금, 창업지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등 사업이 해당한다.

<표 4-8> 상반기 초과집행기여도 상위 15개 사업(2018년)

	세부사업	분야	부문	관리대상연수(년)	예산액규모(조원)	6월 계획대비집행비율(%)	12월 계획대비집행비율(%)	6월 집행률(%)	6월 초과집행기여도(%p)	12월 집행률(%)	비목 구성
1	보통교부세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2	42.47	105.4	100.0	65.2	0.667	100.0	자차단체이전 100%
2	의료급여경상보조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7	5.61	118.0	104.3	70.3	0.204	100.0	자차단체이전 100%
3	보통교부금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4	48.16	104.0	100.0	62.1	0.141	100.0	자차단체이전 100%
4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R&D))	과학기술	기술개발	2	0.77	221.9	100.0	97.5	0.113	100.0	연구개발출연금 100%
5	국가사책특별교부금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4	0.83	92.1	100.0	91.0	0.100	100.0	자차단체이전 100%
6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회복지	보육·가족및여성	7	3.38	121.7	103.9	67.7	0.087	100.0	자차단체이전 100%
7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농림수산	농업·농촌	5	0.60	107.3	94.4	92.9	0.077	96.1	융자금 100%
8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6	0.45	100.0	100.0	100.0	0.071	100.0	출자금 100%
9	창업기업자금(융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5	2.05	107.4	100.0	68.5	0.060	100.0	융자금 100%
10	문화재보수정비(중액사업, 보조)	문화및관광	문화재	7	0.30	173.6	100.0	100.0	0.046	100.0	자차단체이전 100%
11	도담·영천 복산전철	교통및물류	철도	5	0.37	165.1	108.9	91.8	0.045	100.0	일반출연금 100%
12	보라매(R&D)	국방	방위력개선	1	0.43	138.7	100.0	83.6	0.039	100.0	연구공역비 91.4%
13	지방하천 정비(생활)	국토및지역개발	수자원	1	0.55	120.2	100.0	78.2	0.038	100.0	자차단체이전 100%
14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과학기술	기술개발	6	0.27	164.1	100.0	94.1	0.036	100.0	연구개발출연금 100%
15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사회복지	보육·가족및여성	5	0.94	117.7	86.4	70.6	0.035	100.0	자차단체이전 1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반기 평균대비 집행지연 사업

한편, 2018년 6월 초과집행기여도 하위 15개 사업은 <표 4-9>와 같다. 이 사업들은 상반기에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6월 평균 집행률을 끌어내린 사업들로 해석해 볼 수 있을 수 있는데,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은 사업들이 많이 존재했다. 주로 사회복지 분야의 주택, 노동, 보육·가족및여성 부문, 국방 분야의 방위력개선 부문,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의 사업들로, 자치단체이전, 민간이전, 융자금, 유형자산, 출자금, 일반출연금 등의 비중이 큰 사업들이다.

<표 4-9> 상반기 초과집행기여도 하위 15개 사업(2018년)

	세부사업	분야	부문	관리 대상 사업 연수 (년)	예산 현액 규모 (조원)	6월 계획 대비 집행 비율 (%)	12월 계획 대비 집행 비율 (%)	6월 집행률 (%)	6월 초과 집행 기여도 (%p)	12월 집행률 (%)	비목 구성
1	부동산교부세	일반· 지방행정	지방행정· 재정지원	2	1.78	82.2	100.0	24.7	-0.266	100.0	자치단체이전 100%
2	아동수당 지급	사회복지	보육·가족 및여성	1	0.70	90.0	97.4	1.2	-0.171	98.9	자치단체이전 99.7%
3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회복지	주택	3	8.82	143.9	116.7	57.4	-0.142	99.9	융자금 100%
4	행복주택출자	사회복지	주택	3	0.99	56.9	73.1	27.7	-0.135	74.4	자치단체이전 23.1%
5	공공임대(융자)	사회복지	주택	2	1.52	75.4	88.8	40.6	-0.128	99.9	융자금 100%
6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교육	고등교육	4	4.04	108.4	99.9	55.5	-0.096	99.9	일반출연금 100%
7	고용창출장려금	사회복지	노동	1	0.55	48.9	86.7	19.4	-0.094	86.7	민간이전 99.1%
8	집주인임대주택 사업	사회복지	주택	1	0.33	4.7	111.1	2.0	-0.079	99.4	융자금 100%
9	울산급 Batch-II	국방	방위력개선	1	0.54	58.1	94.6	26.8	-0.076	94.1	유형자산 99.1%
10	재난안전관리특별 교부세	일반· 지방행정	지방행정· 재정지원	1	0.66	52.7	100.0	35.8	-0.068	100.0	자치단체이전 100%
11	현무2차성능개량	국방	방위력개선	1	0.33	75.5	96.5	18.3	-0.057	96.5	유형자산 66.8%
12	청년내일채움공제	사회복지	노동	2	0.43	75.4	98.7	32.1	-0.051	98.8	민간이전 90.6%
13	K-2전차	국방	방위력개선	1	0.20	0.3	52.2	0.2	-0.050	60.7	유형자산 98.9%
14	도시재생지원 (출자)	사회복지	주택	2	0.20	0.0	72.1	0.0	-0.050	72.1	출자금 100%
15	도시재생사업	국토및지역 개발	지역및도시	1	0.30	38.3	92.4	22.9	-0.047	92.4	자치단체이전 1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나. 하반기 집행을 제고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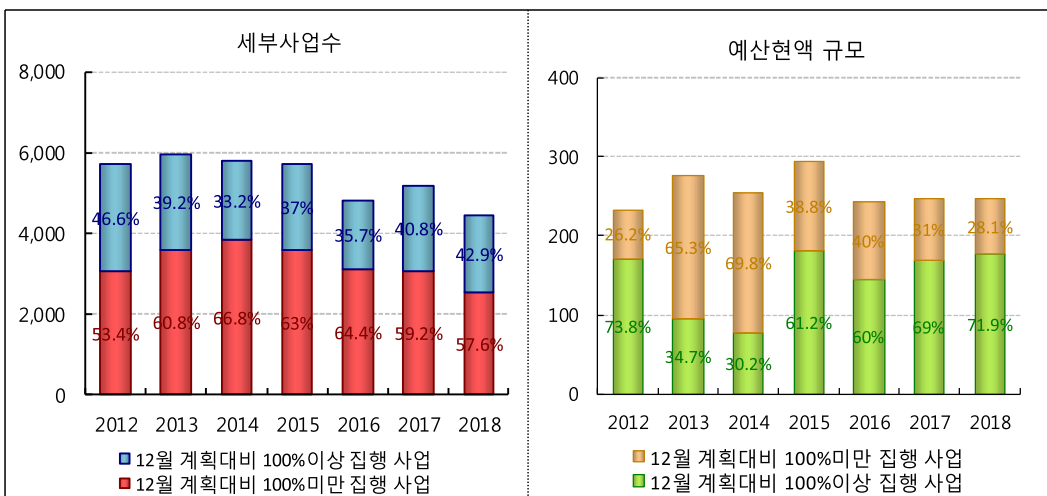
1) 연말 계획대비 집행실적 기준

가) 사업 현황

다음으로 연말까지 계획한 재정집행 규모만큼 달성하지 못한 사업들과 달성한 사업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12월 계획규모 대비 집행실적 비율이 100% 미만인 사업과 100% 이상인 사업으로 구분해 보았다. 그 결과 전체 관리대상사업 중 과반수의 사업들이 연말까지 계획 수준 만큼 집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현액 규모 기준으로는 2013년, 2014년에는 관리대상 중 60% 이상의 세부사업들이 계획 수준 만큼 집행을 하지 못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상당히 축소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12월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이 100% 이상인 사업들의 예산현액 평균은 933.8억원 인 반면, 100% 미만인 사업들은 271.9억원으로 약 1/3 규모에 해당하여 대체로 예산현액 규모가 작은 사업들이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25〉 연말 계획대비 집행부진 사업 현황

(단위: 개,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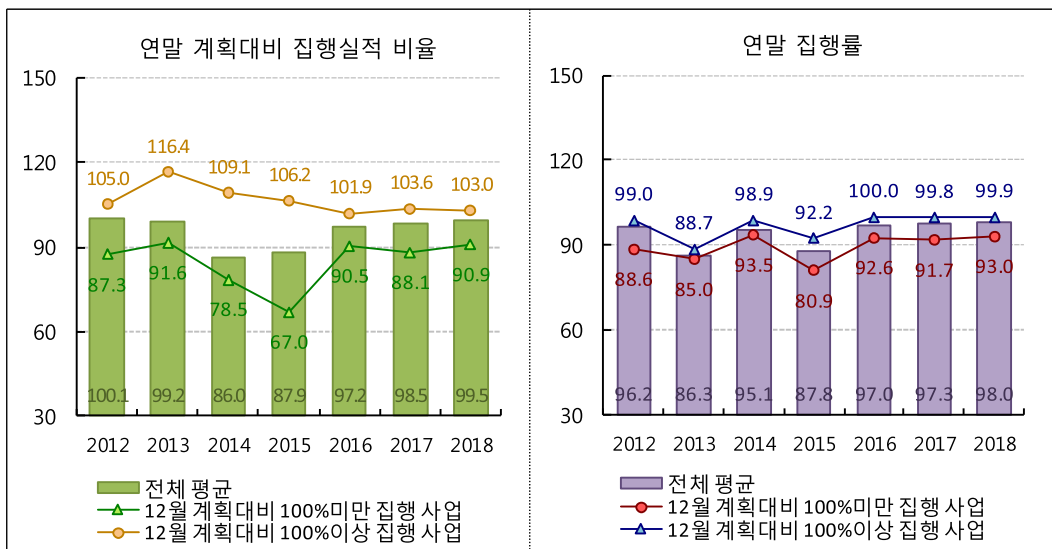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나) 연말 집행률 추이

12월 기준 전체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은 2012년 100.1%에서 2014년, 2015년에는 80% 중후반대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6년 이후에는 9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연말에 계획한 재정집행 규모 이상으로 집행을 한 사업들의 연말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은 최저 101.9%(2016년)에서 최고 116.4%(2013년)로, 2015년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이다 2016년 이후에는 10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계획 규모만큼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의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은 2012년 87.3%에서 2015년 67.0%까지 하락하였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90%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말 계획 규모 이상으로 집행을 한 사업들의 집행률은 전체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던 2013년과 2015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100%에 근사한 값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계획 규모만큼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의 평균 집행률은 90% 전후 수준으로 나타나 두 그룹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6〉 계획대비 집행부진 사업의 연말 집행실적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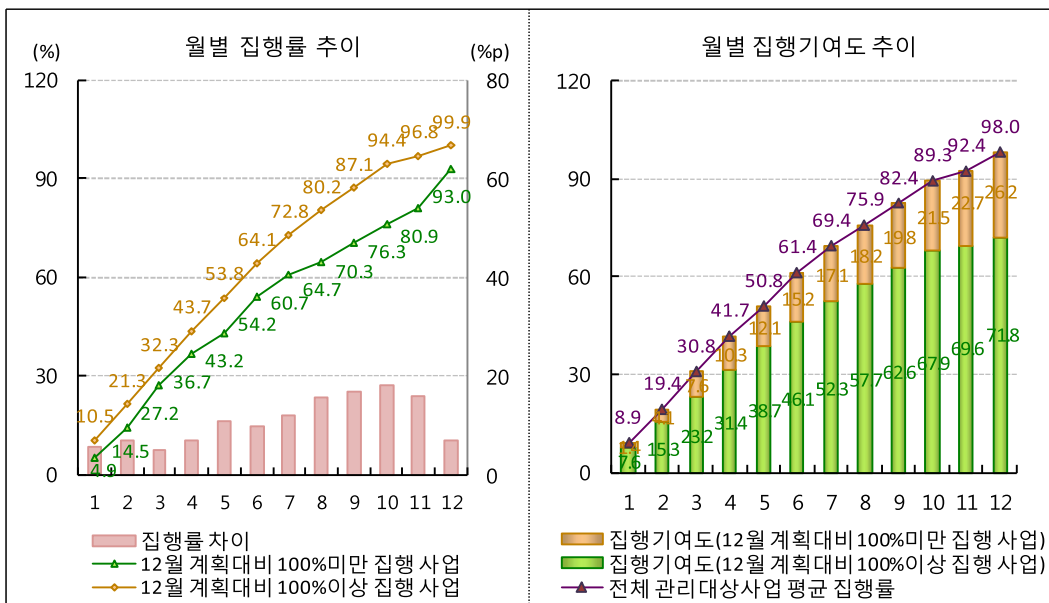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다) 월별 집행률 현황

두 그룹의 월별 집행률 추이를 비교해보면,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들은 대체로 상반기 이전에도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편이었으며, 특히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더 더딘 속도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계획대비 100% 미만 집행 사업들의 2018년 월별 집행기여도를 백분율로 환산해서 비교해 보면, 1월에 가장 작고 3월까지 소폭 증가하여 전체의 24% 비중에서 유지되다 12월에 전체 집행률의 26.7%까지 기여도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7〉 계획대비 집행부진 사업의 월별 집행 현황(2018년)

(단위: %, %p)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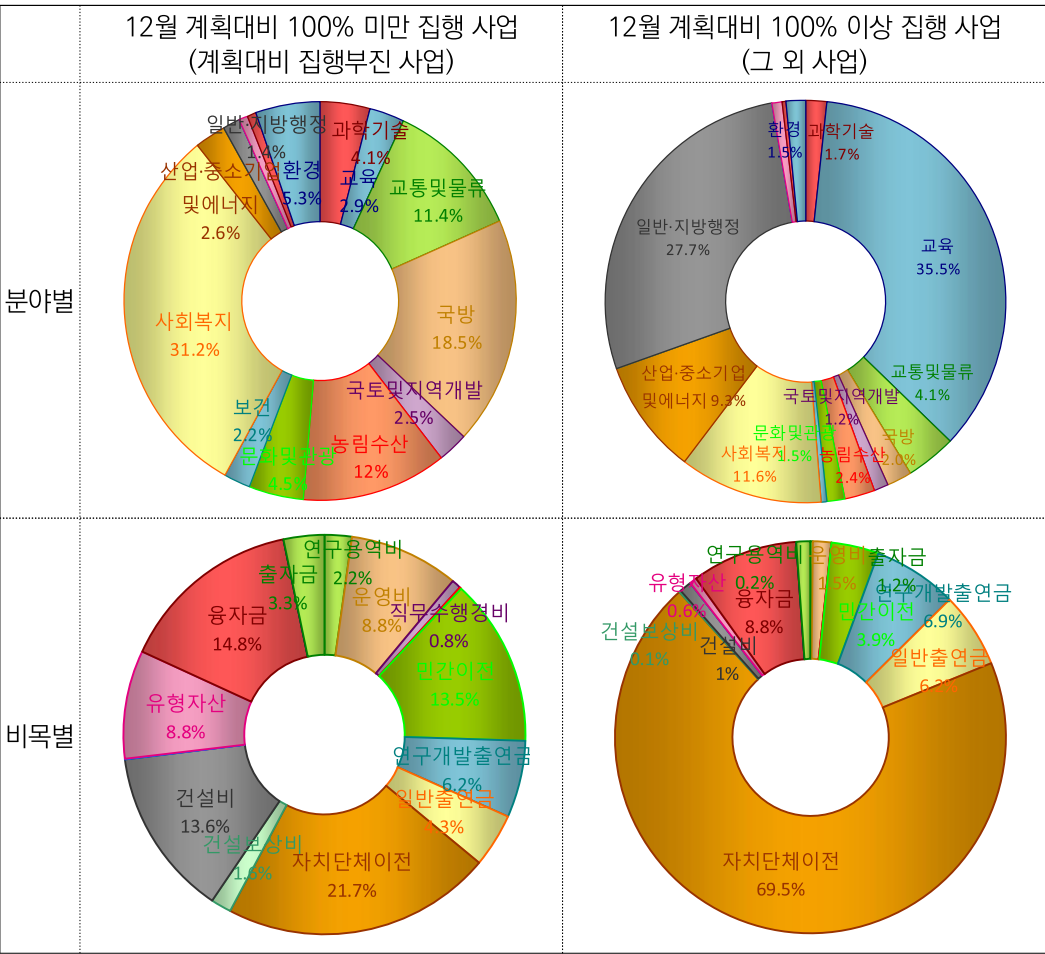
라) 유형별 사업 특성

분야별 예산현액 구성을 살펴보면, 12월 계획대비 100% 미만 집행 사업군은 사회복지, 국방, 교통및물류, 농림수산, 환경, 과학기술 등 분야의 비중이 큰

반면, 12월 계획대비 100% 이상 집행 사업군은 교육, 일반·지방행정,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 분야들은 자치단체이전, 출연금 등 이전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분야에 해당한다. 실제 비목별 구성을 살펴보면, 12월 계획대비 100% 이상 집행 사업들은 아닌 사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산취득과 물건비의 비중은 매우 작고 자치단체이전의 비중이 큰 사업들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28〉 계획대비 집행부진 사업의 예산현액 구성(2018년)

(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마) 유형별 세부사업 사례

연말 계획대비 집행부진 사업

연말 계획 초과집행기여도 기준 하위 15개 사업은 <표 4-8>과 같다. 연말까지 계획한 규모에 비해 집행실적이 미치지 못하여 전체 계획대비 집행 비율을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뜨린 15개 사업은 사회복지 분야의 주택 및 노동 부문, 국방 분야의 방위력개선과 전력유지 부문, 농림수산 분야의 농업·농촌 부문 사업으로, 대부분 융자·출자·장려금 등 금융지원 사업과 군사시설 및 재난관리와 관련된 사업들이다. 융자금의 비목 비중이 100%인 사업들이 많으며, 국방 분야 사업들은 건설비와 유형자산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 4-10> 연말 계획 초과집행기여도 하위 15개 사업(2018년)

	세부사업	분야	부문	관리 대상 사업수 (년)	예산 현액 규모 (조원)	6월 계획 대비 집행 비율 (%)	12월 계획 대비 집행 비율 (%)	12월 계획 초과 집행 기여도 (%p)	6월 집행률 (%)	12월 집행률 (%)	비목 구성
1	행복주택출자	사회복지	주택	3	0.99	56.9	73.1	-0.108	27.7	74.4	출자금 76.0% 자치단체이전 23.1%
2	일반농산어촌개발	농림수산	농업·농촌	7	1.03	124.2	83.3	-0.070	61.3	83.3	자치단체이전 100%
3	공공임대(융자)	사회복지	주택	2	1.52	75.4	88.8	-0.069	40.6	99.9	융자금 100%
4	자율주택정비사업	사회복지	주택	1	0.14	0.0	1.4	-0.058	0.0	1.4	융자금 100%
5	가로주택정비사업	사회복지	주택	1	0.20	16.4	33.8	-0.054	7.8	33.8	융자금 100%
6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사회복지	보육·가족 맞여성	5	0.94	117.7	86.4	-0.052	70.6	100.0	자치단체이전 100%
7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공공질서 및안전	재난관리	2	0.12	8.2	7.6	-0.046	4.3	7.6	유형자산 56.6% 건설비 40.3%
8	기동장비	국방	전력유지	6	0.75	107.8	86.8	-0.041	46.9	88.9	운영비 97.3%
9	K-2전차	국방	방위력개선	1	0.20	0.3	52.2	-0.039	0.2	60.7	유형자산 98.9%
10	맞춤형농지지원 (융자)	농림수산	농업·농촌	1	0.42	104.2	77.3	-0.039	81.9	82.9	융자금 100%
11	전술정보통신체계 (TICN)	국방	방위력개선	1	0.54	65.4	83.6	-0.036	43.0	88.2	유형자산 97.9%
12	군사시설개선	국방	전력유지	7	0.46	99.2	84.2	-0.030	55.1	84.3	건설비 100%
13	고용창출장려금	사회복지	노동	1	0.55	48.9	86.7	-0.030	19.4	86.7	민간이전 99.1%
14	평택기지에서전사업	국방	전력유지	6	0.23	76.4	72.0	-0.026	33.2	72.0	건설비 86.0% 유형자산 14.0%
15	육군 부대개편 2차	국방	전력유지	2	0.14	58.5	55.5	-0.025	24.8	50.9	건설비 97.6%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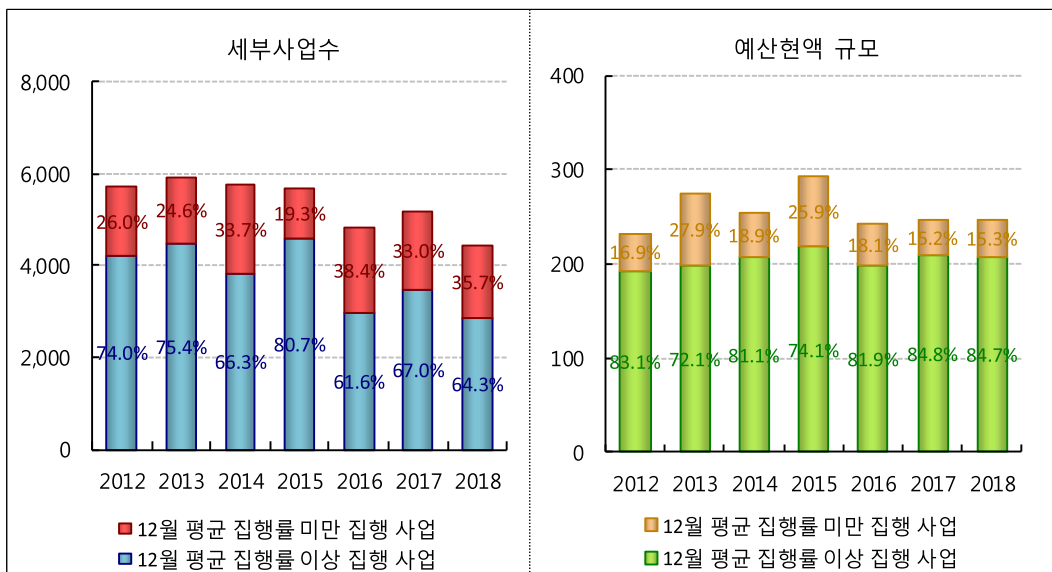
2) 연말 평균대비 집행부진

가) 사업 현황

연말에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집행부진 사업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업들의 12월 집행률이 각 연도별 평균 집행률 수준 미만 사업과 이상인 사업으로 구분해 보았다.⁸⁾ 그 결과 해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전체 사업 중 1/3~1/4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연말에 평균 집행률 수준 미만으로 집행하였으며, 이들의 예산현액 규모 비중은 전체 규모의 1/5~1/6 정도이다. 2018년 기준으로 12월 집행률이 평균 집행률 미만인 사업은 1,586개(35.7%), 평균 집행률 이상인 사업은 2,852개(64.3%)이며, 두 그룹의 예산현액 규모는 각각 32.8조원(15.3%)과 208.4조원(84.7%)이다.

〈그림 4-29〉 연말 평균대비 집행부진 사업 현황

(단위: 개, 조원,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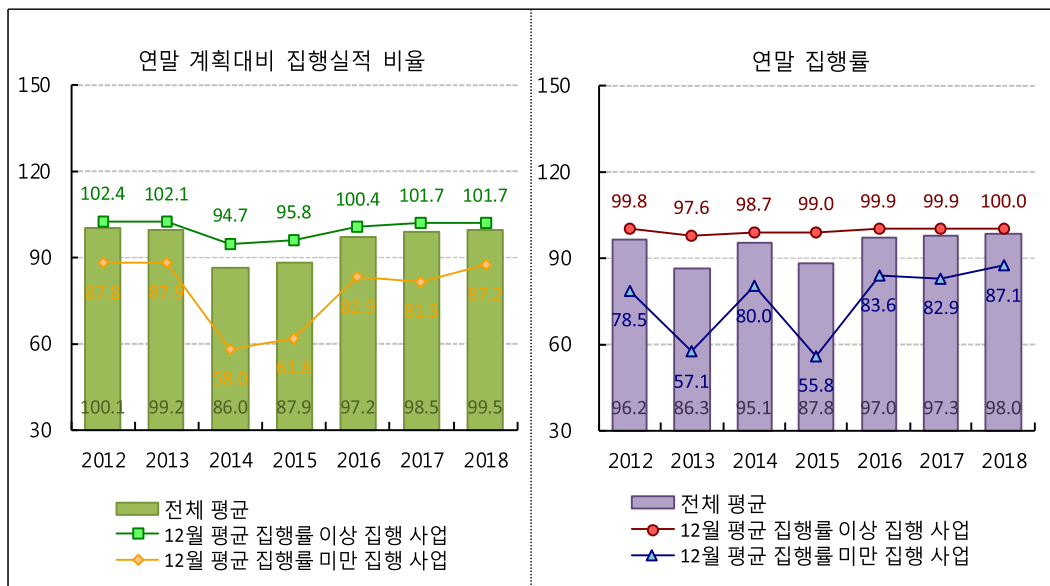
8)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12월 평균 집행률은 순서대로 96.2%, 86.3%, 95.1%, 87.8%, 97.0%, 97.3%, 98.0%이다.

나) 연말 집행률 추이

12월 평균 집행률 수준 미만으로 집행한 사업들의 연말 집행률은 대체로 80%대 전후 수준으로 평균 이상 집행한 사업들과 격차가 크고 변동 폭이 심하다. 2013년과 2015년에는 50%대 수준으로 매우 부진하였는데, 이 두 해에는 예산 규모도 상대적으로 커서 연말 집행률에 실제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보여주는 집행기여도이 큰 값을 보이고 있다. 12월 평균 집행률 미만 집행 사업의 연말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도 약 80% 수준이었으며, 예외적으로 2014년과 2015년에는 60% 수준에 그쳤다.

〈그림 4-30〉 평균대비 집행부진 사업의 연말 집행실적 추이

(단위: %, %p)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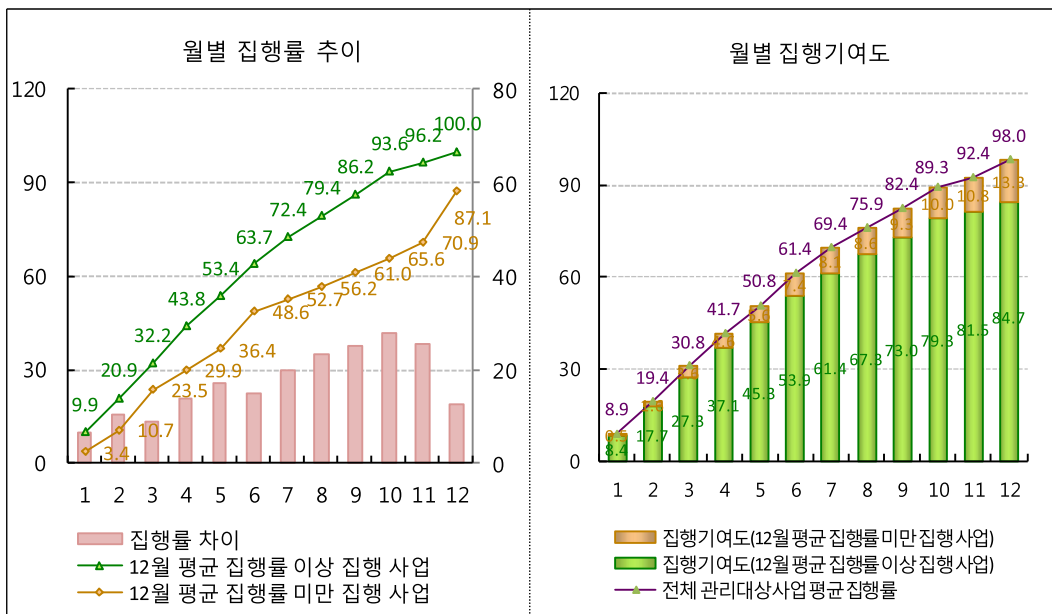
다) 월별 집행률 현황

두 그룹의 월별 집행률 추이를 비교해보면, 12월 평균 집행률 수준 미만으로 집행한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기울기를 보이며 3월, 6월 12월을 중심

으로 천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그룹의 집행률 차이는 하반기 이후 더 증가하여 10월에는 28.0%p까지 차이가 벌어졌다가 이후 줄어든다. 두 그룹의 예산현액 규모 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계산한 월별 집행기여도를 백분율로 환산해서 비교해 보면, 3월부터 계속 11%대 수준을 유지하다 12월이 되어 서야 13.6%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4-31〉 평균대비 집행부진 사업의 월별 집행 현황(2018년)

(단위: %, %p)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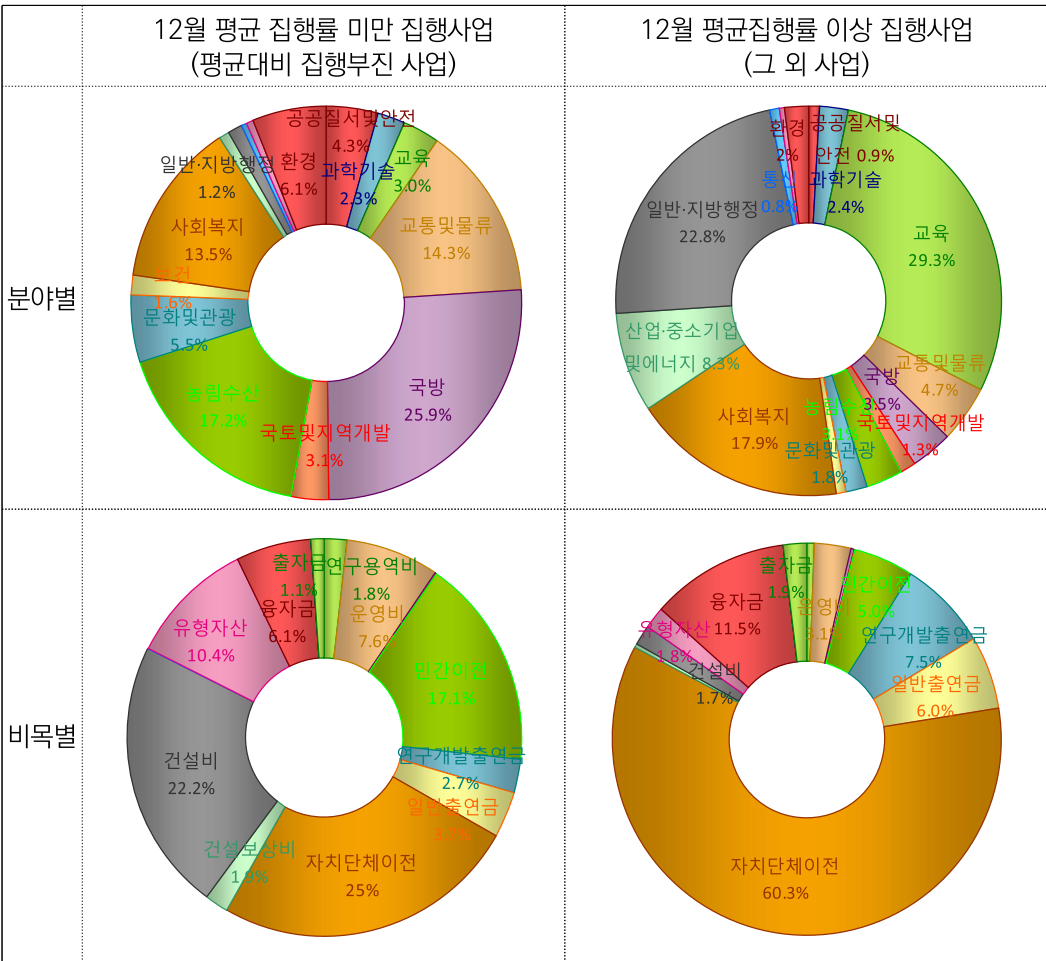
라) 유형별 사업 특성

두 그룹의 분야별 예산현액 구성을 살펴보면, 12월 평균 집행률 미만 집행 사업군이 아닌 사업군에 비해 국방(22.4%p), 농림수산(14.2%p), 교통및물류(9.6%p), 환경(4.1%p), 문화및관광(3.7%p), 공공질서및안전(3.4%p) 등 분야의 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평균 집행률 수준 이상을 달성한 사업들은 교육, 일반·지방행정,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등 분야의 구성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두 그룹의 예산현액 구성을 보면, 12월 평균 집행률 수준에 미치지 못한 사업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산취득과 물건비의 비중은 크고(24.5%p, 5.7%p) 이전지출의 비중이 작다(30.2%p). 이 사업들은 건설비, 건설보상비, 유형자산, 민간이전, 연구용역비, 운영비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반면, 평균 이상 집행 사업들은 자치단체이전, 연구개발출연금, 일반출연금, 융자금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그림 4-32〉 평균대비 집행부진 사업의 예산현액 구성(2018년)

(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마) 유형별 세부사업 사례

연말 평균대비 집행부진 사업

2018년 12월 초과집행기여도 하위 15개 사업은 <표 4-11>과 같다. 이 사업들은 연말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전체 관리대상사업의 평균 집행을 수준을 끌어내린 상위 사업들로, 이들 15개 사업의 연말 평균 집행률이 23.4%, 상반기 평균 집행률은 9.3%에 불과하다. 주로 사회복지 분야의 주택 부문, 교통및물류 분야의 항공·공항, 철도 부문, 국방 분야의 방위력개선, 전력유지 부문 등의 SOC 사업이 대부분으로, 건설비, 용자금, 유형자산, 자치단체이전, 민간이전 등의 비중이 큰 사업들이다.

<표 4-11> 연말 초과집행기여도 하위 15개 사업(2018년)

	세부사업	분야	부문	관리대상사업연수(년)	예산현액규모(조원)	6월 계획 대비 집행률(%)	12월 계획 대비 집행률(%)	6월 집행률(%)	12월 집행률(%)	12월 초과 집행 기여도(%)p	비목 구성
1	자율주택정비사업	사회복지	주택	1	0.14	0.0	1.4	0.0	1.4	-0.035	용자금 100%
2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공공질서 및안전	재난관리	2	0.12	8.2	7.6	4.3	7.6	-0.027	유형자산 56.6% 건설비 40.3%
3	가로주택정비사업	사회복지	주택	1	0.20	16.4	33.8	7.8	33.8	-0.022	용자금 100%
4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교통및물류	항공·공항	1	0.04	0.0	0.3	0.0	0.3	-0.009	건설비 60.5% 건설보상비 39.5%
5	장보고-1성능개량(R&D)	국방	방위력개선	1	0.06	12.3	30.9	7.5	30.9	-0.008	유형자산 97.4%
6	육군 부대개편 2차	국방	전력유지	2	0.14	58.5	55.5	24.8	50.9	-0.006	건설비 97.6%
7	육군 부대개편 1차	국방	전력유지	2	0.06	16.4	31.9	9.1	36.8	-0.006	건설비 79.3% 건설보상비 17.6%
8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교통및물류	철도	5	0.02	1.4	8.2	0.8	8.2	-0.004	건설비 95.0%
9	동물용의약품사업 종합지원(용자)	농림수산	농업·농촌	3	0.02	5.6	16.7	2.2	16.7	-0.004	용자금 100%
10	위험건축물이주 자금지원	사회복지	주택	1	0.02	15.4	13.2	7.4	13.2	-0.004	용자금 100%
11	종교문화시설건립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4	0.04	42.4	36.8	8.0	37.3	-0.004	민간이전 66.0% 자치단체이전 34.0%
12	별내선 복선전철	교통및물류	철도	6	0.10	44.7	51.8	27.1	51.8	-0.004	자치단체이전 100%
13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 리모델링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3	0.02	73.3	26.7	21.2	26.7	-0.003	건설비 100%
14	국가정보관리원대구 센터신축(정보화)	일반·지방행정	정부지원 관리	1	0.02	75.7	31.8	18.9	32.9	-0.003	건설비 85.3% 유형자산 9.9%
15	아트센터 건립	국토및지역 개발	지역및도시	5	0.01	31.7	1.8	0.4	2.3	-0.003	건설비 1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V.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dBrain시스템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정보를 활용하여 중앙정부 주요 재정사업의 월별 집행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점검 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추이와 유형별 집행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유형별 분석에서는 집행형태에 따라 반기별 집중집행형, 연중 균등집행형, 일회성 집행형 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당국의 반기별 중점관리 목표에 따라 상반기 조기집행 및 하반기 집행을 제고를 기준으로 재정집행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연도별 집행을 추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전체적인 집행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과 2015년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나 2016년 이후에는 조기집행 기조하에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분기별로 집행률과 경제성장률의 전기대비 증감 추이를 비교해본 결과, 2015년 이전에는 어느 정도의 동행성을, 2016년 이후부터는 집행률이 한 분기 정도 선행성(특히 상반기를 위주로)을 보이며 움직이는 것이 포착되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재정의 경기보완 기능이 잘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의 추이는 2014년과 2015년에 하반기 이후 집행계획과 실적 사이에 상대적으로 큰 격차가 존재하였으며, 2016년 이후 실제 집행패턴이 계획과 거의 근사하게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계획 설정이

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근래 들어 정부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수준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분야/비목별 집행 특성

대체로 과학기술, 보건, 사회복지, 일반·지방행정, 통신 등 분야는 연초 집행실적이 양호한 반면, 국방, 교통및물류, 공공질서및안전,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상반기까지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편으로, 사업에 따라 연말 집중 집행형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월별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은 연초에는 분야별로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나 큰 격차를 보이다 연말로 갈수록 대체로 평균에 수렴해가는 모습으로, 특히 상반기에는 과학기술 분야가 계획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계획대비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비목별로는 연구개발출연금, 일반출연금, 자치단체이전, 민간이전 등은 상대적으로 집행이 연중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건설비, 유형자산, 출자금, 연구개발비 등은 상반기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3, 6, 12월에 특히 많이 집행되는 등 연중 불균등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였다.

한편, 분야별로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예산현액 규모와 연말 집행률을 비교해본 결과, 예산현액 규모가 큰 분야의 집행률은 9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분야의 경우 92%~99%대까지 다양하여 예산현액 규모와 연말 집행률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다. 집행형태에 따른 구분

본 연구에서는 집행형태에 따라 ① 반기별 집중집행형, ② 연중 균등집행형, ③ 일회성 집행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특성을 살펴보았다.

1) 반기별 집중집행형 사업

상반기 집행실적 규모가 하반기 집행실적의 규모보다 큰 상반기 집중집행형 사업의 세부사업수 비중은 약 65%로 전체 관리대상사업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규모는 80% 이상을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들에서 상반기 위주 집행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상반기 집중집행형 사업의 집행률은 상반기와 연말 시점 모두 세 그룹 중 가장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며, 2016년 이후부터 상반기 집중집행형 사업의 집행률뿐만 아니라 집행기여도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최근 정부의 조기집행 노력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하반기 집중집행형 사업은 연말에 가까워져서야 집행률이 상승하는 경향으로 이 그룹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집행실적이 11월까지도 전체 집행률에 많이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반기 집중집행형 사업과 상하반기 동일집행형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월별 계획규모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

3, 6, 9, 12월 집행률 수준을 근거로 구분한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의 세부사업수 비중은 전체 관리대상사업의 1/10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사업들의 예산현액 규모는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매우 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하였다.

교육, 일반·지방행정,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비목별로는 자치단체이전 비중이 9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예산현액 규모가 큰 상위 사업들로는 자치단체교부금과 의료급여경상보조, 그밖에 보육 및 교육지원, 창업지원, 주거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복지사업들이 해당하였다.

3) 일회성 집행형 사업

일회성 집행형 사업의 세부사업수는 전체 관리대상사업의 약 8%로, 이 사업들의 예산현액 규모는 전체의 약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들이 해당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일회성 집행이 일어나는 달은 주로 1~3월로 일회성 집행 사업 중 절반 이상이 여기에 해당하였으며, 대체로 과학기술, 교육,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환경 등 분야의 출연금 비중이 큰 사업들이 많았다. 한편, 하반기인 7월~12월 중에는 12월에 일회성 집행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는데, 일회성 집행을 12월에 하는 사업들은 교통및물류, 국방, 국토및지역개발 등 분야의 자치단체이전, 출자금, 유형자산 비중이 큰 국방 및 SOC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관리목표에 따른 구분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정관리점검회의의 중점관리 목표에 따라 ① 상반기에는 조기집행, ② 하반기에는 집행률 제고(이·불용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특성 분석하였다.

1) 상반기 조기집행형 사업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관리를 위해 상반기 집행실적이 계획 규모를 초과한 사업과 상반기 집행률이 평균을 초과한 사업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반기에 계획 수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업의 세부사업수 비중은 전체의 약 39%, 예산현액 규모 비중은 약 76%를 차지하였으며, 연말에도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 계획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업들은 대체로 하반기에도 비슷한 속도로 집행률이 상승한 반면, 상

반기에 계획 이하로 집행한 사업들은 11월까지 상대적으로 더딘 속도로 상승하다 12월이 되어서야 큰 폭 집행을 하여 평균 집행률 수준에 근접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기집행형 사업에는 교부금 및 교부세와 주로 사회복지, 국방, 농림수산, 과학기술, 교육,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의 자치단체이전, 연구개발출연금의 비목 비중이 큰 사업들이 많이 해당된다.

한편, 상반기에 평균 집행률 수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업의 비중은 약 46%로 계획 수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업들에 비해 조금 더 큰 비중을 보였으며, 예산 규모 비중은 약 67%를 차지하였다. 상반기 집행률은 68.7%로 전체 평균 61.4%에 비해 7.3%p 높으며, 그 외 사업들에 비해서는 22.3%p 높은 수준을 보였다. 상반기 평균 집행률 초과집행 사업들은 아닌 사업들에 비해 자치단체이전 비중이 매우 높은 교육과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구성 비중이 컸다.

2) 연말 집행부진형 사업

하반기 이·불용 최소화 목표 관리를 위해 연말 집행실적이 계획 규모에 미치지 못한 사업과 연말 집행률이 평균 미만인 사업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말까지 계획한 집행 규모만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의 세부사업수 비중은 전체의 약 58%로, 예산현액 규모 비중은 약 28% 수준이었다.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들은 대체로 상반기 이전에도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편이었으며, 특히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더 더딘 속도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다 12월에 큰 폭으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계획한 규모에 비해 집행실적이 미치지 못하여 전체 계획대비 집행 비율을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뜨린 대표적인 사업들로는 융자·출자·장려금 등 금융지원 사업과 군사시설 및 재난관리와 관련된 사업들로 융자금, 건설비, 유형자산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계획 규모 수준에 근사하게 집행하는 사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의 집행기여도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

였다.

한편, 연말 집행률이 평균 미만인 사업의 세부사업수 비중은 약 36%이고, 예산현액 규모 비중은 전체 규모의 약 16%에 해당하였다. 집행부진형 사업의 연말 집행률은 2013년과 2015년에는 50%대 수준으로 매우 부진하였고, 그 밖에는 대체로 80%대 전후 수준으로 다른 사업 집행률과의 격차가 크고 변동폭도 심했다. 월별 집행률 추이를 보면, 집행부진형 사업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기울기를 보이며 3월, 6월 12월을 중심으로 천천히 증가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업 집행률과의 격차는 하반기 이후 더 증가하여 10월에는 28%p까지 벌어졌다 이후 줄어드는 모습이다. 연말 집행률이 평균에 미치지 못한 사업들 중에서 특히 초과집행기여도가 매우 낮은 사업에는 주로 사회복지 분야의 주택 부문, 교통 및물류 분야의 항공·공항, 철도 부문, 국방 분야의 방위력개선, 전력유지 부문의 SOC 사업들이 해당하였는데, 건설비, 융자금, 유형자산, 자치단체이전, 민간이전 등의 비중이 큰 사업들이었으므로 나타났다.

2. 시사점

재정의 규모와 역할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재정조기집행,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 연말 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과 집행률이 대체로 양호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예산현액 규모가 큰 교부세 및 교부금, 의료급여경상보조, 주거 관련 용자지원, 양육·보육·교육 지원, 창·취업 지원 등 주요 민생안정 복지지출 사업은 상반기 위주로 연중 균등하게 집행이 이루어지며, 대체로 상반기 계획 규모와 전체 평균 집행률을 초과하여 집행실적을 달성함으로써 조기집행을 견인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체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의 경우 예산 규모가 작고 재정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다양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 관리대상사업 범위 조정 및 집중관리 필요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사업과 집중 점검·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846개의 사업들(세부사업 기준)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집행점검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업들이 관리대상이 된 기간은 단기에 불과하거나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관리의 지속성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 중에는 연중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교부세 및 급여성 재정지출 사업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2018년 기준 교부금 및 교부세 예산현액 규모는 약 95.6조원으로 전체 중앙정부 관리대상사업의 38.9%를 차지하였으며, 교육급여, 의료급여경상보조, 주거급여지원 등 급여성 재정지출 사업은 약 7조원 규모이다. 따라서 이처럼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어 상대적으로 집행관리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 교부세, 급여성 재정

지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또는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점검하고, 대신 적극적인 점검·관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특성별로 유형화하여 dBrain시스템을 통해 집중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는 조기집행률 제고를 위해 월별 계획 초과집행기여도 지표를 활용하여 상반기에 계획한 규모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 규모가 큰 사업들을 사전에 집중관리하고, 하반기에는 분야 및 소관별로 비슷한 예산 규모와 비목 구성을 갖는 사업들끼리 그룹화하여 월별 평균대비 집행기여도 낮은 사업 집중관리하거나 그 밖에 관리대상으로 처음 선정되었거나 관련 제도에 변화가 있는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집중관리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리대상사업 정보에 대한 이력관리가 필요하다.

나. 체계적인 실집행 관리 필요

분석 결과, 계획에 맞추어 적기집행 혹은 조기집행이 이루어진 사업들의 비목 구성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이전, 출연금 등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2018년 기준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의 자치단체이전과 출연금 비중은 각각 90.0%, 3.4%, 상반기 집중집행형 사업은 64.6%, 12.6%, 평균대비 조기집행 사업은 71.1%, 12.8%, 계획대비 조기집행 사업은 67.7%, 8.2%을 차지한다. 따라서 재정지출이 경제 활성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면 중앙정부 집행 후 일선 현장까지 자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집행 관리에 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실집행이란 중앙정부가 지자체, 출연기관에 자금을 교부한 이후 교부 받은 기관이 실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실집행이 실제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체감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부분의 관리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 재정당국은 자치단체·민간 보조·출연사업에 소요되는 주민의

견 수립,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 집행 절차를 현장점검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실행률을 높여나감과 동시에 e호조시스템(지방재정) 및 에듀파인(지방교육재정)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dBrain시스템의 실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하여 교부신청 내역, 교부금 결정 내역, 보조사업 예산신청 현황, 지자체 보조사업 매핑 현황, 집행실적 및 총괄 실적현황 등과 같은 상세한 현황이 실시간으로 조회 및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출연 및 민간보조 사업은 교부받은 사업에 대한 조회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자체시스템이 있는 경우 지출정보를 연계하고, 시스템이 없는 기관의 경우 직접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맞춤형 관리 필요

본고의 분석 결과, 민생안정 사업 중에서 공공임대, 행복주택출자,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등의 주거지원 사업과 고용창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지원 사업 등 일부는 상반기 집행이 부진하고 계획 및 평균 집행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의 주택 부문, 교통및물류 분야의 항공·공항, 철도 부문, 국방 분야의 방위력개선, 전력유지 부문 등 군시설 건설 및 장비 획득사업과 SOC 사업의 경우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는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연말 계획 규모와 전체 평균 집행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집행부진 사업들의 경우 사업 단계상 신규 사업에 해당, 사업 특성상 연말에만 집행이 가능, 발주, 계약 등의 집행 절차로 인한 집행지연 등 사업 특성마다 집행부진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재정집행의 관리를 위해서는 주요 집행부진 사업의 과거 집행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집행관리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신규 사업 첫해이거나 관련 정책이 변화하는

등의 이유로 한 해에만 집행이 부진한 사업 유형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유형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 및 행정절차 등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사업 착수 후 협의지연, 변경 등으로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거나,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집행부진, 법령·지침을 위반하는 집행 사례 등을 관리하고,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의 경우 사업집행 단계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 심의 및 검토절차 소요 등 사업추진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업 특성별로 행정절차의 소요기간을 최소화를 위한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dBrain시스템에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세부사업 관리자가 부진사유 유형, 상세 사유, 향후조치계획 입력, 관련자료 첨부 등을 통해 내역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라. 집행점검 결과와 예산편성 간 연계 강화

대체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의 경우 예산 규모가 작고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다양할 것으로 나타나 보다 체계적인 재정집행 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 집행점검 결과와 예산편성 간 연계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정당국은 연례적 집행부진사업이 집행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지 않을 시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과 연계하거나 예산성과금에 따른 재정개선 효과를 내년도 예산 요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본 분석에서 시도하는 바와 같이 주요 재정사업의 과거 집행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관리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반영하고, 향후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dBrain시스템을 통하여 이러한 주요 사업들의 집행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과거 집행정보에

대한 이력관리는 물론이고, 연중 재정집행계획을 수립·조정하는 기능, 재정집행실적 순위의 등록·조회 기능 등 여러가지 관리 방안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의 재정집행 대상이 되는 목/세목에 대한 집행점검대상별 기준정보를 설정·등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연도별로 각 부처 재정책임관이 예산/기금별, 중앙관서별, 공공기관별 집행실적 우수/부진 사업 또는 상세 유형별 대표 사업들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등 과거 집행점검 결과를 활용한 상세한 분석들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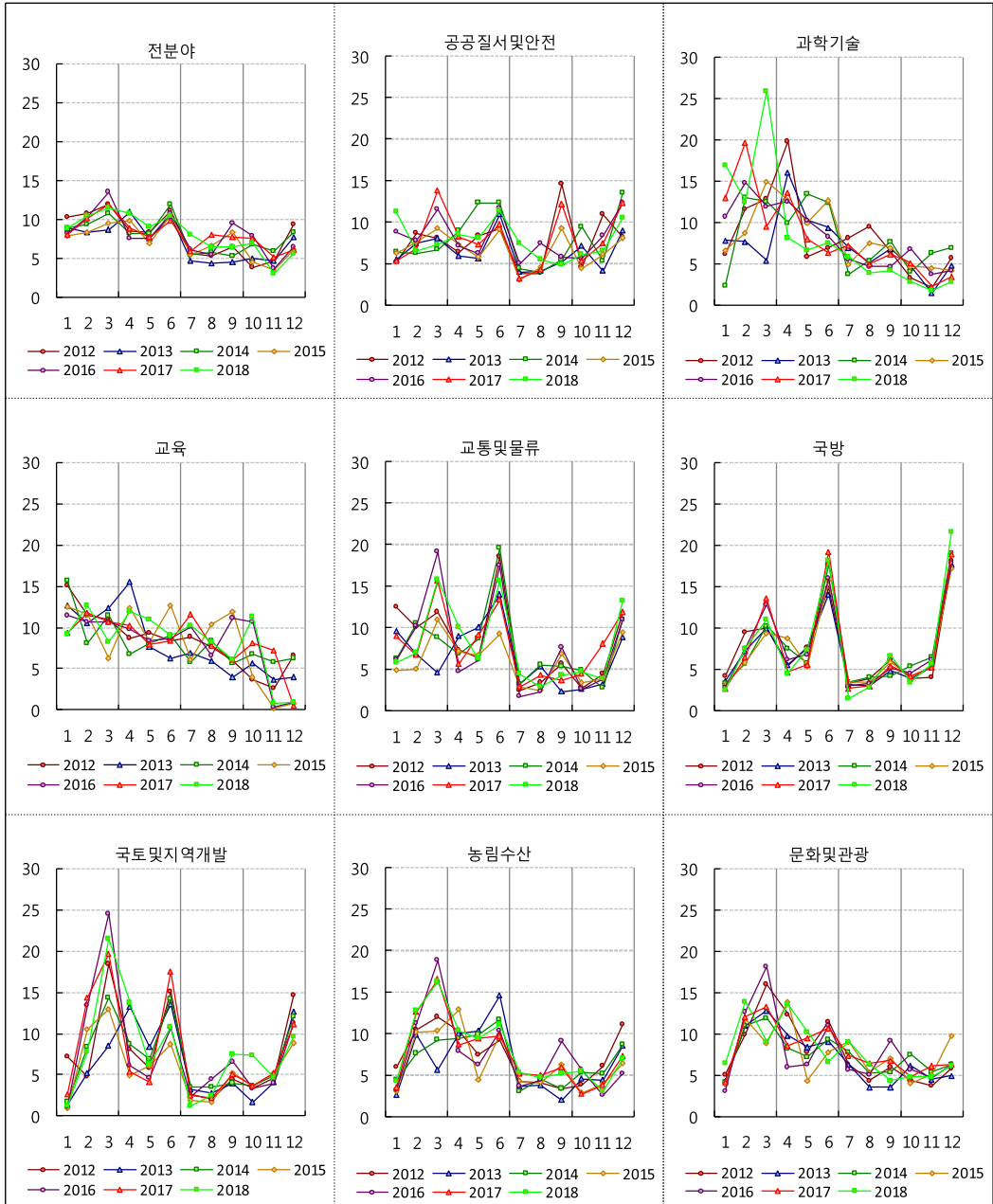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각 월호.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점검회의 보도자료. 각 월호.
- 국회예산정책처. (2014).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 국회예산정책처. (2019).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 박서정·문성암. (2010). “예산집행과정의 행태에 관한 연구: 경상운영예산 집행담당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4호. pp. 1091-1108.
- 윤기웅·김병규. (2016). “정책집행주체별 정책집행부진 원인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4호. pp. 97-118.
- 이성욱·윤석중. (201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관리회계학회. 「관리회계연구」 제13권 제2호. pp. 99-129.

〈부록 1〉

〈그림〉 분야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증감 추이(2012-18년)

(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부록 2〉

본 연구에서 각 유형별 사업의 집행실적이 전체 집행실적 달성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한 ‘집행기여도’의 개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집행률(R_E)을 예산현액 규모(B) 대비 집행실적 규모(E)의 비율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text{집행률}(R_E) = \frac{\text{집행실적 규모}(E)}{\text{예산현액 규모}(B)} \times 100 \dots\dots\dots (1)$$

A, B의 두 가지 유형의 그룹으로 나눌 경우, 각 그룹의 집행률 R_E^A 와 R_E^B 는 각각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R_E^A = \frac{E^A}{B^A} \times 100, R_E^B = \frac{E^B}{B^B} \times 100 \quad (\text{단, } E = E^A + E^B, B = B^A + B^B) \dots\dots\dots (2)$$

(2)식을 (1)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begin{aligned} R_E &= \frac{E^A + E^B}{B^A + B^B} \times 100 \\ &= \left\{ \frac{E^A}{B^A} \cdot \frac{B^A}{B^A + B^B} + \frac{E^B}{B^B} \cdot \frac{B^B}{B^A + B^B} \right\} \times 100 \\ &= R_E^A \cdot \frac{B^A}{B} + R_E^B \cdot \frac{B^B}{B} \dots\dots\dots (3) \end{aligned}$$

즉, 전체 관리대상사업의 집행률은 각 그룹별 집행률에 그 그룹의 예산현액 규모 비중을 곱해준 값의 합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각 그룹의 집행률이 실제로 전체 집행률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그룹의 집행률에 예산현액 규모 비중을 곱해준 값을 사용하면 되며, 본고에서는 이 지표를 집행기여도(C_E)라고 정의한다. (3)식에서 첫 번째 항이 A그룹의 집행기여도, 두 번째 항이 B그룹의 집행기여도에 해당하며, 각각을 C_E^A 와 C_E^B 라 하면 (3)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R_E = C_E^A + C_E^B \quad \left(\text{단, } C_E^A = R_E^A \times \frac{B^A}{B}, C_E^B = R_E^B \times \frac{B^B}{B} \right) \dots\dots\dots (4)$$

$$\text{전체 집행률(\%)} = A\text{그룹의 집행기여도}(\%p) + B\text{그룹의 집행기여도}(\%p)$$

또한 본고에서는 위에서 정의한 집행기여도를 직관적으로 해석하기 쉽도록 백분비로 나타내어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 지표를 집행기여율(R_C)이라고 표현하였다. 각 그룹별 집행기여율에 대한 설명 식은 다음과 같다.

$$R_C^A = \frac{C_E^A}{R_E} \times 100 \quad (A\text{그룹의 집행기여율}(\%) = \frac{A\text{그룹의 집행기여도}(\%p)}{\text{전체 집행률}(\%)} \times 100) \dots (5-1)$$

$$R_C^B = \frac{C_E^B}{R_E} \times 100 \quad (B\text{그룹의 집행기여율}(\%) = \frac{B\text{그룹의 집행기여도}(\%p)}{\text{전체 집행률}(\%)} \times 100) \dots (5-2)$$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

발 간 월 2020년 4월
발 행 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편 집 재정정보분석본부 재정분석기획부
발 행 처 한국재정정보원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디 자 인 (주)메이커뮤니케이션 Tel. 02-761-8340
I S B N 979-11-965521-9-0 93350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재정분석기획부 02-6908-8568
hyein@kpfis.or.kr



9 791196552190 93350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9 791196552190 93350